

현대정치연구

2023년 봄호 (제16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차례

개인의 빅 5(BIG-5)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도묘연 · 차현진	5
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길정아 · 성예진	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평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윤지성	89
한국의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주요 계열 정당에 미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박지선	119
『상서』(尙書) 속 혁명과 섭정의 정당화를 둘러싼 경합과 언어적 긴장 윤대식	151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홍태영	179

■ CONTENTS

Political Ideology,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Big 5) for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i>Do, Myo-Yuen · Cha, Hyun-Jin</i>	5
Which Democratic System Do Winners and Losers Prefer?: Voters' Perceptions of Party Conflict/Compromis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Gil, Jung-ah · Sung, Yaejin</i>	45
The Evaluation of Redistricting of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Districts: Focusing on Population Representation and Regional Representation <i>Yoon, Jisung</i>	89
A Preparatory Study of the Open Primaries' Long-Term Effects on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Park, Jisun</i>	119
Agonistic and Linguistic Tension over Justification of Revolution and Regency in Shang Shu <i>Youn, Dae Shik</i>	151
Formation of French Republican Model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Hong, Taiyoung</i>	179

개인의 빅 5(BIG-5)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도묘연 | 계명대학교**

차현진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Big 5)을 중심으로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참여동기로 설정하고, 참여동기와 외향성 및 개방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진보적 이념과 외향성 및 개방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외향성은 물질주의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가치관과 이념과 결합할 때만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에 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성격적 특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성격적 특성, 시위 참여, 가치관, 정치적 이념, 외향성, 개방성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4093484). 그리고 2022년 6월 30일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 정치적 이념, 그리고 성격적 특성(BIG-5)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시위 참여의 주요한 동기로 설정하고, 그 참여동기를 직접적 행동으로 이끄는 성격적 특성의 영향력을 환기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시위는 공과금 납부 거부, 파업 및 점거 활동, 서명 활동 등과 함께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의 한 유형이자 사회운동(social movement)과 같은 집합적 저항행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시위가 사회에 무질서를 야기하는 일탈적이고 아노미적 행동으로 규정되기도 했다(Gamson 1990). 그러나 시위가 점차 제도화 및 보편화됨에 따라 시위 또한 관습 정치의 일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Meyer and Tarrow 1998).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투표와 같은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시위의 일상화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고,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흐름을 심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도묘연 2022).

이처럼 시위가 보편적인 정치참여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에서 시위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확산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 및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 등을 원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 네트워크 관여도, 정치적 효능감, 신뢰, 그리고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 등을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해 왔다(도묘연 2021; 2022). 이러한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격적 특성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태와 연관된 변수임에도(Caprara and Vecchione 2013),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외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시위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 및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Anderson 2009; Gerber et al. 2010; Mondak et al. 2010 a; 2010b; Mondak and Halperin 2008; Weinschenk 2017;). 특히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은 시위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ondak et al. 2010b; Weinschenk 2017). 시위 참여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 비용에 덜 민감하여 시위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Cha 2016). 나아가 해외의 경우 전통적 요인과 개인적 성격을 결합하여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Brandstätter and Opp 2014; Cha 2016; Opp and Brandstätter 2010).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하상응 외 저자들(Ha 2019a; 2019b; Ha and Kim 2013; Ha et al. 2013)과 차현진(Cha 2016)의 연구 이외에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치참여 이론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되, 국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최근의 연구 경향에 부응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라는 참여동기가 실제 시위라는 행동으로 실제화되는데 성격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시위 참여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있어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투표 등의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와 비교하여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Corrigan-Brown 2012). 따라서 시위 참여를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와 더불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 낼 요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 연구는 다른 전통적 요인에 비해 특정한 민감한 시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형성된

집합적 경험인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시위 참여 동기로 설정한다. 물론 개인은 특정한 가치관 혹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 비용에 덜 민감한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면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참여 동기가 실제 시위 참여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성격적 특성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시위 참여에 미치는 통제변수 및 세 가지 요인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하여 구체화된다. 분석 대상은 2016-17년 촛불집회 이후의 시위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한국 시위 참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개인적 성격과 시위 참여에 대한 관심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외적으로 하상웅 외 저자들(Ha et al 2013)과 차현진(Cha 2016)은 개인적 성격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했으나, 인권시위 혹은 시위의 일상화가 심화된 2016-17년 촛불집회 이전의 시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가의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환기하는 동시에 촛불집회 이후 시위의 보편화 혹은 일상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II. 문헌 검토 및 가설 설정

1. 한국의 시위 참여 요인

일반적으로 개인의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인으로는 크게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네트워크 및 결사체, 정치적 효능감 및 신뢰, 가치와 이념 등을 들 수 있다(도묘연 2021; 2022). 이러한 요인들은 자원동원론에 기반을 둔 관점과 참여동기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네트워크 및 결사체 활동은 개인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무를 강조하는 자원동원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과 성별은 한국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변수이다. 선행 연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김기동·이정희 2017; 김대욱·이승중 2008; 김욱 2013; 도묘연 2021; 류태건 2013; 박찬욱 2005; 이양수 2006; 이혜인·홍준형 2013; 차현진 2022). 젊은 사람일수록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나 전일제 근무에 대한 책임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Wiltfang and McAdam 1991). 또한 성별과 시위 참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시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김기동·이정희 2017; 김대욱·이승중 2008; 박찬욱 2005;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여성이 남성보다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자원을 취득할 기회가 적다는 입장(McAdam 1992; Schlozman et al. 1994; Verba et al. 1997)과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역할이 달라 나타나는 정치 사회화의 결과라는 입장(Campbell et al. 1960; Dalton 2014; Lane 1959)으로 구분된다. 결과적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자원을 보유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조한 연구들 역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자원의 보유 여부가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 정보, 효능감 등의 시민적 정향이 발전하기 때문에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Verba and Nie 1972). 한국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위 참여에 적극적이었다(김기동·이정희 2017; 류태건 2013; 박찬욱 2005;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이혜인·홍준형 2013; 차현진 2022). 이는 정치적 지식이 가장 능동적인 형태의 정치참여인 시위 참여에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한 퍼트남(Putnam 2000, 35)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네트워크 혹은 결사체 역시 시위 참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자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운동 네트워크(장수찬 2005),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송경재 2014; Choi and Shin 2017), 결사체 활동(도묘연 2021; 2022), 조직의 관여 및 동원 경험(김대욱·이승중 2008; 김옥 2013; 박찬욱 2005)을 강조한다.

한편, 정치적 효능감, 신뢰, 가치관, 그리고 이념은 개인의 참여 동기로서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는 특정한 시기의 정치사회 행위자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시위 참여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 관점에서의 참여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이 한국의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나 정당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김대욱·이승중 2008; 류태건 2012; 주인석·이진석 2012),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한나 2016; 이혜인·홍준형 2013). 이는 각 연구가 분석한 시기와 그 시기에 개인이 평가하는 정부 및 정치사회 행위자가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효능감을 강조한 연구들은 개인이 스스로 정치과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인 내적 효능감이나 혹은 정부나 정부체제와 같은 외부의 대상이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인 외적 효능감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김욱 2013; 김한나 2016; 김혜정 2010; 류태건 2011; 장수찬 2005; 정한울·이곤수 2013). 그러나 신뢰와 유사하게 특정한 시기별 정치사회 행위자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적 및 내적 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신뢰와 달리 상대적으로 탈물질주의 혹은 물질주의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은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만하임(Mannheim 1952)의 이론을 차용한 잉글하트(Inglehart 1990)의 사회화 가설을 원용하면, 가치관은 특정한 생애주기 동안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위를 독려하는 참여 동기가 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잉글하트의 이론을 수용한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으로써 정치적 항의 활동 혹은 시위 참여 간의 친화성을 증명해왔다. 한국의 경우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정치적 효능감, 정치신뢰, 정치적 이념 등을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도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증명되어 왔다(어수영 2004; 조기숙·박혜윤 2008; Cho and Park 2019; 김욱 2010). 또한 최근에는 IMF 구제 금융 시대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성장기를 겪은 세대들이 물질주의 가치를 지속해서 가지되면서 물질주의의 가치관 역시 한국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도묘연 2022).

탈물질주의 및 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유사하게 정치적 이념 역시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총체(Erikson and Tedin 2003, 64)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참여동기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정치 이념과 한국의 시위 참여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보수적 성향보다는 진보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강경태 2005; 김기동·이정희 2017; 김대욱·이승중 2008; 김욱 2013; 도묘연 2021; 류태건 2011; 2013; 박찬욱

2005; 이혜인·홍준형 2013; 차현진 2022; Cha 2016). 그 배경으로는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사람보다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시위 활동 자체가 진보 진영의 레퍼토리의 일부로 고려되기도 하였다(Dalton et al. 2010).

2. 빅 5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정치심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때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s)이란 생각, 느낌, 행동의 지속된 행태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를 의미한다(McCrae and Costa 1990, 23). 정치심리학에서 성격의 다양한 측면은 빅 5 요인으로 측정 및 활용되어 왔다. 이는 성격의 5개 요인 모형(FFM: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을 기반으로 하며, 성격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동시에 광범위한 연구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Gosling et al. 2003: 506).

빅 5란 개인의 성격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 내 상반된 특질의 스펙트럼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빅 5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5개의 기본 특성으로 구성된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문화에 대한 흥미를 의미하고, 폐쇄성과 상반되는 특성이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질서를 추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개인의 경향을 의미한다. 외향성(extraversion)이란 다른 상황에서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을, 그리고 친화성(agreeableness)은 이타주의, 관대함, 충성심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감정과 자극을 통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30-31; John and Srivastava 1999, 121). 각 성격적 특성을 묘사한 표현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빅 5 성격적 특성의 구체적인 묘사

개방성	혁신적인,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성실성	근면한, 신뢰할 수 있는, 꼼꼼한
외향성	역동적인, 활동적인, 사교적인
친화성	친절한, 정직한, 솔직한
정서적 안정감	차분한, 참을성이 있는, 편안한

자료: Caprara and Vecchione(2013, 30-31)을 참고하여 작성

해외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빅 5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개방성과 외향성은 시위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방적인 사람들은 경제 및 사회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Gerber et al. 2010), 소셜 네트워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Mondak et al. 2010a), 시민조직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Ha 2019a). 특히 한국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Ha 2019b). 또한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관적 행복 지수(Ha and Kim 2013)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Ha 2019b)이 높았던 반면,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낮았다(Ha 2019b). 이 외에도 개방적인 사람은 자원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Bekkers 2005; Omoto et al. 2010). 개방성과 선거 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몬다크 외 저자들(Mondak et al. 2010a)은 투표참여를 비롯한 정당 후원과 다양한 선거 관련 활동에 개방적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개방성과 외향성은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과 달리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개방성은 한국에서의 인권시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Cha 2016; Ha et al. 2013). 아메리카 대륙의 2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와인센크(Weinschenk 2017)는 개방성이 24개국 중 가이아나(Guyana)의 시위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외향성은 미국, 캐나다 및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ndak et al. 2010b; Weinschenk 2017).

나아가 외향성은 제도적 정치참여보다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친화성이 높았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각종 정치 및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은 정치 활동과의 연계로도 이어진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향성은 선거와 관련한 캠페인 모임과 집회 등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반면, 투표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ondak and Halperin 2008; Mondak et al. 2010a).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정치 토론(Anderson 2009)과 청원 참여와 같은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Mondak and Halperin 2008).

반면, 정서적 안정성과 친화성 및 성실성은 대체로 시위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서적 안정성은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a 2016; Weinscheck 2017). 이러한 결과는 친화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등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친화성과 시위 참여의 부정적 영향은 검증되었다(Ha et al. 2013; Weinschenk 2017). 성실성의 경우는 시위 참여에 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국, 미국,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서는 시위 참여 가능성이 감소한 반면(Ha et al. 2013; Mondak et al. 2010b; Weinschenk 2017), 파나마에서는 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했다(Weinschenk 2017).

최근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성격적 특성과 다른 요인을 결합하여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Brandstätter and Opp 2014; Cha 2016; Opp and Brandstätter 2010). 이들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외향성이 정치 관심, 정치적 효능감, 정치 토론과 증재되어 시위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규명되었다(Gallego and Oberski 2011). 또한 개방성과 사회적 인센티브의 결합은 시위 참여 의향을 증가시킨 반면, 친화성과 사회적 인센티브의 결합은 시위 참여 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dstätter and Opp 2014; Opp and Brandstätter 2010). 특히 한국을 사례로 한 차현진(Cha 2016)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일수록 진보적 정향과 인권에 대한 지식 수준이 시위 참여를 확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인권시위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에서 성격적 특성과 이념 및 지식을 함께 고려한 초기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전통적 요인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위 참여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른 정치참여 방식과 달리 참여비용이 높은 시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3. 주요 가설

앞선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전통적 요인과 함께 대표적으로 개방성과 외향성이라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도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성격적 특성을 시위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는 동시에, 최근의 연구 경향에 부응하여 전통적 요인과 성격적 특성을 결합한 가설을 제시하여 시위 참여의 요인을 분석한다. 주요한 연구가설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축했다.

첫째, 장기적인 참여 동기라는 관점에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변수로 설정한다. 자원동원론에 기초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의향인 참여 동기에 초점을 둔다. 이 때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시

위 참여를 촉발하는 선제 조건인 공감을 불러내는 동시에 일정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고유의 속성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 요인과 구분되는 장기적인 참여 동기로 정의된다.

개인이 시위 참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단계별로 제시한 클랜더만스(Klandermans 1997)는 시위 참여의 선행조건으로 시위 주제에 대한 공감을 제시한다. 즉 시위 주제 및 목표에 대한 공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위한 동원 잠재력(mobilization potential)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시위에 참여하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여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두 요인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만하임(Mannheim 1952) 이론을 차용하여 탈물질주의 가치관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제시한 잉글하트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민감한 시기(impressionable year)”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Inglehart 1990). 정치적 이념 역시 가치관과 유사하게 한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적절한 질서와 그 질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총체를 의미한다(Erikson and Tedin 2003, 64)는 점에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자원동원론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이나 신뢰 역시 시위 참여 의지나 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효능감이나 신뢰는 상대적으로 내면화된 탈물질주의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념에 의해 혹은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사회 행위자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내면화된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시위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장기적인 참여 동기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참여 동기 중 정치적 이념은 진보적 정향에 초점을 두어 주요한 가설을 설정한다.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효과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안이다. 그 중에서도 진보적 정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보적 정향과 시위 참여의 친화성을 증명했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성향이 시위 참여와 맞닿아 있

다는 논의를 수용한 것이다.

시위(protest)는 시민들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비관습적인 방식의 집합적 정치참여 행동이다(Taylor and Dyke 2004: 263). 물론 이념(ideology)은 사회과학 분야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elusive)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McLellan 1986, 1), 설명 대상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측면인지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적(orthogonal)일 수 있다(Jost et al. 2009). 그럼에도 보수는 “체제 유지(system maintenance)”, “질서(order)”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높고, 진보는 “체제 변화(system change)”, “평등(equality)”, “연대 의식(solidarity)”, “시위(protest)”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높다(Fuchs and Klingemann 1990, 213-214). 이는 진보적 이념이 기존의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시위 참여와 친화성을 가진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셋째, 빅 5의 성격적 특성 중에는 개방성과 외향성을 중심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빅 5의 성격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시위 참여를 포함해 개인의 정치행태와 관련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방성과 외향성은 참여 동기인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을 실제 시위 참여로 이끄는 변수로 설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위 참여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위는 투표참여나 다른 유형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비교하여 높은 참여 비용이 요구되는 정치행동이며, 그 만큼 시위참여에는 더 많은 시간과 활동력이 요구된다(Corrigan-Brown 2012). 따라서 개인이 실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참여 동기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으로 이끄는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격적 특성은 시위 참여 동기를 가진 개인이 실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은 특성(traits), 욕구(needs), 가치(values), 사회적 태도(attitudes)와 같은 상이한 구성 요

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선호나 행동을 구체화한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23). 이들 구성 요소 가운데, 개인의 욕구와 가치는 개인 스스로의 관점과 삶에서 소중한 것에 관련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특성(traits)은 사람들의 습관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행태적인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시위 참여와 같은 행동이나 행태를 촉진하는 본질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외향성은 개념 정의 자체에서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선행연구 또한 외향성이 빅 5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시위 등의 정치참여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Weinschenk 2017).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흥미를 갖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개방성 역시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그 결과 개방적인 사람은 시위 참여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난 발상에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일 것이다. 따라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나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인 성격을 보일 경우 시위 참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참여동기로 설정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 그리고 개방성과 외향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은 시위 참여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인간의 행동과 연관된 성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시위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혹은 개방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가설 2]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혹은 개방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Ⅲ. 연구 설계와 측정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 의해 2020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다. 물론 온라인 조사는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해당 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성별, 나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례층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일정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종속변수인 시위 참여의 경우 촛불집회와 구별되는 일반 시위 참가를 묻는 설문 문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자료의 조사 시기를 고려할 때 촛불집회와 일반 시위 참여에 대한 응답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 가지 시위 참여를 구분하는 문항 설정은 기본적으로 촛불집회와 구별되는 일반 시위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문조사 자료는 분석을 위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당초 1,68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일반 시위 참여에 대한 문항은 “참가한 경우”,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시위 참여 여부에 초점

을 두기 때문에 시위 참여자와 비참여자 각각 352명과 8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¹⁾ 물론 “의사는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시위 참여자로 볼 수 없어 비참여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진짜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경우 비참여 집단의 특성이 과대 반영되거나 왜곡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치관, 정치적 이념,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두 가지 참여동기와 외향성 및 개방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가치관 변수인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세부 변수의 타당성 검증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시위 참여 집단 및 비참여 집단별로 나타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일반특성은 분산분석과 카이제곱(χ^2 -test)으로 검증하여 제시했다.

2. 분석 변수의 타당성 검증: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

연구 모형의 구축에 앞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세부 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잉글하트(Inglerhart 1990; 1997)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 이들은 잉글하트의 방식을 차용하여 설문 문항을 제시한 후 응답자들의 선택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가치관을 유형화하거나 혹은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를 정의하는 지수를

1) 분석대상 1,175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1명(18.8%), 부산 84명(7.2%), 대구 65명(5.5%), 인천 67명(5.7%), 광주 39명(3.3%), 대전 35명(3.0%), 울산 31명(2.6%), 경기 283명(24.1%), 강원 38명(3.2%), 충북 34명(2.9%), 충남 42명(3.6%), 전북 43명(3.7%), 전남 38명(3.2%), 경북 53명(4.5%), 경남 71명(6.0%), 제주 18명(1.5%), 세종 13명(1.1)이었다. 성별과 연령별 분포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안해 왔다(도묘연 2022). 따라서 두 가치관의 구성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생존에 필수적인 신체적 및 물질적 안전의 욕구로, 그리고 탈물질주의는 소속감, 애정, 존중, 자아실현, 권익옹호 등 욕구로 대변된다. 두 가지 가치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당초 잉글하트의 전통을 따르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변수의 목록(도묘연 2022; 정병기 2018; Cho and Park 2019)을 확정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차선택으로 크롬바흐 알파 분석을 통해 두 가지 가치관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세부변수의 타당성 검증 결과

구분	측정변수	평균	표준 편차	변수제거시 α 계수	전체 α 계수
물질주의	경제성장 달성과 경제안정	5.94	1.19	0.6828	0.7795
	국방비 등 방위력 증강	5.02	1.26	0.7710	
	국가 및 사회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 소탕	5.70	1.12	0.7018	
	물가상승 억제	5.48	1.17	0.7453	
탈 물질주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	4.85	1.05	0.7554	0.7957
	환경보호	5.52	1.19	0.7626	
	정부정책 결정에 국민참여 확대	5.37	1.12	0.7375	
	언론자유 보장	5.22	1.32	0.7833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5.11	1.15	0.7464	

*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3. 연구 모형

<표 2>의 가치관에 대한 신뢰성 분석에 기초하여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차관, 정치적 이념, 성격적 특성, 그리고 이들 세 변수의 상호작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구축했다. 종속변수인 시위 참여는 참가여부로 측정했다.

독립변수 중 성격적 특성은 빅 5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측정 방식과 변수를 활용했다(김지범 외 2019; Ha et al 2013; Cha 2016). 그리고 통제변수는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성별, 연령, 교육, 소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불만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효능감 및 신뢰를 추가했다. 이는 시위 참여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엘리트에 대한 불신에서 발화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모형1] 기본 모형

$$\ln y_j = \alpha + \sum_{i=1}^2 (\beta_i * m_i) + \sum_{i=1}^3 (\gamma_i * id_i) + \sum_{i=1}^5 (\delta_i * c_i) + \sum_{i=1}^4 (\epsilon_i * sc_i) + \sum_{i=1}^2 (\zeta_i * pc_i)$$

[모형2] 상호작용 모형

$$\ln y_j = \alpha + \sum_{i=1}^2 (\beta_i * m_i) + \sum_{i=1}^3 (\gamma_i * id_i) + \sum_{i=1}^5 (\delta_i * c_i) + \sum_{i=1}^4 (\epsilon_i * sc_i) + \sum_{i=1}^2 (\zeta_i * pc_i) + \sum_{i=1}^2 (\eta_i * c_i * m_i) + \sum_{i=1}^2 (\delta_i * c_i * pc_i)$$

여기서 y_j 는 j 시위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β_i 는 가치관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m_i 는 가치관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물질주의, 2=탈물질주의)

γ_i 는 이념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id_i 는 이념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주관적 이념, 2=보수정당지지, 3=진보정당지지)

δ_i 는 성격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c_i 는 성격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외향성, 2=개방성, 3=친화성, 4=성실성, 5=안정감)

ϵ_i 는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sc_i 는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성별, 2=연령, 3=학력, 4=소득)

ζ_i 는 정치적 불만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pc_i 는 정치적 불만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제도 신뢰 지향도, 2=외적 효능감 지향도)

η_i 는 성격과 가치관 상호작용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θ_i 는 성격과 주관적 이념 상호작용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α 는 상수항

위의 연구 모형에서 확인되듯이, 연구목적에 맞추어 실제 분석은 기본 모형과 상호작용이 전제된 경우로 구분하여 수행했다. [모형1]은 세 가지 차원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추론하는 기본 모형이다. 반면 [모형2]는 [모형1]에 더하여 독립변수 중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 정치적 이념 그리고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모형이다.

한편, 통제변수 중 정치적 불만 변수는 다시 개념화하여 구성하였다. 즉 제도 신뢰 지향도와 외적 효능감 지향도로 조작화한 것이다.²⁾ 이는 제도 및 사회 신뢰와 외적 및 내적 효능감이라는 세부 유형에 따라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

2) 제도 신뢰 지향도와 외적 효능감 지향도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부(-)로 추정되면 상대적으로 사회 신뢰와 내적 효능감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된다.

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했다(도묘연 2021). 나아가 분석 모형 상의 문제, 즉 외적 및 내적 효능감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분석 변수와 그 측정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변수의 정의와 척도

구분	분석변수		정의	척도
종속 변수	시위 참여		시위 참여(1)/(0)	명목
독립 변수	가치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표 2> 타당성 검증 결과 참조	7단계 리커트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	이념적 정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1진보, 6중도, 11보수)	11단계 리커트
		지지 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 정당 보수: 미래한국·우리공화(1)/기타(0) 진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정의(1)/(0)	명목
	성격적 특성	외향성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조용하다(역코딩)	7단계 리커트
		개방성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역코딩)	
친화성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역코딩)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 하다.		
성실성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못한다. 덤벙댄다(역코딩)		
	정서적 안정감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한다(역코딩)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		
통제 변수	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남(1)/여(0)	명목
		연령	18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재/졸, 4년대재/졸, 대학원 석사재/졸, 대학원 박사재/졸	

구분	분석변수		정의	척도
정치적 불만		소득	100만원 이하-1,000만원 이상 11개 구간	7단계 리커트
		제도 및 사회 신뢰 (제도 신뢰 지향도)	“대부분 공직자와 정치인은 신뢰할만함”;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임”(제도 신뢰 수준) (사회 신뢰 수준)	
		외적 및 내적 효능감 (외적 효능감 지향도)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 없음”;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음”(외적 효능감 수준) (내적 효능감 수준)	

IV. 실증 분석

1. 시위 참여 및 비참여 집단별 분석변수의 일반 특성

<표 4>은 시위 참여 집단(352명, 29.96%)과 비참여 집단(823명, 70.04%)별로 나타난 분석 변수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5.53)이 탈물질주의(5.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비참여 집단(5.18)에 비해 참여 집단(5.29)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시위 참여자들이 국가 및 지역 사회 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그리고 자기실현 및 표현의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은 양 집단 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위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경제 성장과 국방력 증대 및 국가 질서 유지와 같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이념의 경우 주관적 이념 평가에서는 참여 집단(5.12)이 비참여 집단(5.79)에 비해 진보적이었다. 또한 비참여 집단은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서 보수 정당(참 15.9%, 비 20.3%)에, 그리고 참가 집단은 진보 정당(참 69.3%, 비 47.5%)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면, 보수적이면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성격적 특성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외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외향성(참 3.99, 비 3.67), 개방성(참 4.41, 비 4.05), 성실성(참 4.85, 비 4.72)은 참여 집단에서 높게 확인된 반면, 친화성(참 4.36, 비 4.65)은 비참여 집단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위 참여자들이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에 흥미를 갖고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나아가 질서를 추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과 소득 및 학력에서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 18세-19세(참 4.3%, 비 1.8%) · 20대(참 19.9%, 비 14.8%) · 40대(참 26.4%, 비 20.9%)는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30대(참 17.9%, 비 18.1%) · 50대(참 19.9%, 비 23.9%) · 60대 이상(참 11.7%, 비 20.4)은 비참여율이 높았다. 학력에서는 초졸(참 0.0%, 비 0.1%) · 중졸(참 1.1%, 비 2.1%) · 고졸(참 12.8%, 비 21.5%) · 전문대재/졸(참 12.5%, 비 15.8%)의 경우 비참여율이, 4년대재/졸(참 60.5%, 비 50.9%) · 대학원석사재/졸(참 9.1% 비 7.1%) · 대학원박사재/졸(참 4.0%, 비 2.6%)은 참가율이 높았다.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참 1.7%, 비 6.9%) · 100-199만원 미만(참 5.4% 비 8.6%) · 200-299만원(참 16.2%, 비 16.9%) · 300-399만원(참 14.2%, 비 17.5%) · 700-799만원(참 6.5%, 비 7.9%) 구간에서는 비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400-499만원(참 14.8%, 비 14.7%) · 500-599만원(참 17.3%, 비 10.2%) · 600-699만원(참 9.1%, 비 8.0%) · 800-899만원(참 4.6%, 비 4.0%) · 900-999만원(참 3.1%, 비 1.0%) · 1,000만원 이상(참 7.1%, 비 4.3%) 구간에서는 참가율이 높았다. 이는 시위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18세

-19세와 20대 및 40대가 많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위 참여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넷째, 정치적 불만 변수 역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제도 신뢰 지향도(참 0.97, 비 0.89)는 참여 집단에서 높았던 반면, 외적 효능감 지향도(참 0.75, 비 0.86)는 비참여 집단에서 높았다. 따라서 시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평상시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높으나, 정부나 정치 체제가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다.

〈표 4〉 시위참가 및 비참여 집단별 분석변수의 일반특성

구분		전체 (n=1,175)	참여 (n=352)	비참여 (n=823)	χ^2 (df), prob./ F(prob.)	
가치관	물질주의	5.53	5.54	5.53	0.06(0.8106)	
	탈물질주의	5.21	5.29	5.18	3.95(0.0472)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	5.59	5.12	5.79	24.99(0.0001)	
	지지 정당	보수 정당 지지	223 (19.0)	56 (15.9)	167 (20.3)	$\chi^2=51.947$ (df=2), prob=0.0001
		진보 정당 지지	635 (54.0)	244 (69.3)	391 (47.5)	
		기타 정당 지지	317 (27.0)	52 (14.8)	265 (32.2)	
성격적 특성	외향성	3.77	3.99	3.67	17.02(0.0001)	
	개방성	4.16	4.41	4.05	29.19(0.0001)	
	친화성	4.56	4.36	4.65	25.78(0.0001)	
	성실성	4.76	4.85	4.72	3.96(0.0469)	
	정서적 안정감	4.17	4.19	4.17	0.08(0.7829)	
사회 경제적 요인	성 별	남	585(49.8)	189(53.7)	396(48.1)	$\chi^2=3.0669$ (df=1), prob=0.0799
		여	590(50.2)	163(46.3)	427(51.9)	
	연 령	18세-19세	30(2.6)	15(4.3)	15(1.8)	$\chi^2=25.3786$ (df=5) prob=0.0001
		20세-29세	192(16.3)	70(19.9)	122(14.8)	

구분		전체 (n=1,175)	참여 (n=352)	비참여 (n=823)	χ^2 (df), prob./ F(prob.)	
정치적 불만	30세-39세	212(18.0)	63(17.9)	149(18.1)		
	40세-49세	265(22.6)	93(26.4)	172(20.9)		
	50세-59세	267(22.7)	70(19.9)	197(23.9)		
	60세이상	209(17.8)	41(11.7)	168(20.4)		
	학력	초졸	1(0.1)	0(0.0)	1(0.1)	$\chi^2=20.6068(df=6)$ prob=0.0022
		중졸	21(1.8)	4(1.1)	17(2.1)	
		고졸	222(18.9)	45(12.8)	177(21.5)	
		전문대재/졸	174(14.8)	44(12.5)	130(15.8)	
		4년대재/졸	632(53.8)	213(60.5)	419(50.9)	
		대학원석사 재/졸	90(7.7)	32(9.1)	58(7.1)	
	대학원박사 재/졸	35(3.0)	14(4.0)	21(2.6)		
	소득	100만원 미만	63(5.4)	6(1.7)	57(6.9)	$\chi^2=39.8300$ (df=10), prob=0.0001
		100-199만원	90(7.7)	19(5.4)	71(8.6)	
		200-299만원	196(16.7)	57(16.2)	139(16.9)	
		300-399만원	194(16.5)	50(14.2)	144(17.5)	
		400-499만원	173(14.7)	52(14.8)	121(14.7)	
		500-599만원	145(12.3)	61(17.3)	84(10.2)	
		600-699만원	98(8.3)	32(9.1)	66(8.0)	
		700-799만원	88(7.5)	23(6.5)	65(7.9)	
800-899만원		49(4.2)	16(4.6)	33(4.0)		
900-999만원		19(1.6)	11(3.1)	8(1.0)		
1,000만원 이상	60(5.1)	25(7.1)	35(4.3)			
제도 신뢰 지향도	제도 신뢰 지향도	0.91	0.97	0.89	4.60(0.0322)	
	외적 효능감 지향도	0.82	0.75	0.86	13.74(0.0002)	

2. 가치관, 이념,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시위 참여에 미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독립변수인 가치관, 정치적 이념,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통제변수가 시위 참여 미친 순수한 영향력을 추론한 결과이다. [모형2]는 [모형1]에 더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념 및 빅 5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간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는 독립변수 중 주관적 이념($dy/dx=-0.0216$, $z=-3.00$), 진보 정당 지지($dy/dx=-0.1633$, $z=-3.60$), 친화성($dy/dx=-0.0613$, $z=-3.69$)의 부(-)의 영향력과 개방성($dy/dx=0.0299$, $z=2.04$)의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을 가질수록, 개방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dy/dx=0.0404$, $z=2.88$) 및 소득($dy/dx=0.0121$, $z=2.22$)의 정(+)의 영향력과 연령($dy/dx=-0.0354$, $z=-3.48$) 및 외적 효능감 지향도($dy/dx=-0.0729$, $z=-2.08$)의 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적 효능감보다는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이념 및 성격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모형2]의 경우에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개방성을 제외하고, [모형1]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친화성($dy/dx=-0.0614$, $z=-3.68$), 주관적 이념($dy/dx=-0.0991$, $z=-3.28$), 진보 정당 지지($dy/dx=-0.1604$, $z=3.54$)의 부(-)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dy/dx=-0.0336$, $z=-3.29$) 및 외적 효능감 지향도($dy/dx=-0.0727$, $z=-2.10$)의 부(-)의 영향력과 학력($dy/dx=0.0421$, $z=2.99$) 및 소득($dy/dx=0.0118$, $z=2.17$)의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은 [모형 2]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모형 1]에서 시위 참여

를 이끌었던 개방성의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인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향성×물질주의($dy/dx=0.0413$, $t=2.21$)의 정(+)의 영향력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다소 통계적 유의성이 낮기는 하지만 외향성×주관적 이념($dy/dx=0.0100$, $z=1.82$)의 정(+)의 영향력도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적 특성 중에서 외향성만이 가치관 및 주관적 이념과 결합하여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성격과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그 자체만으로 시위 참여를 이끌지 못했으나, 양자가 결합할 경우에는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외향적 성격은 보수적 이념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시위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표 5〉 가치관, 이념,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Coef.(z)	dy/dx	Coef.(z)	dy/dx
가치관	물질주의	0.0072 (0.06)	0.0014	-0.0653 (-0.13)	-0.0129
	탈물질주의	0.1199 (1.04)	0.0239	0.6837 (1.35)	0.1348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	-0.1082 (-3.00)**	-0.0216	-0.5025 (-3.28)**	-0.0991
	보수 정당 지지	-0.0699 (-0.34)	-0.0138	-0.0471 (-0.23)	-0.0092
	진보 정당 지지	-1.0114 (-3.60)**	-0.1633	-1.0087 (-3.54)**	-0.1604
성격적 특성	외향성	0.0652 (1.05)	0.0130	-0.5415 (-1.18)	-0.1068
	개방성	0.1496 (2.04)**	0.0299	0.8941 (1.46)	0.1763
	친화성	-0.3070 (-3.69)**	-0.0613	-0.3114 (-3.68)**	-0.0614
	성실성	0.0737 (0.99)	0.0147	0.0746 (1.00)	0.0147
	정서적 안정감	0.0214 (0.30)	0.0043	0.0094 (0.13)	0.0018
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0.1167 (0.83)	0.0233	0.0890 (0.63)	0.0176
	연령	-0.1771(-3.48)**	-0.0354	-0.1705 (-3.29)**	-0.0336
	학력	0.2024 (2.88)**	0.0404	0.2135 (2.99)**	0.0421
	소득	0.0608 (2.22)**	0.0121	0.0598 (2.17)**	0.0118

구분		[모형1]		[모형2]	
		Coef.(z)	dy/dx	Coef.(z)	dy/dx
정치적 불만	제도 신뢰 지향도	0.1998 (1.80)	0.0399	0.1892 (1.68)	0.0373
	외적 효능감 지향도	-0.3652 (-2.08)**	-0.0729	-0.3687 (-2.10)**	-0.0727
상호 작용	외향성×물질주의	-	-	0.2094 (2.21)**	0.0413
	개방성×물질주의	-	-	-0.1712 (-1.49)	-0.0338
	외향성×탈물질주의	-	-	-0.1574 (-1.62)	-0.0310
	개방성×탈물질주의	-	-	0.0078 (0.07)	0.0015
	외향성×주관적 이념	-	-	0.0507 (1.82)*	0.0100
	개방성×주관적 이념	-	-	0.0410 (1.24)	0.0081
_cons		-1.2853 (-1.65)	-	-1.9372 (-0.69)	-
Log likelihood (OBS)		-652.6498 (1175)		-644.24579 (1175)	
LR chi2(16)		129.38		146.19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0902		0.1019	

** $p < 0.05$, * $p < 0.1$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차이점도 규명되었다. 특히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라는 참여동기가 성격적 특성과 결합하여 시위 참여를 이끈다는 이 연구의 주요한 가설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그 자체로 시위 참여를 이끄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 양변인 분석에서는 시위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다변인 분석에서는 기본모형인 [모형1]과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모형2]에서도 두 가지 가치관의 영향력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특성, 급진적 불만(disaffected radicalism), 사회적 자본, 이념과의 경쟁 가설 속에서도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를 추동한다는 기존 연구(Cho and Park 2019)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를 촉진한다는 잉글하트와 그 지지자들의 논의에 대한 유효성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이념 중 진보적 정향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양변인 분석에서는 진보적 정향을 가지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다변인 분석에서는 주관적인 차원의 진보적 이념은 시위 참여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형1]과 [모형2]에서 확인되었듯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의 시위 참여가 많다는 기존연구 및 일반적 통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결과였다. 다만 설문조사가 문재인 정권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 정당 지지자들의 시위 참여가 낮다는 결과는 해석상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대감과 반감을 드러내는 시위에 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수 정권이 집권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진보 정당을 지지할수록 시위 참여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성격적 특성 중 개방성은 시위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끄는 변수였으나, 친화성은 시위 참여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양변인 분석에서 시위 참여자들은 개방적 성향을 띠었으나, 비참여자들은 친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변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방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형1]에서, 그리고 친화성의 부정적 영향은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빅 5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들이 폐쇄적인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동시에 인권시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반면, 이타주의적이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시위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Cha 2016; Ha et al. 2013; Weinschenk 2017). 동시에 그간 한국의 시위 참여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그 중에서 개방성이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 속에서도 시위 참여의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넷째, 외향성은 참여 동기로 설정된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과 결합할 경우에만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양변인 분석에서는 시위 참여자들이 외향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나, 다변인 분석에서 외향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과 상호작용 했을 때는 시위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따라서 외향성만이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라는 참여 동기를 실제 직접적 행동으로 유인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사회·정치적 활동과 가장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격 변수라는 논의(Weinschenk 2017)와 한국의 인권시위에서 외향성이 진보적 정향과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결합되어 시위 참여를 확대한다는 기존 연구(Cha 2016)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외향성이 가치관 및 이념과 결합되는 양상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외향성은 탈물질주의보다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합되어 시위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즉 경제발전, 방위력 증가, 범죄 소탕 등의 신체적 및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 자체로는 시위 참여를 촉진하지 못하지만, 높은 연령과 소득 및 결사체 활동 등의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 참여를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도모연 2022). 즉 한국 사회에서 물질주의 가치관 역시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잠재된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넘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복지 제도의 확장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탈물질주의가 확산되었던 시대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 및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21세기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정병기 2018, 202-203).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주요한 가설 중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는 주장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외향성은 진보적 이념보다는 보수적 이념과 결합되어 시위 참여를 추동하고 있었다. [모형1]과 [모형2]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진보적 이념은 시위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외향성과 상호작용이 고려된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면서도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향성에 의해 주관적 이념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는 가설은 반대의 결과로 귀결되었다.

다섯째, 시위 참여의 전통적 요인으로 알려진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그리고 내적 효능감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이는 한국의 시위는 젊은 층이 주도하며, 정부나 정치 체제가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지각이 높을수록 시위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교육과 소득의 영향은 정치적 지식과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시위도 서구처럼 중산층이 주도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 이념, 그리고 성격적 특성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러한 시도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주관적 이념이 다른 전통적 요인에 비해 시위 참여의 주요한 동기가 되며, 성격적 특성은 그 참여동기를 실제 시위 참여로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개인의 성격이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한국의 시위 참여 연구에서 성격적 특성을 소홀히 다루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및 진보적 이념은 그 자체로 시위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진보 정당 지지와 친화성은 시위 참여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둘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개인의 성격 중 외향성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참여 동기로서 가치관과 이념을 실제 직접적 행동으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낮은 연령과 높은 교육 및 소득 수준, 그리고 외적 효능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적 효능감은 시위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변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시위 참여의 직접적인 요인은 가치관보다는 주관적 이념과 개방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의 영향이 더 강하며, 특히 외향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 결합하여 시위처럼 높은 참여비용이 요구되는 직접적 행동을 이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도 서구처럼 시위가 관습정치的一部分이 되는 운동사회(Meyer and Tarrow 1998)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위의 일상화가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흐름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였던 시위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도묘연 2022).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시위는 시민들이 항의를 표출하는 일탈적인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정치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운동사회의 전환이 뚜렷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내에서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심리의 영향력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의 경우는 개인의 빅 5 성격이 투표참여를 포함한 시위, 청원, 정치 토론 등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활동, 결사체와 같은 네트워크 활동의 관여도, 이념 및 정치적 신뢰 등과 같은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구조와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가치관과 태도와 같은 개인 수준의 요인을 중심으로 시위 참여 요인을 분석했으나,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 시위 참여에서도 개인의 성격적 특성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향후 시위를 포함한 제도적 및 비제도적 정치참여 연구에서 정치심리 연구와 갈등의 정치(contentious politics) 연구를 연결시키는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의 촛불집회와 일반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진보적 이념과 잉글하트의 논의에 천착해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향적 성격이 결합될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은 시위 참여를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보수적 이념과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분단이라는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정을 바라는 대중의 욕구 또한 시위 참여의 잠재적인 동기로 유효하며, 외향성이 실제 직접적 행동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촛불집회

에 맞물로 진행된 보수 지향의 태극기 집회를 경험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중의 요구를 광장이나 거리에서 표출하는 계기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모형과 자료의 제약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자료 수집의 시점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된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촛불집회와 일반 시위 참여를 구분하는 측정 문항을 제시하는 노력은 기울였다. 그럼에도 향후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주장을 다시금 검증하여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태. 2005. “부산시민 정치참여 수준 및 구조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5집 3호, 227-248.
- 김기동 · 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권 2호, 5-39.
- 김대욱 · 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권 4호, 43-62.
- 김육. 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거시적 변화에 따른 미시적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33-59.
- 김육.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권 2호, 27-59.
- 김지범 · 강정환 · 김석호 외.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81-110.
-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3호, 83-104.
- 도묘연. 2021.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93-125.
- 도묘연. 2022. “한국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5권 1호, 35-71.
- 류태건.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집 3호, 383-416.
- 류태건. 2012. “정치참여와 정치신뢰: 그 유형의 다양성과 관계성.” 『21세기정치학회보』 22집 1호, 273-308.
- 류태건. 2013. “한국사회 정치향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3집 2호, 47-73.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 정치연구』 14권 1호, 147-193.
- 송경재.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는 참여적인가?: 미국의 정치참여 유형과 SNS.” 『한국과국제정치』 30집 3호, 59-94.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193-214.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25-43.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 287-313.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집 3호, 791-820.
- 장수찬. 2005. “개인의 네트워크 자원과 정치참여 수준 -대전지역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4권 1호, 141-171.
- 정병기. 2018. “68혁명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운동양상의 변화와 의미.” 정병기·도묘연·김찬우. 『2016-17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민주화, 그 성격과 의미』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5-225.
- 정한울·이근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권 1호, 211-243.
- 조기숙, 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 주인석·이진석. 2012. “반(反)정당감정의 기원과 정치참여행태: 부산, 광주광역시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5집 1호, 147-176.
- 차현진. 2022. “정치적 이념과 한국 시위 참여자의 변화: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부와의 이념 거리를 중심으로.” 『OUGHTOPIA』 36권 3호, 137-177.
- Anderson, M.R. 2009. “Beyond Membership: A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Behavior* 31(4): 603-627.
- Bekkers, Ren. 2005.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Relations with Resources,

- Personality, and Political Values.” *Political Psychology* 26(3): 439-454.
- Brandstätter, Hermann and Karl-Dieter Opp. 2014. “Personality Traits (“Big Five”) and the Propensity to Political Protest: Alternative Models. *Political Psychology* 35(4): 515-537.
- Campbell, Angus, Peter E. Converse, William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aprara, Gian Vittorio and Michele Vecchione. 2013. “Personality Approaches to Political Behavior.” Leonie Huddy, David O. Sears, & Jack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23-58.
- Cha, Hyun-Jin. 2016. “Unexpected Combination: Personality Traits and Motivating Factors for Human Rights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3(2): 17-37.
- Cho, Kisuk and Hye Yun Park. 2019. “Who Protest and Why?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Civic Activism Since 2000.” *Korea Observer* 50(4): 535-563.
- Choi, Doo-Hun and Dong-Hee Shin. 2017. “A Dialectic Perspective o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and Civic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2): 151-166.
- Corrigall-Brown, Catherine. 2012. *Patterns of Protest: Trajectories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Alix Van Sickle, and Steven Weldon. 2010. “The Individual-Institutional Nexus of Protest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51-73.
- Dalton, Russell. 2014.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Sixth Edition. Los Angeles: SAGE, CQ Press.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03. *American Public Opinion*. New York: Longman. 6th ed.

- Fuchs, Dieter and Hans-Dieter Klingemann. 1990. "The Left-Right Schema." M. Kent Jennings and Jan W. van Deth, eds. *Continuities in Political 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olitical Orientations in Three Western Democracies*, Berlin: Walter de Gruyter. pp.203-234.
- Gallego Aina and Daniel Oberski. 2011. "Person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on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33: 1-27.
- Gamson, William A. 1990.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Gerber, Alan S., Gregory A. Huber, David Doherty, Conor M. Dowling, and Shang E. Ha. 2010. "Person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Issue Domains and Political Contex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111-133.
- Gosling, Samuel D., Peter J. Rentfrow, and William B. Swann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Ha, Shang E. 2019a. "Personality Traits and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4): 585-607.
- Ha, Shang E. 2019b. "Personality Correlates of Political Support: Evidence from South Korea."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7(4): 207-225.
- Ha, Shang E. & Seokho Kim. 2013.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South Korea." *Social Indicator Research* 111: 341-359.
- Ha, Shang E., Seokho, Kim, and Se Hee Jo. 2013.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34(4): 511-532.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 Oliver P. and Sanjay Srivastava.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Lawrence A. Pervin and Oliver

-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102-138.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 Klandermans, Bert.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Protest*.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Lane, Robert E. 1959. *Political Life: Why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Kecskemeti, Paul, eds. *Karl Mannheim: Essays*. Routledge pp. 276-322.
- McAdam, Doug. 1992. "Gender as a Mediator of the Activist Experience: The Case of Freedom Summ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5): 1211-1240.
- McCrae, Robert. R., and Paul T Costa.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NY: Guilford.
- McLellan, David. 1986. *Ide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Mondak, Jeffery and Karen D Halperin 2008.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Politic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335-362.
- Mondak, Jeffery J., Matthew V. Hibbing, Damarys Canache, Mitchell A. Seligson, and Mary R. Anderson. 2010a. "Personality and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Trait Effects o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85-110.
- Mondak, Jeffery J., Damarys Canache, Mitchell A. Seligson, and Matthew V. Hibbing.

- 2010b. "The Participatory Personalit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211-221.
- Omoto, Allen M., Mark Snyder, and Justin D. Hackett. 2010. "Personality and Motivational Antecedents of Activism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6): 1703-1734.
- Opp, Karl-Dieter and Hermann Brandstätter. 2010. "Political Protest and Personality Traits: A Neglected Link." *Mobilization* 15(3): 323-346.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chlozman, Kay Lehman, Nancy Burns and Sidney Verba.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963-990.
- Taylor, Verta and Nella Van Dyke. 2004. "Get Up, Stand Up': Tactical Repertoires of Social Movements."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 Malden and Oxford: Blackwell. pp.262-293.
- Verba, Sidney, Nancy Burns, and Kay Lehman Schlozman. 1997. "Knowing and Caring About Politics: Gender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Journal of Politics* 59(4): 1051-107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inschenk, Aaron C. 2017.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Evidence from 24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98(5): 1406-1421.
- Wiltfang, Gregory L. and Doug McAdam. 1991. "The Costs and Risks of Social Activism: A Study of Sanctuary Movement Activism." *Social Forces* 69(4): 987-1010.

Political Ideology,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Big 5) for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Do, Myo-Yuen | Keimyung University

Cha, Hyun-Jin |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test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personal values, political ideology, and personality traits (Big 5).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s materialistic and post-materialistic values, as well as political ideology, as the major motivating factors for protest participation. Furthermore, individuals having high levels of values or liberal ideologi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otests when they are extraverted or open to new experienc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iberal ideology, extraversion, and openness are direct factors that influence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However, the direct impact of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values on protest participation has not been confirmed. In addition, extraversion is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on protest participation by interacting with materialistic values and conservative ide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sonality traits, which have not been considered significant factors in affecting Korean protest participation thus far, can significantly influence an individual's protest participation.

Key Words | Protest Participation, Personality Traits(Big 5), Political Ideology, Values, Extraversion, Openness

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정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길정아 | 고려대학교**

성예진 |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상이한 선호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두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분석의 결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14년의 정치적 환경하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정당 간의 갈등보다 타협을 인식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간의 관계를 갈등보다 타협적이라고 인식하면 이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한 반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항상 규범적으로 정당 간의 타협과 합의제적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민주주의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파적 유권자들의 승자-패자 지위에 따라 이들이 상정하는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제어 | 민주주의 만족도, 민주주의 평가, 정당일체감, 정당 간 갈등/타협, 승자-패자, 다수제-합의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3091302).

** 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박사수로 (교신저자)

I. 서론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혹은 믿음은 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담보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democracy)라는 정치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들을 검증해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연관된다.

이러한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표성 혹은 책임성 등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 혹은 경제적 성과를 비롯한 체제의 성과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한 가운데, 다수의 연구들이 가치의 실현보다 성과적 측면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기 쉬운 것에 반해, 민주적 가치의 실현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을 형성할 것이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 체계에 주목하는 연구들 또한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일례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한 경우(Aarts and Thomassen 2008; Farrell and McAllister 2006; Listhaug et al. 2009; McAllister 2005), 법치와 규제의 효율성 및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들이 마련된 경우(Wagner et al. 2009),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영호 외 2013), 바람직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체계와 실제 제도 운영의 조응성(congruence; 강신구 2012) 등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요 주체인 정당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의 방식에 주목한다. 일찍이 레이프하트(Lijphart 1999)는 대의민주주의를 다수제적 제도와 합의제적

제도로 구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정치 세력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지는 형태의 다수제적 제도와 소수 세력의 의견 또한 정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상정하는 합의제적 제도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는 합의제적 제도를 지닌 국가에서는 선거에서 패한 정당을 선택/지지하는 유권자들, 즉 패자(losers)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상실하지는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소수당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다수제에서보다 합의제에서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강신구(2012; 2019)는 시민들이 이러한 합의제적 관행을 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족하는 시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가진 합의제적 가치 체계와 실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다수제적 제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임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은 소수당의 입장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그리고 시민들은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을 선호한다는 관점을 강조해 왔다.

한편,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이 상이한 선호를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식에 대한 선호가 근본적인 가치인지에 대해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당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승리한 정당과 패한 정당을 양산하고, 이에 따라 대중들에게서도 승자(winner)와 패자(loser)를 나누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승자와 패자 중 어느 지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도 운영의 성과 획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지는 집권당 혹은 다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치권에서의 타협을 선호할 별다른 동기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은 주로 집권 다수당의 관철과 소수 야당의 방어를 통해 형성되는데, 다수결제도 하에서 정치적 갈등은 소수 야당의

무리한 방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뿐, 이러한 갈등과 교착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기 동안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적 정향이 의사결정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집권 다수당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야당 혹은 소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갈등은 집권 다수당이 소수 야당과의 타협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국을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해서만 소수 야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정당 간의 타협을 현저하게 선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위가 뒤바뀔에 따라 유권자들의 승자-패자 지위가 바뀌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선호 또한 유동적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정당 간의 타협을 선호한다고 하는 규범적인 선호의 표출과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당파적 선호의 내재가 유권자들에게 공존한다는 것을 밝힌 최준영 외(2019)와 하브리지 외(Harbridge et al. 2014)의 발견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정당이 집권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4년과 2020년의 설문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승자-패자의 지위와 정당 간의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만족도에 어떠한 조건적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들을 얻을 수 있다면, 정당 간의 상호작용과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서로 다른 선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규범적인 관점을 넘어 당파적 유권자들이 지니는 정치적 고려를 밝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1. 민주주의 만족도: 개념과 결정요인

민주주의의 심화는 제도의 도입과 개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일반 대중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면 침식·쇠퇴하고 불안정해지기 쉽다(Booth and Seligson 2009; Claassen 2020; Diamond 1999; Easton 1965; Inglehart and Welzel 2005; Lipset 1959).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가장 알맞거나 바람직한 제도라는 믿음”이며(Lipset 1959, 8),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서도 그러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Linz and Stepan 1996, 6).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democratic support)와 연관된 핵심적인 변수가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절차와 결과에 대한 평가인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with democracy)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민주주의 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질 수 있고,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협할 수 있다(Norris 2011; van Ham et al. 2017). 예를 들어, 최근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적 성향을 추구하는 정당과 리더가 출현하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축적에 따른 체제 정당성 위기(legitimacy crisis)와 무관하지 않다(Foa et al. 2020; Weatherford 1992).

선행 연구들은 민주주의 만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중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평가의 준거는 민주주의 제도나 규범 그 자체인가, 아니면 제도의 성과나 개별적인 정부·행위자인가?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in-principle)’에 대한 지지보다는 ‘실제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in-practice)’, 즉 체제가 운영되는 방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 높이 연관되는 경향을 보였다(Dalton 2004; Linde and Ekman 2003; Norris 1999). 그러나 이러한 성과적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형성할 것임에 반해, 민주적 가치의 실현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이므로, 체제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 체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렇듯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각도에서 검토되었는데, 민주주의가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체제의 도구적인(instrumental) 성과 등이 유효한 요인으로서 논의되었다. 우선, 민주주의의 제도나 규범의 도입과 그 운영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정치제도는 대표성과 책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이거나 유권자 선호를 반영하는 선호투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Aarts and Thomassen 2008; Farrell and McAllister 2006; Listhaug et al. 2009; McAllister 2005). 또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경우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낮았다(Bernauer and Vatter 2012; Frey and Stutzer 2000, 2001). 대표성의 차원에서, 정부의 당파성도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은 집권 정당의 이념이 자신의 이념과 조응할 때(congruent) 민주주의에 만족을 느꼈지만(Ferland 2021), 정당 간 정책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Ridge 2022). 선거제도 이외에도 법치, 효율적인 규제, 낮은 부패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들의 질적 수준이 높을 때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Wagner et al. 2009). 한국 사례의 경우, 조영호 외(2013)는 선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 이론(theories of procedural justice)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체제의 성과 차원에서는,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결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실업, 경제성장,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적인 경제 변수가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Armingeon and Guthmann 2014; Curini et al. 2012; Quaranta and Martini 2016; 2017; Wagner et al. 2009), 개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Curini et al. 2012; Farrell and McAllister 2006). 강우진(Kang 2015)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복지체제에 대한 불만이 민주주의에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관료제의 운영과 같이 정부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긍정적일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oräng et al. 2017; Dahlberg and Holmberg 2014).

한편, 본 연구는 주요 정당 간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구체적으로는 집권당/야당 혹은 다수당/소수당 사이의 갈등 또는 타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정치에서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가려는 집권 세력과 그러한 주도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반대 세력 간의 정파적인 경쟁은 민주주의 작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제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파 간 갈등 양상은 유권자-정부 간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정부 운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정책 과정에서 의제가 제시되고 수렴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평가의 대상이 되어, 민주주의 작동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규범과 원리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체계가 민주주의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관점과도 연계된다.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의 세계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Schattschneider 1960). 정치사회에서의 갈등 해소 과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가기 위한 조정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파적 갈등도 민주적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갈등의 내용과 양태일 것이다. 당파 간 지속되는 갈등이 시민들의 이익과 괴리되어 있거나 생산적이지 못하다면, 정당 갈등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에게 피로감과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무언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설문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서 정치권의 여야 갈등을 지목하였고(서지민 2020),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야의 상호존중과 협치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었다(송채경화 2023). 여야 갈등이 정책보다는 정당 간의 권력다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집권 세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반대 세력의 강경한 반대 구도 속에서 절차의 편법적인 활용이나 물리력을 동원한 충돌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파적 갈등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정당간 갈등이 악화되고 정파적,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파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은 의회에 대한 신뢰(trust in congress) 혹은 제도 자체에 대한 지지(institutional approval)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Durr et al. 1997; Harbridge and Malhotra 2011; Jones 2015; Ramirez 2009). 여야 정당 경쟁의 정치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가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낮은 상황은 정치과정에 대한 높은 피로도와 불만족을 보여준다(손선희 2022; 이가영 2018). 대의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가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Citrin and Stoker 2018), 여야 경쟁의 주축을 이루는 주요 세력들 간의 갈등이 격심하다는 인식이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이어지고, 대의민주주의의 운영방식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연결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야 정파 사이의 협력이 요구되어 왔고, 시민들도 갈등보다는 타협을 선호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당 간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승자-패자의 선호

민주주의의 정권 교체는 주기적인 선거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된다(Przeworski 1991, 10).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치적 경쟁의 패자도 결과에 동의하고 순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 마을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의 조건은 민주적인 선거 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패자의 수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Linz and Stepan 1996; Przeworski 1991). 패자가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의 결과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경쟁 기회가 있음을 수용할 때,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패자들이 그러한 선거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losers's consent)은 주어진 임기 동안 민주주의가 승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용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도는 그들이 승자인지 패자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희민 외 2017; 박종민 2013; 이현출·김민재 2021; 조영호 외 2013; Anderson and Guillory 1997; Anderson and LoTempio 2002; Blais and Gélinau 2007; Curini et al. 2012; Singh et al. 2012). 승리한 집단은 민주주의 제도가 자신들의 선호를 잘 대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패배한 집단은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집약하고 대표하는 방식은 다수제 모델과 합의제 모델로 나누어질 수 있다(Lijphart 1999). 다수제와 합의제는 “누가 통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조율과 의사결정을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개념화한 제도이다. 이들은 정치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대하는 방식과 권력의 집중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앤더슨과 길로리(Anderson and Guillory 1997)는 이러한 레이프하트(Lijphart 1999)의 논의를 승

자-패자의 지위와 민주주의 만족도의 연관성에 적용하였다. 먼저, 그들은 선거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민주주의 운영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선거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게 되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주요 반대당을 선택한 유권자들보다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승자-패자의 차이는 합의제적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보다 다수제적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모델에 기반한 정치 체제가 다수제적인지가 합의제적인지의 여부는 승자와 패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적인(winner-take-all) 특성을 지닌 다수제보다, 다수의 최대화(maximization of majority)를 지향하는 합의제에서 패자의 의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하여 승자-패자간의 민주주의 만족도 격차는 다수제에서보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줄어들게 된다(Anderson and Guillory 1997; Bernauer and Vatter 2012; Singh 2014).

제도의 성과와 민주주의 만족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승자-패자의 만족도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과 자신의 선호하는 정책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Anderson et al. 2005). 승자의 만족도가 합의제보다 다수제에서 더 높아지는 이유는, 다수제에서 정책적으로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심리적으로는 다수의 승리가 패자와 ‘공유되지 않는’ 단독적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ingh 2014). 이러한 논리에서 합의제의 협력적인 의사과정은 오히려 승자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패자로서는 자신의 의견이 대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합의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곧 승자-패자라는 정치적 지위에 따라 선호하는 민주주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당파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신구(2012)의 연구는 민주주의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에 따라 실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합의제적인 정치과정을 원하는데 정치제도가 다수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험적 발견들은 민주주의의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와 평가가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먼저, 길정아·하상웅(2019)의 연구는 여야 갈등에 대한 인식이 표면적으로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낮출지라도, 그 이면에는 상대 정당에게만 갈등의 책임을 돌리는 당파적인 귀인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브리지 외(Harbridge et al. 2014)와 최준영 외(2019)의 연구 결과는 유권자들이 초당파적인 의사결정을 바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을 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파적 유권자들은 정당 간의 갈등의 원인을 서로 상대 정당이 양보와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 즉 서로 집권 다수당의 관철과 소수 야당의 무리한 방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정당 간의 관계양상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나아가, 승자-패자의 지위에 관한 논의를 더하면, 타협은 패자의 입장에서만 선호될 뿐 승자의 경우에는 갈등을 지양하고 타협을 해야 할 명확한 이유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승자-패자,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만족도의 논의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국회의 구성과 입법과정에서 다수제와 합의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우리 국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이다(곽진영 외 2009). 일반적으로, 한국 국회의 제도로서 다수제보다 합의제적인 제도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선호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박찬표 2016).¹⁾ 반면, 정당 갈등과 입법교착이 합의제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1) 한국 국회의 다수제와 합의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박찬표(2016)에 따르면, 의사규칙의 다수제는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이고 합의제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의 국회 의사절차 변화는 합의제를 지향하여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다수제적 절차보다 관행으로서의 합의제

주장도 있다(박용수 2020). 어떠한 성격의 의사결정과정이 대의민주주의에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분한 논의 속에서, 본 연구는 정치과정의 성격에 대한 선호의 당파적 특성에 주목한다.

다음은 집권 다수당 지지자들(승자)과 소수 야당 지지자들(패자)이 선호하는 의사 결정의 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국회 총 의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의회 내 모든 의사결정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의 여러 절차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정당 간 타협을 유도하는 합의제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지만, 의석수의 구성으로 인해 다수제적인 정치적 환경이 강화된 것이었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행정부)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원하는 정책을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다수제적인 제도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그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인 제13대 국회부터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였으며, 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강성휘 2020). 그러나 21대 국회의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의 관행과는 다르게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고자 하였다.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여야 간의 타협을 주장하는 태도가 부딪히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박준석 2020).

이러한 정당 간 갈등을 대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는 승자와 패자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0.7%의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상

적 절차가 더 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선거 결과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방식에서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의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도 있겠지만,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위원장 독식을 잘못된 일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응답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는 74.3%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2.6%는 오히려 야당 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이경태 2020; 한주홍 2020).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여야 협력이 요원해진 상황에서 타협을 원했던 것은 패자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었고, 승자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수당의 의사를 관철하기를 원했다. 정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력한다면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타협을 고려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김병훈 2020).

흥미로운 점은, 다수제적인 혹은 합의제적인 방식에 대한 선호가 두 정당의 지지자들이 가진 고정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다수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논의로서 등장하는 “다수의 횡포” 논리는 어느 계열의 정당이든 상관없이 패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승자의 다수제 방식에 대한 우호적인 방어는 반복되어 온 구도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2008년에 집권당이던 원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성연철 2008). 만약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여 국민의힘 단점정부가 구성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다수제 주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합의제 요구가 대립할 것이다.

정리하면, 정당 간의 경쟁이 갈등적이라는 인식은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적이지 못한 여야 갈등이 반복되면서 타협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 간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선호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위치, 즉 승자이나 패자이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승자는 패자와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주도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자는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타협적이기를 원할 것이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선호하는 의사결정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 간의 갈등/타협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그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연구 가설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표 1>에서 두 개의 주요 정당의 명칭 변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각 시기에 정당의 이름은 상이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주요 정당 사이에서 주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두 주요 정당의 명칭 변경

시기	보수 정당	진보 정당
2007년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2008년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2012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2020년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한편, 본 연구는 주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각 정당의 정치적 지위와 그에 따른 승자와 패자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보다 간결한(parsimonious)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대한 당파적 유권자들의 선호를 밝히고자 한다. 원내 다수당과 소수당, 그리고 집권당과 야당의 지위가 일치하게 되는 의회제(parliamentary system) 민주주의와는 달리,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민주주의에서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정치적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의 주체인 두 정당이 처한 정치적 지위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위 인식과 이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선호 또한 서로 이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주요 정당이 각각 집권 다수당과 소수 야당으로 위치 지어지되, 정치적 지위가 서로 뒤바뀌는 두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의 시기를 선정하여 당파적 유권자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²⁾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2014년

- 1-A: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1-B: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여야 간의 관계가 타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다.
- 1-C: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여야 간의 관계가 타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2020년

- 2-A: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2-B: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여야 간의 관계가 타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다.

2) 후술하는 바와 같이, 두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항들이 포함된 설문자료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가 사용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의 2014년 지방선거 설문자료와 한국정당학회의 2020년 국회의원선거 설문자료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2-C: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여야 간의 관계가 타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먼저, 가설 1-A와 2-A는 민주주의 만족도에 있어 승자-패자 차이가 있음을 선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 본 연구의 주장을 반영하는 가설 1-B와 1-C, 그리고 가설 2-B와 2-C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 다수당인지 소수 야당인지의 지위에 따라 이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식이 뒤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지하는 정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일 경우, 응답자들은 다수결주의적 제도하에서 타협적인 국회 운영을 선호할 정치적 유인을 가질 명확한 이유가 없는 반면(가설 1-B 가설 2-B), 야당이자 소수당 지지자들은 다수결주의적 제도하에서도 주요 정당 사이의 타협적인 상호작용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의미이다(가설 1-C, 가설 2-C).

III.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주요 정당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각 정당들의 정치적 지위와 유권자가 자신이 집권 다수당과 소수 야당 중 어디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선호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2023년 현 국민의힘의 전신, 2020년 시기의 이름은 미래통합당)이 집권 여당이자 국회 내 다수당을 차지했던 시기인 2014년에 조사된 설문자료와, 더불어민주당(2012년 시기의 이름은 민주통합당, 2014년 시기의 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이었던 2020년에 조사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두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가 예상한 바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³⁾ 이에 본 연구는 각각

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총 300석 중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실시된 유권자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두 설문자료는 모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주의 만족도,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응답자의 정당 선호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 및 포함하고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두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위가 상이했기 때문에, 두 시기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4년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로 수집한 것이며, 대면 면접 방식으로 1,210명의 표본을 조사하였다. 2020년 데이터는 한국정당학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총 표본의 수는 2,500명이다.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2014년, 2020년 시기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이다.⁵⁾ 2014년 자료에서는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조사하였고, 완전한 독재라는 0점에서부터 중간인 5점을 거쳐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10점으로 측정하였다. 2020년 설문조사에서 응답

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얻음으로써,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 300석의 의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3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 무소속은 5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 4) 2014년 데이터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방식으로 표집하였다. 2020년 데이터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 5)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민주주의 평가는 개념상 유사하고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이를 따로 조사하는 설문자료들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그런데 두 정당이 각각 집권 다수당 및 소수 야당의 지위에 놓였던 서로 다른 두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혹은 평가, 정당 간의 갈등/타협 인식, 정당일체감이 모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조사되었던 설문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14년과 2020년의 설문조사가 가용하였고, 이들은 응답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위와 같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였다.

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0점에서 중간인 5점을 거쳐 매우 민주적이라는 10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두 종속변수 모두 11점 척도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주요 독립변수는 당시 여당과 야당 간 갈등 인식과 정당일체감이다. 여야 간 갈등 인식 변수는 당시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갈등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고,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을 1, 갈등이 다소 심하다는 응답을 2, 갈등이 없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을 합쳐 3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⁶⁾ 그리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심한 갈등(=1)의 상황과,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이 다소 심하다(=2)는 중간적인 상황, 그리고 응답자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비교적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으로 갈등이 없다(=3)의 세 가지 조건을 상정하였다.⁷⁾ 정당일체감 변수는 응답자들이

-
- 6)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발간한 2020년 집단 간 갈등 인식의 분석 결과는 91%의 응답자들이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크다(아주 크다+큰 편이다)고 답하였고, 89%의 응답자들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아주 크다+큰 편이다)고 답하였음을 보고하였다(이동한 2020). 또한, 매일경제신문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현재 한국 사회가 통합과 분열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70%의 응답자가 현재 분열에 매우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 갈등이 39.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국민 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갈등으로 이념 갈등을 선택할 응답자들이 6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윤원섭 외, 2020).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듯, 두 설문 자료에서 모두 갈등이 전혀 없거나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2014년 조사에서는 각각 0.25%와 1.08%,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0.36%와 1.72%.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은 2014년 조사에서는 각각 0.41%와 0.25%,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0.32%와 1.20%).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범주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범주와 합쳐 코딩하였다.
- 7) 본 연구는 두 주요 정당 중 어느 정당이 다수결주의 제도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지는지의 정치적 환경과, 여야 간의 “갈등” 혹은 “타협”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특히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가 사용한 두 시기의 설문자료에는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평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조작화 하였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파* 응답자 세 집단의 범주형 변수를 생성하였고,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 *기타 정당* 지지자⁸⁾, 그리고 *무당파* 응답자의 네 집단의 범주로 조작화 하였다. 기준 범주는 각 시기에서 집권 다수당이었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설정하였다.

여당과 야당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그리고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집권 다수당과 소수 야당 중 어디를 지지하는지의 여부가 이들의 민주주의 운영 평가에 미치는 조건적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조작화하였다. 2014년에는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새누리당*,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새정치민주연합*,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무당파*라는 세 개, 2020년에는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더불어민주당*,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미래통합당*, *여*

여당과 야당 사이에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등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과 등치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고려대학교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에서 조사한 또 다른 설문자료에 “현재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에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여당과 야당 간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대해 일종의 타당성(validity)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두 문항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6213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여당과 야당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반대로 정당 간에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여당과 야당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정당 간의 갈등과 타협을 서로 상반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8) 기타 정당은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그 외 정당의 범주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합쳐 기타 정당 범주로 조작화하였다. 이 기타 정당들의 정치적 성향은 상이하지만, 이들에 대해 일체감을 가진다고 응답한 수는 각각 소수에 그치고 있고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은 아니므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무당파층처럼 또 다른 기준범주로서의 기타 정당 범주를 생성하였다.

야 간 갈등/타협 인식×기타 정당, 그리고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무당파 네 개의 변수들을 생성하였다. 2014년에는 당시 집권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을 기준 범주로, 2020년에는 당시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기준 범주로 하여 분석 모형에서 각각 제외하였다.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여야 간 갈등 및 의회 내 양극화의 심화는 국회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Jones 2015; Ramirez 2009), 응답자들의 국회 신뢰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2014년에는 가장 불신하는 0점에서부터 가장 신뢰하는 100점까지, 2020년에는 가장 불신하는 0점에서부터 가장 신뢰하는 10점까지로 측정되어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진보/보수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정책 선호를 통제하였다. 두 조사 시기에 모두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각각 세 가지의 정책에 대해 찬성 및 반대하는 정도를 질문한 총 아홉 개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을 모두 진보에서 보수 방향으로 일관되게 맞춘 후 평균으로 조작화 하였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별(남성=1), 연령, 교육수준(범주형),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주 성장지역(범주형)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각각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 2014년 (새누리당이 집권 다수당)

변수	n	평균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주의 만족도	1,206	5.827	1.852	0	10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1,205	1.446	0.652	1	3
정당일체감	1,186	(100.00)	-	-	-
무당파	665	(56.07)	-	-	-
새누리당 지지	346	(29.17)	-	-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175	(14.76)	-	-	-

〈표 3〉 기술통계: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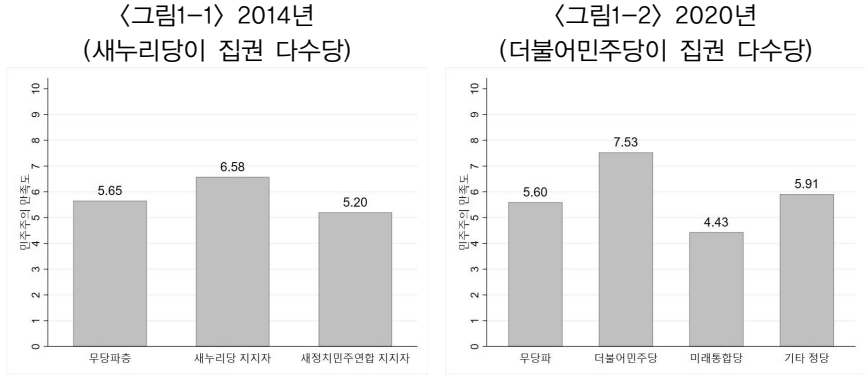
변수	n	평균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주의 만족도	2,500	6.110	2.371	0	10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2,500	1.469	0.672	1	3
정당일체감	2,486	(100.00)	-	-	-
무당파	1,165	(46.86)	-	-	-
더불어민주당 지지	826	(33.23)	-	-	-
국민의힘 지지	326	(13.11)	-	-	-
기타 정당 지지	169	(6.80)	-	-	-

IV. 분석 결과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각 시기별로 살펴 보았다.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값은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5.86과 6.11로 계산되었다. 두 시기 모두 응답자들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음의 <그림 1>에서 응답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구별하여 도해하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이면서 원내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 응답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의 경우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6.58)이 나타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에게서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평균(5.2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그림 1-2>를 보면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값(7.53)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 특히 매우 낮은 평균값(4.43)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유권자의 민주주의 평가에서

당파적 차이, 즉 승자-패자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derson and Guillory 1997).

〈그림 1〉 응답자의 정당 선호별 민주주의 만족도



다음에는 응답자들이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집권 다수당인 시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인 두 시기를 비교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 및 <표 5>와 같다.

먼저, <표 4>는 새누리당이 여당이자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했던 2014년 시기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OLS 회귀분석 결과이다.⁹⁾ 다수결주의에 기반한

9) 11점 척도의 종속변수가 등간척도가 아닌 순서를 가진 범주형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평에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또한 실시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을 반영하는 모형(2)의 OLS 회귀분석 결과와 주요 변수의 회귀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미성의 여부에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계수값의 크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b=-0.292$, $p<0.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b=-1.497$, $p<0.01$; 여야 간×새정치민주연합: $b=0.624$, $p<0.05$). 이러한 결과는 범주의 수가 11개로 적지 않아 연속형으로 상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석과 예측치 도해가 보다 직관적인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치적 의사결정방식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두 정당 간의 타협적인 상호작용을 굳이 선호하지 않을 것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정당 간의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타협을 보다 선호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였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2014년 (새누리당이 집권 다수당)

종속변수: 민주주의 만족도	모형(1)		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0.008	(0.077)	-0.284 [†]	(0.154)
무당파층	-0.377 ^{**}	(0.129)	-0.831 ^{**}	(0.28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0.636 ^{***}	(0.178)	-1.497 ^{***}	(0.392)
여야 간×무당파층			0.326 [†]	(0.182)
여야 간×새정치민주연합			0.603 [*]	(0.243)
국회 신뢰	0.014 ^{***}	(0.002)	0.014 ^{***}	(0.002)
정책 선호	1.376 ^{***}	(0.152)	1.360 ^{***}	(0.151)
성별 (남성=1)	0.091	(0.101)	0.092	(0.100)
연령	0.005	(0.004)	0.005	(0.004)
초등(국민)학교	-0.682 [†]	(0.385)	-0.711 [†]	(0.385)
중학교	-0.867 [*]	(0.378)	-0.897 [*]	(0.377)
고등학교	-0.994 ^{**}	(0.369)	-1.022 ^{**}	(0.368)
전문대학(2·3년제)	-1.044 [*]	(0.403)	-1.084 ^{**}	(0.403)
대학교(4년제)	-1.159 ^{**}	(0.386)	-1.195 ^{**}	(0.386)
대학원(석사과정)	-1.711 ^{**}	(0.520)	-1.715 ^{**}	(0.519)
대학원(박사과정)	-1.186	(0.906)	-1.193	(0.904)
가구소득	0.034 [*]	(0.016)	0.034 [*]	(0.016)
상수	2.783 ^{***}	(0.646)	2.091 ^{**}	(0.724)
N	1,143		1,143	
R ²	0.2061		0.2107	
Adj. R ²	0.1833		0.1865	

*** p<0.001, ** p<0.01, * p<0.05, † p<0.1

기준범주: 새누리당 지지자(2014년 당시 집권 다수당)

주 성장지역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가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보고를 생략하였다.

<표 4>의 모형(1)은 여야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이들의 정당 선호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통제된 분석 결과이다. *여야 간 갈등/타협*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두 주요 정당 사이의 관계 양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평가는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시 제1야당이자 원내 소수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기준 범주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 -0.636 만큼 낮았고, 이는 유의수준 $p < 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2014년의 정치적 환경에서도 또한 민주주의 만족도에 있어 승자-패자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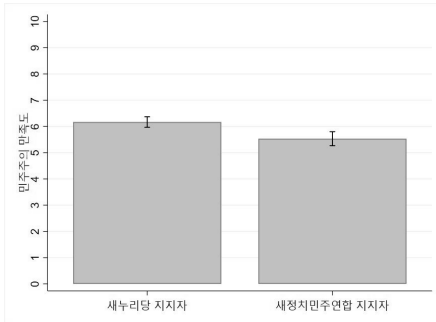
본 연구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모형(2)의 분석 결과이다. 여야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이들의 정당 선호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변수의 회귀계수는 -0.284 이고 이는 유의수준 $p < 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기준범주로 제외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국회 내 여당과 야당 사이의 관계가 갈등보다는 타협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할수록 오히려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 간×새정치민주연합* 변수는 0.603 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유의수준 $p <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에게서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의 결과 산출된 $0.319 (= -0.284 + 0.603)$ 의 계수값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p < 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는 정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에게서는 주요 정당 사이의 관계가 갈등보다는 타협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 민주주의 만족도가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치들이 산출하는 결과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에서 두 주요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측치를 도해하였다. 예측치의 계산 시 다른 변수들은 모두 각각의 평균값에 고정하였다.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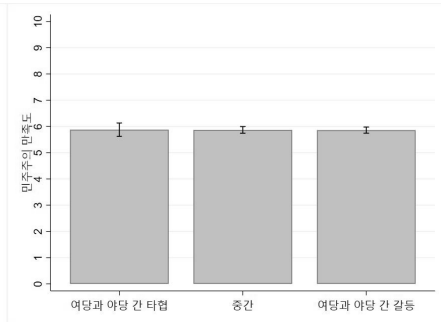
<그림 2>는 모형(1)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좌측의 <그림 2-1>은 2014년 당시 집권당이자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보다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이는 동시에, 제1야당이자 소수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서는 민주주의 만족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의 평균값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겹치지 않아, 두 주요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즉 승자-패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의 <그림 2-2>는 응답자들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요 주체인 두 정당 간의 관계 양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 만족도의 평균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2> 모형(1) 예측치: 2014년 (새누리당이 집권 다수당)

<그림 2-1> 정당 선호와 민주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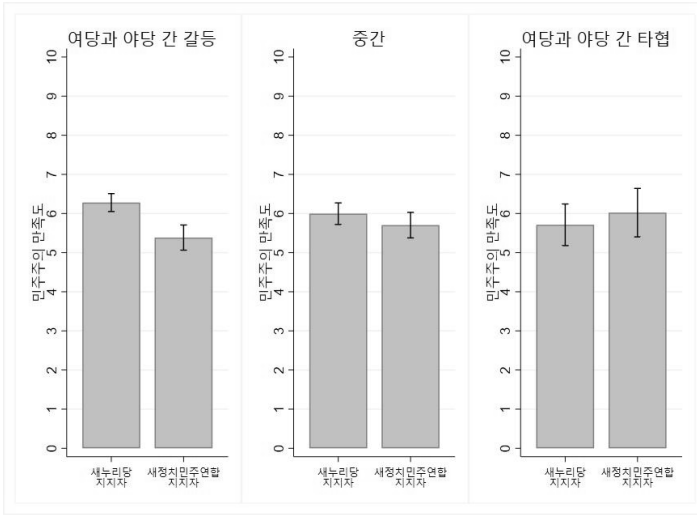
<그림 2-2>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한편, 모형(2)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치를 산출한 <그림 3>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과 야당 간에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집단을 보면, 당시 집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이는 동시에, 야당이자 소수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확연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정당 간의 관계가 보다 타협적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두 집단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점차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였는데, 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점차 감소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림 3〉 모형(2) 예측치: 2014년 (새누리당이 집권 다수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 다수당이나 소수 야당이냐의 맥락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가 바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의 지위를 점하였던 2020년 시기를 비교 분석하였다.¹⁰⁾ 앞서 살펴본 2014년 시기의 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2020년에는 더불

10) 2020년 사례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 분석해 보았다. 모형(4)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20년의 경우 또한 OLS 회귀분석 결과와 주요 변수의 회귀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미성의 여부에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계수값의 크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b=-0.772$, $p<0.001$; 미래통합당 지지자: $b=-3.735$, $p<0.001$; 여야 간×미래통합당: $b=1.311$, $p<0.001$).

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당 간의 타협을 선호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 간 갈등을 보다 싫어하며 정당 간의 타협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과 일치하였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

종속변수: 민주주의 만족도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0.162**	(0.062)	-0.667***	(0.111)
무당파층	-1.260***	(0.099)	-2.075***	(0.224)
미래통합당 지지자	-2.033***	(0.149)	-3.971***	(0.339)
기타 정당	-1.284***	(0.170)	-2.542***	(0.403)
여야 간×무당파층			0.566***	(0.137)
여야 간×미래통합당			1.357***	(0.214)
여야 간×기타 정당			0.891**	(0.259)
국회 신뢰	0.165***	(0.020)	0.168***	(0.020)
정책 선호	-1.717***	(0.115)	-1.657***	(0.114)
성별 (남성=1)	0.191*	(0.082)	0.202*	(0.081)
연령	0.011***	(0.003)	0.012***	(0.003)
초등(국민)학교	3.143*	(1.544)	3.052*	(1.531)
중학교	2.637†	(1.435)	2.684†	(1.423)
고등학교	3.027*	(1.410)	3.044*	(1.398)
전문대학(2·3년제)	3.037*	(1.416)	3.044*	(1.404)
대학교(4년제)	3.039*	(1.412)	3.081*	(1.401)
대학원(석사과정)	2.913*	(1.422)	2.920*	(1.410)
대학원(박사과정)	3.301*	(1.458)	3.312*	(1.446)
가구소득	0.049**	(0.018)	0.047**	(0.018)
상수	6.681***	(1.453)	5.174***	(1.469)

N	2,486	2,486
R ²	0.3096	0.3222
Adj. R ²	0.3003	0.3123

*** p<0.001, ** p<0.01, * p<0.05, † p<0.1

기준범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2020년 당시 집권 다수당)

주 성장지역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가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포함되었으나, 표에는 보고를 생략하였다.

<표 5>의 모형(3)은 여야 간 갈등/타협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이들의 정당 선호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여야 간 갈등/타협* 변수는 유의수준 $p<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여당과 야당 사이의 관계가 보다 타협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020년 시기의 제1야당이자 원내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기준 범주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2.033만큼 낮았고, 이는 유의수준 $p<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앞의 2014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더 낮았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로, 2020년에는 소수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에도 또한 승자-패자의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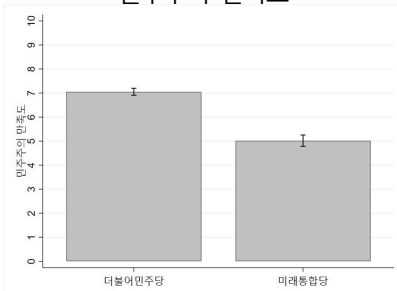
2020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4)의 분석 결과에 더욱 주목한다. 추정치들은 본 연구의 예측과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 변수의 회귀계수는 -0.667이고 이는 유의수준 $p<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기준범주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관계가 갈등보다는 타협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할수록 오히려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야 간×미래통합당* 변수의 회귀계수는 1.357이고 이는 유의수준 $p<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 주요 정당 사이의 관계 양상이 민주주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선형결합의 결과 산출된 회귀계수인 0.690 (=0.667+1.357)의 영향력을 검정한 결과 이는 유의수준 $p < 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는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는 정반대로,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관계가 갈등보다는 타협적이라고 볼 때 민주주의 만족도가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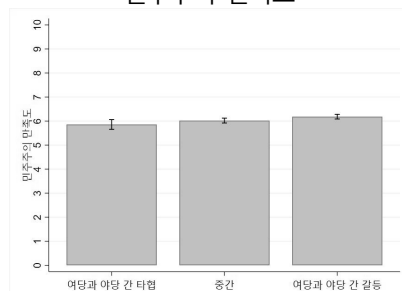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20년 분석 결과의 예측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4> 및 <그림 5>와 같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값에 두고 예측치를 계산하였다. 모형(3)의 분석 결과를 도해한 <그림 4>를 보면, 좌측의 <그림 4-1>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 결과 집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보다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이는 동시에,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에게서는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의 민주주의 만족도 평균값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평균값의 신뢰구간이 매우 좁아 2014년보다도 더욱 확연한 승자-패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측의 <그림 4-2>는 응답자들이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양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 만족도의 평균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각 값에 따라서 민주주의 평균값에 명확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림 4> 모형(3) 예측치: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

<그림 4-1> 정당 선호와 민주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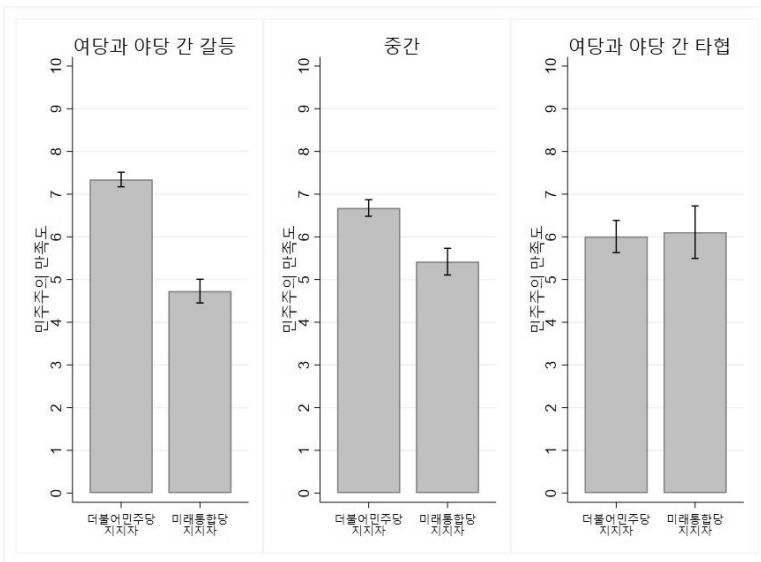


<그림 4-2> 여야 간 갈등/타협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



여당과 야당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집단 중에서,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이는 동시에,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확연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위의 <그림 4-1>과 비교해 보면, <그림 5>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더욱 높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더욱 낮게 나타나 그 차이는 더욱 컸다. 그런데 정당 간의 관계가 갈등적이기보다는 타협적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집권 다수당 지지자와 소수 야당 지지자 집단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점차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두 주요 정당 사이의 관계 양상을 갈등보다는 타협적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점차 감소하였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졌다.

<그림 5> 모형(4) 예측치: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



요컨대, 위의 분석 결과들은 정치적 환경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호의 차이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수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두 주요 정당들의 정치적 지위가 서로 달랐던 2014년과 2020년에 수집된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정당의 지지자들은 정당 간의 타협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었다. 결국 당파적 유권자들이 상정하는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은 승자와 패자의 지위에 따른 선호가 반영된 정치적 태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V. 결론

집권당과 야당의 갈등적인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정치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 상생, 화합과 같은 여야 간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치과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승자와 패자의 입장이다. 집권 다수당은 승자로서 상대적 다수를 점유한 집단의 의사가 주도하는 다수제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소수 야당은 패자로서 합의제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동일한 갈등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당파적 지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정당 간의 갈등/타협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때, 유권자들이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각 정당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이한 지위에 놓였던 두 시기를 비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정당 선호에 따라, 민주주의 만족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새누리당이 집권 다수당이었던 2014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보다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소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을 차지했던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 보다 높은 민주주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족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승자-패자의 차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혹은 만족도가 응답자들의 당파적 선호와 맞물려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임을 의미한다.

둘째, 응답자들이 주요 정당들의 관계 양상이 갈등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타협적이라고 평가한다면, 두 정당 지지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만족도의 차이, 즉 승자-패자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두 집단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수렴하는 방식에 있었는데, 2014년에는 집권 다수당의 지위에 있었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정당 간의 관계를 보다 타협적으로 인식할 경우 민주주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반면, 소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서는 여야 간 관계를 갈등보다는 타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이와는 정확히 반대로, 집권 다수당과 소수 야당의 지위가 뒤바뀌었던 2020년에는 집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타협적인 여야 간의 관계를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했던 반면,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인 두 주요 정당 간의 관계가 타협적이라고 평가한다면 민주주의의 운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주요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대칭적인 태도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다수결주의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권력배분 구조하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치적 지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어떤 정치적 선호를 상이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2014년 시기에 비해 2020년에 민주주의 만족도에 있어 승자-패자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최근 시기의 분석에서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최근 지적되고 있는 유권자 양극화(mass polarization)의

심화 현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즉 당파적 유권자들이 보이는 지지 정당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동시에 상대 정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동시에 지니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Iyengar et al. 2012), 혹은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야당 지지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간격이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적 지형(하상웅 2016)은 현 민주주의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체제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차이와도 높은 관련을 가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의 내용이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정치적 환경에 따른 당파적 유권자들의 선호를 밝히기 위해, 논의를 단순화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두 정당의 경쟁 구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점정부, 즉 집권당과 원내 다수당이 일치하는 두 시기를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승자와 패자라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선호가 분명하게 주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제에서는 분점정부가 나타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보이는 승자-패자의 차이가 정부 구성에서의 여당/야당의 지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내의 의석수에 따른 권력배분 구조(power-sharing structure), 즉 다수당/소수당의 지위 때문인지를 밝힌다면 유권자들의 태도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선호를 보여주기 위해 이들의 승자-패자 지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 집단 간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각 지지 집단 내에서도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당파성의 강도에 따라서 강성한 승자층과 온건한 승자층, 그리고 강성한 패자층과 온건한 패자층이 구분될 수 있을 텐데, 온건한 승자들은 타협을 선호하고, 강성한 패자들은 타협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의 과제는 이러한 당내의 차이에도 초점을 맞추어 당파적 선호의 강도에 따라 민주주의 만족도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어떻게 형

성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전 시기에 비해 최근에 이러한 승자-패자의 차이가 보다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 종단적으로도 경험적 근거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두 시기를 비교한 결과 최근 시기에서 그 차이가 보다 현저하게 드러남으로써 이것이 최근의 양극화 심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이후 종단자료의 구축 혹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시기에 따른 변화 또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근거들은 정당 간의 상호작용과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는 대의민주주의를 대하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합의와 타협이라는 규범적인 원칙에만 근거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함을,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선호를 고려할 때 정치권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과정 및 국정운영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성휘. 2020. “법규정 없는 상임위원장 배분, 13대 이후 여야 타협의 산물.” 『동아일보』 (6월 13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3/101489545/1> (검색일: 2023.02.15).
- 강신구. 2012. “어떤 민주주의인가?: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39-67.
- 강신구. 2019.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 그리고 민주주의 만족감.” 『현대정치연구』 12권 1호, 71-106.
- 곽진영 · 김준석 · 박경미. 2009.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 확보 방안』. 건국대학교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길정아 · 하상웅.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권 1호, 46-78.
- 김병훈. 2020. “민주 막무가내 입법독주...지지층 결집 노림수?” 『매일신문』 (11월 26일),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112616004731201> (검색일: 2023.02.15).
- 김희민 · 송두리 · 성예진. 2017.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0권 2호, 99-129.
- 박용수. 2020.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 합의제 국회운영 관행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2호, 57-90.
- 박종민. 2013. “동아시아에서 레짐정향의 근원: 승자-패자론 검증.” 『정부학연구』 19권 3호, 163-187.
- 박준석. 2020. “32년 만에 상임위 독식한 與, 입법 프리패스 가능할까?” 『한국일보』 (6월 30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91643000042> (검색일: 2023.02.15).
- 박찬표. 2016.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현대정치연구』 9권 1호, 74-113.

- 서지민. 2020. “국민 56% ‘여야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 막는다.’” 『시사저널』 (11월 10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06> (검색일: 2023.02.15).
- 성연철. 2008. “한나라 ‘다수횡포 국회법’ 밀어붙이나.” 『한겨레』 (8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6131.html (검색일: 2023.02.15).
- 손선희. 2022.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정부기관은 '국회'...만년 꼴찌.” 『아시아경제』 (3월 26일), <https://cm.asiae.co.kr/article/2022032610464881221> (검색일: 2023.02.15).
- 송채경화. 2023. “정치 갈등 줄이려면 “대통령과 여야 상호 존중, 협치해야” 41%.” 『한겨레』 (1월 2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998.html (검색일: 2023.02.15).
- 윤원섭. 2020. “[집단별 갈등인식 - 2020년] 여야, 부유층·서민층, 진보·보수 갈등 크다고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4월 29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5477> (검색일: 2023.02.15).
- 윤원섭·서동철·진영태·전경운·문재용. 2020. “정치이념으로 갈라진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라” 80%.” 『매일경제』 (12월 31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2/1339922/> (검색일: 2023.02.15).
- 이가영. 2018.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꼴찌는 국회...1위는?” 『중앙일보』 (11월 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88250#home> (검색일: 2023.02.15).
- 이경태. 2020.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상임위 독식’ 영향?” 『오마이뉴스』 (7월 2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049 (검색일: 2023.02.15).
- 이현출·김민재. 2021.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1대 총선 사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권 1호, 277-305.
- 조영호·조진만·김용철. 2013.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과정과 결과.” 『한

- 국정치학회보』 47집 2호, 63-81.
- 최준영 · 김준석 · 구분상. 2019. “반드시 이겨라 그러나 싸우지는 마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속성.” 『한국정치학회보』 53집 2호, 53-80.
- 하상웅. 2016. “양극화,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치의 위기.” 『의정연구』 22권 1호, 247-254.
- 한주홍. 2020. “與 상임위원장 17곳 싸늘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 반응은...” 『동아일보』 (7월 2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2/101785040/1> (검색일: 2023.02.15).
- Aarts, Kees, and Jacques Thomassen. 2008. “Satisfaction with Democracy: Do Institutions Matter?” *Electoral Studies* 27(1): 5-18.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66-81.
- Anderson, Christopher J., and Andrew LoTempio. 2002. “Winning, Losing and Political Trust 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335-351.
- Anderson, Christopher J., André Blais, Shaun Bowler, Todd Donovan, and Ola Listhaug. 2005. *Losers' Consent: Elections and Democratic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rmingeon, Klaus, and Kai Guthmann. 2014. “Democracy in Crisis? The Declining Support for National Democracy in European Countries, 2007-2011.”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3): 423-442.
- Bernauer, Julian, and Adrian Vatter. 2012. “Can't Get No Satisfaction with the Westminster Model? Winners, Losers and the Effects of Consensual and Direct Democratic Institutions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1(4): 435-468.
- Binder, Sarah. 2015. “The Dysfunctional Congr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8: 85-101.

- Blais, André, and François Gélinau. 2007. "Winning, Losing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Studies* 55(2): 425-441.
- Booth, John A., and Mitchell A. Seligson. 2009. *The Legitimacy Puzzle in Latin America: Political Support and Democracy in Eight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äng, Frida, Marina Nistotskaya, and Georgios Xezonakis. 2017. "The Quality of Government Determinants of Support for Democracy." *Journal of Public Affairs* 17(1-2): e1643.
- Citrin, Jack, and Laura Stoker. 2018. "Political Trust in a Cynical Ag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49-70.
- Claassen, Christopher. 2020. "Does Public Support Help Democracy Surviv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4(1): 118-134.
- Curini, Luigi, Willy Jou, and Vincenzo Memoli. 2012.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the Winner/Loser Debate: The Role of Policy Preferences and Past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241-261.
- Dahlberg, Stefan, and Sören Holmberg. 2014. "Democracy and Bureaucracy: How Their Quality Matters for Popular Satisfaction." *West European Politics* 37 (3): 515-537.
- Dalton, Russell J. 2004. *Democratic Challenges, Democratic Choices: The Erosion of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s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urr, Robert H., John B. Gilmour, and Christina Wolbrecht. 1997. "Explaining congressional approv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175-207.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Farrell, David M., and Ian McAllister. 2006. "Voter Satisfaction and Electoral Systems: Does Preferential Voting in Candidate-Centred Systems Make a Differ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5): 723-749.
- Ferland, Benjamin. 2021. "Policy Congruence and Its Impact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lectoral Studies* 69.
- Foa, Roberto S., Klassen, A., Slade, M., Rand, A. and R. Collins. 2020. *The Global Satisfaction with Democracy Report 2020*. Cambridge: Centre for The Future of Democracy.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Frey, Bruno S., and Alois Stutzer. 2001.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bridge, Laurel, and Neil Malhotra. 2011. "Electoral Incentives and Partisan Conflict in Congress: Evidence from Survey Experi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494-510.
- Harbridge, Laurel, Neil Malhotra, and Brian F. Harrison. 2014. "Public Preferences for Bipartisa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9(3): 327-355.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yengar, Shanto, Gaurav Sood, and Yphtach Lelkes.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 Jones, David R. 2015. "Declining Trust in Congress: Effects of Polarization and Consequences for Democracy." *The Forum* 13(3): 375-394.
- Kang, Woojin. 2015. "Inequality, the Welfare System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6(5):

493-509.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nde, Jonas, and Joakim Ekman. 2003.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Note on a Frequently Used Indicator in Comparative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3): 391-408.
- Linz, Juan J., and Alfred C. Stepan. 1996.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7(2): 14-33.
- Lipset, Seymour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 Listhaug, Ola, Bernt Aardal, and Ingunn Opheim Ellis. 2009. "Institutional Variation and Political Support: An Analysis of CSES Data from 29 Countries." In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edited by Hans-Dieter Klingemann, 311-33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Allister, Ian. 2005. "Accountability, Representation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3): 371-379.
- Norris, Pippa. 1999. "Introduction: The Growth of Critical Citizens?" In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edited by Pippa Norris, 1-2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aranta, Mario, and Sergio Martini. 2016. "Does the economy really matter for satisfaction with democracy? Longitudinal and cross-country evidence from the

- European Union.” *Electoral Studies* 42: 164-174.
- Quaranta, Mario, and Sergio Martini. 2017. “Easy Come, Easy Go? Econo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outhern Europe in the Last Three Decad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2): 659-680.
- Ramirez, Mark D. 2009. “The Dynamics of Partisan Conflict on Congressional Approv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3): 681-694.
- Ridge, Hannah M. 2022. “Just Like the Others: Party Difference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arty Politics* 28(3): 419-430.
- Schattschneider, Elmer Eric.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Singh, Shane P. 2014. “Not All Election Winners Are Equal: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the Nature of the Vo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2): 308-327.
- Singh, Shane P., Ekrem Karakoç, and André Blais. 2012. “Differentiating Winners: How Elections Affec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lectoral Studies* 31(1): 201-211.
- van Ham, Carolien, Jacques Thomassen, Kees Aarts, and Rudy Andeweg. 2017. *Myth and Reality of the Legitimacy Crisis: Explaining Trends and Cross National Differences in Established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gner, Alexander F., Friedrich Schneider, and Martin Halla. 2009.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Western Europe - A Pane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5(1): 30-41.
- Weatherford, M. Stephen. 1992. “Measuring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149-166.

Which Democratic System Do Winners and Losers Prefer?: Voters' Perceptions of Party Conflict/Compromis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Democracy

Gil, Jung-ah | Korea University

Sung, Yaejin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voters' preference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relative to their party's share of power.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identify that partisans' preferences for compromise or conflict vary depending on their parties' relative positions in power. Our primary findings show that partisan voters prefer majoritarian rule and a lack of compromise between parties while their party is in power, whereas those same partisans prefer compromise and bipartisanship while their party is in the opposition. This relationship is true of partisans for the conservative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liberal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14, as well as the liberal party (the ruling/majoritarian party) and the conservative party (the opposition/minority party) in 2020. In both instances, ruling partisans preferred majoritarianism and opposition partisans preferred compromi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oters do not necessarily prefer a consensual democracy and a compromise between parties. Rather, they conceive of desirable democratic decision-making diametrically according to their winner-loser position, which is inevitably produced under electoral democrac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3091302).

Key Words | Satisfaction with Democracy, Evaluation of Democracy, Party Identifications, Party Conflict/Compromise, Winner-Loser, Majoritarian/Consensual Democracies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평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윤지성 | DGIST**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분석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들의 극심한 대립 끝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정되면서 지역구 의석수도 제20대 국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 경기도의 과소 대표가 심각한 수준이며, 호남지역이 과대 대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선거구 의석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나뉘었을 때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오히려 서울과 부산이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도지역의 과소 대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가 재편된 지역들의 각 선거구 면적을 비교했을 때 표준편차가 감소해서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이전 선거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DGIST Start-up Fund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2021010049).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GIST 교양학부 조교수

I.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1995년에 4:1, 2001년에 3:1에 이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확정하였다. 선거구 획정은 대표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적인 문제였고, 매 선거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무엇보다도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조정에 민감하며,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도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이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도농 간 선거구 의석수 조정은 정당 간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1항에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이전에 지역구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무려 선거일 39일 전인 2020년 3월 7일에서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김종갑·허석재 2020).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가까스로 타결된 주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당들의 극심한 대립 끝에 2019년 12월 27일에 겨우 타결되어 지역구 의원정수가 그제서야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리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20대 국회와 동일하게 47석으로 결정되면서 지역구 의석수 또한 253석이 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전에 비해서 소폭의 변화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정수가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더없이 훌륭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1 이내 제한 결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선거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들의 극심한 대립 끝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정되면서 지역구 의석수도 제20대 국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선거구 획정은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유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매년 다시 조정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거구 획정은 후보의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갈등의 장이어서 중립적인 결과도출이 요구된다. 그러나 매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확정된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과연 중립적인지, 그 평가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와 비교해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는 각 광역시/도별 인구비례 적정 의석수와 실제로 획정된 의석수를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평가하며, 또 다른 기준으로 획정지수를 사용하여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비교할 것이다.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는 선거구가 개편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개편된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거대선거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평가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선거구 재획정의 공정성을 주로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 평가했다면 본 연구는 그것에 더하여 지역대표성의 관점까지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두 관점을 입체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시도이다.

II. 기존연구 검토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문제는 선거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다(Butler and

Cain 1992; Grofman et al. 1982; McCubbins and Schwartz 1988).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위한 기준으로 선거구 사이의 인구가 비슷한지, 선거구의 모양이 조밀한지, 선거구의 경계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지 등을 들 수 있는데(Butler and Cain 1992),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문제는 게리멘더링이다.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게리멘더링과 관련하여 선거구의 조밀성이 대표적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Pildes and Niemi 1993), 이것은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Polsby and Popper 1991). 이와 더불어 선거구 획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표의 등가성 원칙이다(McCubbins and Schwartz 1988). 표의 등가성 원칙은 대표성의 문제와 직결되며, 주로 지적되는 논의는 인구대표성이 선거구 획정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허용되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선거구 획정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와 지역별 의석수 할당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Bullock III 2021; Ladewig and Jasinski 2008).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서의 인구편차 허용 정도의 문제는 총선과 지방선거처럼 선거의 층위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한다(Rallings et al. 2004).

한국의 선거구 획정 관련 연구들은 크게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과 같은 획정의 공정성 원칙에 대한 연구들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들로 나뉘볼 수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한 결정은 헌법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평등 실현에 있어서 인구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확인했으며,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구대표성이 1차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 또한 고민해야 함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의석수의 증가를 통한 비례대표제의 확대라는 것이다(강우진 2015). 지역대표성을 고려

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리는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농산어촌의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경우에 인구 저밀도 지역의 정치적 소외감 발생의 문제가 있고, 넓어진 선거구 내에서 소지역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대표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강휘원 2015; 이재묵 2016).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 의회는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상원과 인구대표성을 반영하는 하원의 양원제 체제가 아니라 단원제이기 때문에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종빈 2017). 인구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농산어촌 지역의 거대선거구인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처럼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김종갑·허석재 2020). 인구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고 그 결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어 그 지역의 목소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이다(김감영 2021). 또한 이것은 지역대표성의 약화와 더불어, 농산어촌으로 한정하면 수도권 농산어촌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대표되는 문제도 있다(이정섭·지상현 2021). 정준표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사례를 통해 형식적 표의 등가성과 실질적 표의 등가성이라는 기준이 충돌할 수 있으며, 실질적 표의 등가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다(정준표 2010). 선거구 획정의 연구가 주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구대표성 외에 지역동질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본다(김정도·김경일 2018).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공정성을 개선할 방법으로 농어촌 인구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김정도 2015).

한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원칙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지만 선거구 획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흔치 않게 존재하는데, 이상학과 이성규의 공동연구가 대표적이다. 인구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계급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해볼 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비교하여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는 인구대표성이 개선되었

으며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 격차도 감소했음을 확인했다(이상학·이성규 2016). 그러나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를 비교하면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 계수와 코사인제공지수는 제20대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정치적 지니계수는 소폭 상승하여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상학·이성규 2020).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대표성을 평가한 결과 광역시의 선거구와 농산어촌 선거구 간 지역대표성을 나타내는 의석당 면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보다 인구대표성이 개선된 대신에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학·이성규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선거구 획정 결과를 주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바라본 연구들도 있다. 송병권은 선거구 획정 결과의 당파적 편향성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했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가 당파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송병권 2018). 선거구 획정 원칙을 반영함에 있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중 용인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구등가성, 연속성, 공간적 조밀성과 같은 획정 기준을 준수하는 공간최적화 모델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함을 입증한 연구도 있다(김명진·김감영 2013). 김지운은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거구 인구대표성과 국고보조금과의 관계를 측정했는데, 선거구 재획정으로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그 선거구 유권자의 1인당 국고보조금 액수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인구대표성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김지운 2013).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원칙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획정 과정의 제도개선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윤종빈은 선거구 획정 과정의 쟁점으로 인구대표성 강화, 인구 상하한선의 탄력적 적용, 의결권, 전문

성, 중립성 등을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의원정수의 확대를 들었으며,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윤종빈 2013, 2017). 홍재우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인구당 의석수 법제화를 통한 의석수 증가,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에 대한 규제완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홍재우 2016). 이에 더해서 김종갑은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의결방식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갑 2018). 이와는 달리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인 상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기보다 입법의 영역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문은영 2020). 지병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분석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행적으로 이뤄진 원인이 위원들의 정치적 당파성 때문이 아니라 지역별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핵심권한이 국회에 있고, 국회와 획정위원회 간의 협력이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지병근 2021).

이렇듯 한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들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선거구 획정 과정의 제도개선에 대한 규범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선거구 획정 결과의 경험적 검증에 대한 연구들은 드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선거구 획정의 주요한 결과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변화사항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년 1월 31일 선거구 평균 인구수인 204,847명을 기준으로 선거구의 인구 하한을 136,565명으로, 선거구의 인구 상한을 273,129명으로 1차 선거구 획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국회로 송부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획정을 요구하고 국회의장 명의로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문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함에 따라 인구 하한선을 139,000명, 인구 상한선을 278,000명 미만으로 확정했다(지병근 2021). 따라서 인구 하한 선거구는 139,027명의 전남 여수시갑 선거구이며, 인구 상한 선거구는 277,912명의 경기 고양시정 선거구가 되었다(김종갑·허석재 2020).

2019년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제21대 국회 지역구 의원정수가 제20대 국회와 같은 253명으로 정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획정 요구를 하면서 보낸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지병근 2021). 따라서 마감시한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갑), 세종특별자치시(을) 선거구로 분할했으며, 반대로 경기도 군포시(갑), 군포시(을) 선거구는 군포시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1석 늘어났으며, 경기도의 의석수는 1석 줄어들게 되었다.

다른 지역들은 지역구 의원정수의 변화는 없었고 선거구의 조정만 있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를 제외하고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가 되었으며, 동구는 남구에서 이름을 변경한 미추홀구(갑), 미추홀구(을) 선거구와 합쳐져서 동구·미추홀구(갑),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천시 원미구(갑) 선거구가 부천시(갑)선거구로,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시(을) 선거구로, 부천시 오정구 선거구가 부천시(병) 선거구로,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가 부천시(정) 선거구로 명칭을 바꾸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순천시 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통합하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선거구 조

정이 한층 더 복잡하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 선거구와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의 일부인 철원군·화천군·양구군만 통합하여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선거구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선거구로 분할했다. 여기서 빠진 홍천군과 인제군은 기존의 동해시·삼척시 선거구,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선거구,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와 함께 새롭게 선거구가 재편되어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로 바뀌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기존의 안동시 선거구,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 영덕군·울진군·봉화군·영양군 선거구를 안동시·예천군 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 상주시·문경시 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로 새롭게 재편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정수가 253석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지역별 의석수의 변동도 거의 없었으며, 선거구 인구 상한과 하한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구의 구역조정만 나타났다.

IV.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평가

1. 인구대표성 관점에서의 평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의원정수가 동일하고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동일한 인구 상하한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비교 결과를 <표 1>로 정리해서 나타냈다. ‘인구비례 적정의석’이 의미하는 바는 선거구 획정 기준일자인 2019년 1월 31일 각 지

역별 인구에서 선거구 평균인구 204,847명¹⁾으로 나눈 것으로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 각 지역에 비례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는 의석수이다. ‘가능의석’은 인구비례 적정의석을 비례대표 의석 할당 계산에 사용하는 해밀턴 방식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방식은 인구를 의석수로 나누어 정수 부분을 먼저 배정하고, 소수 부분이 큰 순서대로 나머지 지역들에 1석씩 배정하는 방식이며,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 배당할 수 있는 적정의석수로 볼 수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별로 할당된 의석수와 비교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화된 지역구 의석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로 분할되어 1석이 늘어난 것과 경기도 군포시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로 나뉘어 있다가 군포시 선거구로 통합되어 1석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의석수 할당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밀턴 방식의 가능의석수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별 의원정수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비교한 결과가 <표 1>의 마지막 열인데, 인구비례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1석씩 과대 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인천광역시도 1석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무려 5석이나 과소 대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미 4석이 과소 대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포시 선거구를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1) 선거구 평균인구 204,847명은 선거구 획정 기준일자인 2019년 1월 31일 전국 인구 51,826,287명을 지역구 전체 의석수인 253석으로 나눈 결과이다.

〈표 1〉 지역별 의원정수와 인구비례 적정의석수 비교

지역	인구비례 적정의석	가능의석 (해밀턴)	제20대 의석	제21대 의석	증감	가능의석과 실제 비교
서울특별시	47.68	48	49	49	-	1석 과대
부산광역시	16.78	17	18	18	-	1석 과대
대구광역시	12.01	12	12	12	-	적정
인천광역시	14.43	14	13	13	-	1석 과소
광주광역시	7.13	7	8	8	-	1석 과대
대전광역시	7.27	7	7	7	-	적정
울산광역시	5.64	6	6	6	-	적정
세종특별자치시	1.55	2	1	2	+1	적정
경기도	63.90	64	60	59	-1	5석 과소
강원도	7.53	8	8	8	-	적정
충청북도	7.81	8	8	8	-	적정
충청남도	10.38	10	11	11	-	1석 과대
전라북도	8.96	9	10	10	-	1석 과대
전라남도	9.17	9	10	10	-	1석 과대
경상북도	13.05	13	13	13	-	적정
경상남도	16.47	16	16	16	-	적정
제주특별자치도	3.26	3	3	3	-	적정

기존 연구에서 선거구 획정 원칙의 관점은 인구대표성의 측면에서 도시지역이 과소 대표되고, 농산어촌 지역이 과대 대표되고 있지만,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거대선거구 발생의 문제와 선거구 내의 소지역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를 이루었다(강우진 2015; 이재묵 2016; 김종갑·허석재 2020). 그러나 <표 1>의 마지막 열 결과에서 광역시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으로 나뉘서 살펴볼 때, 광역시 지역이 2석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이 2석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경기도에서 무려 5석이 과소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의 과대 대표가 적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주장들과는 달리 인구대표성의 측면에서 서울과 부산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서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가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어서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경기도의 지속적 과소 대표 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지역주의 균열구도와 관련하여 지역별 선거구 의원정수를 바라보면, 호남지역인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모두 1석씩 과대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된다면 경기도의 과소 대표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 일자의 광주광역시 인구가 1,459,832명인데 지역구 의석수가 8석인 반면에,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1,488,725명으로 광주광역시보다 28,893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1석 적은 7석인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최근까지도 호남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윤지성 2017, 2019, 2020),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의석을 3석이나 줄이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결정일 것이다. 그러나 영남지역과 비교해도 부산광역시만 1석이 과대 대표되고 있을 뿐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모두 적정 수준으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지역주의 거대정당인 국민의힘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별 획정지수 비교

지역	인구(A)	의석수(B)	제21대 획정지수 (C=A/B)	제20대 획정지수 (D)	차이 (C-D)
서울특별시	9,766,288 (18.84)	49 (19.37)	0.973	1.007	-0.034
부산광역시	3,438,259 (6.63)	18 (7.11)	0.932	0.959	-0.027
대구광역시	2,460,382 (4.75)	12 (4.74)	1.001	1.019	-0.018
인천광역시	2,955,916 (5.70)	13 (5.14)	1.110	1.105	0.005
광주광역시	1,459,832 (2.82)	8 (3.16)	0.891	0.906	-0.015
대전광역시	1,488,725 (2.87)	7 (2.77)	1.038	1.068	-0.030
울산광역시	1,154,786 (2.23)	6 (2.37)	0.940	0.960	-0.020
세종특별자치시	316,814 (0.61)	2 (0.79)	0.773	0.993	-0.220
경기도	13,090,648 (25.26)	59 (23.32)	1.083	1.023	0.060
강원도	1,541,693 (2.97)	8 (3.16)	0.941	0.951	-0.010
충청북도	1,599,155 (3.09)	8 (3.16)	0.976	0.972	0.004
충청남도	2,125,797 (4.10)	11 (4.35)	0.943	0.926	0.017
전라북도	1,834,532 (3.54)	10 (3.95)	0.896	0.918	-0.022
전라남도	1,878,904 (3.63)	10 (3.95)	0.917	0.936	-0.019
경상북도	2,674,005 (5.16)	13 (5.14)	1.004	1.021	-0.017
경상남도	3,373,214 (6.51)	16 (6.32)	1.029	1.032	-0.003
제주특별자치도	667,337 (1.29)	3 (1.19)	1.086	1.018	0.068
합계	51,826,287 (100)	253 (100)	-	-	-

주1: 표에서 괄호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비중(%)을 나타냄.

주2: 획정지수는 이상학·이성규(2020) 참조.

인구대표성을 다른 기준인 획정지수로 계산해서 정리한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획정지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 대비 그 지역의 의원정수 비중과 전체 인구 대비 그 지역인구 비중을 다시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획정지수가 1보다 큰 지역은 인구비중보다 의석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과소 대표된 것이며, 획정지수가 1보다 작은 지역은 인구비중보다 의석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대 대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상학·이성규 2020). 제21대 국회에서 인천, 제주, 경기, 대전, 경남 지역 순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의 과소 대표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와 의석비중이 모두 1%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더라도 해밀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과소 대표 정도가 가장 컸던 경기도 보다 인천광역시가 획정지수 방식에서 가장 과소 대표되는 지역으로 나온 것은 경기도가 의석수 비중은 23.32%, 인구비중은 25.26%로 무려 1.94%나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비율로 계산하면 분모와 분자 숫자 자체가 크므로 비율로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지역 순으로 과대 대표 정도가 심하며, 인구와 의석비중이 0%대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지역이 과대 대표가 되는 것은 해밀턴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획정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과소·과대 대표되지 않은 중립적 획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순으로 중립적 선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지수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지수를 비교하면 선거구 획정이 개선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대전, 대구, 경북 순으로 1에 가까운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구 획정이 개악된 지역들도 있는데, 경기, 서울, 부산, 전북, 울산, 전남 순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대표성 약화 정도가 심해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간 과소 대표였지만 가장 중립에 가까운 선거구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대 대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있는 내용인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를 완화하여 춘천시, 순천시, 화성시에 적용해서 선거구를 조정했다는 점이다. 강원도 춘천시 선거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선거구와 통합해서 조정하면서 춘천시의 일부인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에 편입시켜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

군(을) 선거구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순천시 선거구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와 통합해서 조정하면서 순천시 해룡면만 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편입시켜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로 재구성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늘리지 않기 위해 봉담읍을 분할해서 봉담읍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는 화성시(갑) 선거구로, 봉담읍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를 화성시(병) 선거구로 편입시켰다. 이 3가지 사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직선거법의 읍·면·동 분할금지 원칙을 어기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과소 대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3석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4석이 배정된 인근 안산시의 인구는 659,963명인 반면에 화성시의 경우 765,107명으로 105,144명이나 인구가 많다. 따라서 읍·면·동 분할금지 원칙까지 어기고 시행된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춘천시, 순천시, 화성시의 선거구 재획정 사례에서 읍·면·동 분할금지 원칙을 어리게 된 것은 게리맨더링의 본래 의미처럼 당파적 이해관계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구 증가로 인한 기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읍·면·동 분할금지 원칙이 게리맨더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원칙이 깨지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재획정 논의과정에서 이번 선례를 들어 점차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게리맨더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대표성 관점에서의 평가

한국의 선거구 획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원칙의 불균형이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조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지역대표성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행정구역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인구대표성이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이 되면서 지역대표성의 원칙은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정섭·지상현 2021). 이것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인구분포의 도시지역 편중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유출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다 보니 농산어촌 지역에서 거대선거구가 발생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서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시스템에서 하원은 인구대표성을 반영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지만(윤종빈 2017),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인구대표성만 고려하면 지역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거대선거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49개 선거구의 전체 면적은 605km^2 이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중 가장 면적이 큰 강원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는 무려 $5,927\text{km}^2$ 로서 무려 9.8배에 달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면적이 큰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에서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지역 선거구보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과 접촉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유권자들과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의 스킨십이 체계적으로 어려워지므로 농산어촌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표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것은 대표의 입장에서 선거운동, 지역 현안파악 등에서의 어려움 등 도시지역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불리하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서 기계적으로 인구대표성만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강우진 2015). 특히 인구대표성 원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산어촌 지역 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권과 같은 지역공동체와의 괴리 문제 등으로 더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강휘원 2015). 선거구 내의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이재목 2016),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정준표 2010).

본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에서의 지역대표성을 선거구 면적에 초점을 두고 평가할 것이다.²⁾ 서두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선거제도의 변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나, 결국 논의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의 통폐합과 재조정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이었다. 그리고 <표 1>에 정리된 내용처럼 광역시/도 지역에서의 의석수 증감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석 증가하고, 경기도에서 1석이 줄어드는 최소한의 변화였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인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은 선거구의 수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선거구의 동일기준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 거대선거구 면적의 비교를 통해 지역대표성이 제20대 국회와 비교해서 제21대 국회에서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역 선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이다.³⁾

2) 선거구 면적에 대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통계를 토대로 합산하여 작성했다.

3) 본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의 거대선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면적의 비교는 빠졌지만, 본 연구의 비교방법인 선거구간 면적의 표준편차 크기가 작지만 감소해서 도시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도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면적의 관점에서 지역대표성이 약간이나마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강원도 선거구 면적의 비교

제20대 선거구	면적(km ²)	제21대 선거구	면적(km ²)
춘천시	1,116.4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404.4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5,927.4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172.9
동해시·삼척시	1,368.1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891.4
속초시·고성군·양양군	1,396.3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3,042.4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5,112.5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5,409.7
강릉시	1,040.8	강릉시	1,040.8
원주시(갑)	461.2	원주시(갑)	461.2
원주시(을)	407.1	원주시(을)	407.1

〈표 4〉 경상북도 선거구 면적의 비교

제20대 선거구	면적(km ²)	제21대 선거구	면적(km ²)
안동시	1,522.1	안동시·예천군	2,183.6
영주시·문경시·예천군	2,243.6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3,678.3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3,889.9	상주시·문경시	2,166.7
영덕군·울진군·봉화군·영양군	3,749.5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3,376.5
경산시	411.8	경산시	411.8
경주시	1,324.9	경주시	1,324.9
구미시(갑)	75.1	구미시(갑)	75.1
구미시(을)	540.2	구미시(을)	540.2
김천시	1,009.9	김천시	1,009.9
영천시·청도군	1,613.1	영천시·청도군	1,613.1
포항시 북구	736.6	포항시 북구	736.6

제20대 선거구	면적(km ²)	제21대 선거구	면적(km ²)
포항시 남구·울릉군	467.0	포항시 남구·울릉군	467.0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451.2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451.2

〈표 5〉 전라남도 선거구 면적의 비교

제20대 선거구	면적(km ²)	제21대 선거구	면적(km ²)
순천시	910.9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860.5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454.5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1,504.9
목포시	51.7	목포시	51.7
여수시(갑)	184.0	여수시(갑)	184.0
여수시(을)	328.3	여수시(을)	328.3
나주시·화순군	1,395.5	나주시·화순군	1,395.5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594.7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594.7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840.1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840.1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718.5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718.5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880.7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880.7

<표 3>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서 선거구의 재조정이 가장 많았던 강원도의 선거구 변화현황과 그 면적을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상당히 복잡한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 강원도 지역의 거대선거구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에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 면적이 $5,927km^2$ 로 너무 거대했고, 이에 못지않게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 면적도 $5,112km^2$ 에 달하여 이러한 크기를 축소시키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생활권 영역 불일치의 문제도 고려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가 $5,409km^2$ 로 여전히 거대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그 정도로 큰 선거구가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선거법 부칙 제2조 특례조항까지 신설하여 춘천시의 25개 면과 동 중에서 19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선거구를, 춘천시의 6개 면과 동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과 함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다(김종갑·허석재 2020). 이것은 기존의 춘천시를 분할하여 일부 지역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에 붙인 것으로 기존의 선거구 획정 원칙이었던 행정구역 분할금지를 어긴 사례이다.

<표 4>는 경상북도 지역 선거구 변화현황과 면적을 비교해서 정리한 것으로 경상북도 지역도 강원도보다 1개 적은 4개 선거구가 통폐합, 재조정을 거쳤다. 이 지역 또한 강원도 못지않게 거대선거구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활권 영역 불일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를 보면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가 $3,890km^2$, 영덕군·울진군·봉화군·영양군 선거구가 $3,750km^2$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큰 면적의 선거구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3,679km^2$,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는 $3,377km^2$ 로 강원도와 비교해볼 때 현저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동시 선거구가 안동시·예천군 선거구로 재조정됨에 따라 선거구 크기가 더 커지기도 했다. 경상북도 지역은 선거구 재획정에 있어서 생활권 영역을 조화시키는데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전라남도 지역 선거구 변화현황과 면적을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며, 전라남도 지역은 기존의 순천시 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를 재

조정하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를 신설했다. 문제는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순천시의 전체 24개 읍·면·동 중에서 23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로 배정하고, 순천시 해룡면만 기존의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와 통합하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김종갑·허석재 2020). 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분할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전라남도의 선거구 재조정에는 제로섬 상황이라서 한쪽 선거구의 면적이 줄어든 대신 다른 선거구의 면적은 늘어나게 되었다.

<표 6>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 면적의 기술통계

	선거구 면적 평균(km^2)	제20대 선거구 면적 표준편차	제21대 선거구 면적 표준편차	표준편차 증감
강원도	2,103.7	2,012.3	1,701.8	-310.5
경상북도	1,464.2	1,156.3	1,082.5	-73.8
전라남도	1,235.9	798.2	801.3	3.1

<표 6>은 농산어촌 지역인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 선거구 면적의 변화를 기술통계로서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세 지역 모두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의 평균적인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다. 강원도 지역의 8개 선거구의 평균 면적은 $2,104km^2$ 로 가장 커서, 여전히 서울특별시 전체 선거구 49개의 면적인 $605km^2$ 의 3.5배에 달한다. 경상북도 지역 13개 선거구의 평균 면적은 $1,464km^2$ 로 서울시 전체의 2.5배의 크기이다. 전라남도 지역 10개 선거구의 평균 면적은 $1,236km^2$ 로서 농산어촌 지역 인구유출로 인한 거대선거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의 증대는 선거구 면적의 크기가 얼마나 동등한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면적의 표준편차로 측정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강원도의 8개 선거구, 경상북도의 13개 선거구, 전라남도의 10개 선거구의 면적 크기를 각 지역별로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제20대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와 제21대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증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지역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별 면적의 표준편차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상북도 또한 상당히 감소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선거구별 면적의 표준편차가 약간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순천시 1개 면을 기존의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와 통합하여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로섬 상황으로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가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다. 큰 폭의 선거구 통폐합, 재조정이 있었던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기존과 비교하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으며, 인구대표성의 관점과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바라보았다.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정수가 동일하게 유지된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했으며, 해밀턴 방식과 획정지수로 인구대표성의 개선을 비교 평가했다. 또한 지역대표성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 선거구 면적을 제시하고 재획정된 농산어촌 지역에서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 증감을 비교해서 지역대표성의 개선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인구대표성 관점의 평가와 지역대표성 관점의 평가를 결합시키고, 여전히 평가기준이 모호한 지역대표성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의가 있다.

먼저 인구대표성의 관점에서는 해밀턴 방식의 의석배정 평가와 획정지수 방식

의 의석배정 평가를 비교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대표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살펴 보았다. 해밀턴 방식의 의석배정 결과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의 과소 대표가 심각한 수준이며, 호남지역이 과대 대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선거구 의석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와 농산어촌 지역인 도지역으로 나뉘었을 때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서울과 부산이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도지역의 과소 대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획정지수 방식의 의석배정 평가로 봐도 과소 대표 지역과 과대 대표 지역은 거의 일치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비교해봤을 때 대전, 대구, 경북 순으로 중립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경기, 서울, 부산, 전북, 울산, 전남 순으로 오히려 중립적 대표정도에서 떨어진 지역들도 나타났다.

지역대표성의 관점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거대선거구에서 일어난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선거구 면적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살펴보았다. 선거구 재조정이 일어난 농산어촌 지역인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선거구에서 각 지역별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로 비교한 결과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의 표준편차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지역대표성이 이전과 비교해서 증가되었다. 이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거대선거구의 감소 필요성과 생활권 영역 불일치의 문제를 고려했으며, 그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거대선거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표의 등가성 원칙에 의한 인구대표성 우선의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기계적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면서 선거구 면적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대해 거대선거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 선거구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결정해서 생활권역이 다르고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적 지역정체성이 없는 지역들이 한데 묶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의원과는 달리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delegate)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구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과 비교할 때 선거구 면적이 큰 지역은 유권자에 대한 대표의 반응성이나 대표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거구 면적 편차가 줄어든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를 보면 거대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지역대표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 면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고려된 것은 거대선거구를 줄이는데 있어서 면적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묶이는 지역 정체성도 고려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중 경상북도의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안동시·예천군, 상주시·문경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2008년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가 안동시-예천군 일대로 확정되어, 2016년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 지역에 경상북도 도청이 건립되었다. 현재 이 일대에 경상북도청 신도시를 건설중이기 때문에 제21대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안동시·예천군 선거구로 변경된 것은 이러한 생활권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주시와 문경시는 예천군과 더불어 도농연계생활권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주시는 기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 속해 있었고, 문경시는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생활권역을 반영하여 더 적합하게 조정되었다. 선거구 지역대표성의 다른 관점인 생활권역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역사·문화적, 경제적, 교통의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생활권역 문제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며, 거대선거구 이슈를 다룰 때 선거구 내에서 지역 유권자들 사이의 갈등, 선거구 내 소지역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역에 대한 고려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며,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제20대 국회 선거구 획정 결과보다는 제21대 국회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지역대표성은 개선되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선거구 경계의 연결성과

선거구 모양의 조밀성을 다루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지만, 본 연구는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에 치중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국의 선거구 게리멘더링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사실 지역대표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가 확대되어야 가능하다. 농산어촌 지역 거대선거구 문제와 생활권역 반영의 문제는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에 맞추기 위해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모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원정수를 늘린다면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구역을 무리하게 통합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거대선거구 발생도 방지하고, 무리하게 인접지역들을 통합하지 않아도 되니 생활권역도 더 반영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의회가 단원제라는 구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불균형,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로 국회 의원정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조화가 쉽지 않다.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서 인구대표성이 우선시되면서 지역대표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더 심해지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노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며,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인구 감소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수도권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여타지역은 결국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 문제를 다루면서 거대선거구의 개선을 분석했지만, 그 근거에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거대선거구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문제는 단순히 제도개선의 차원을 떠나 인구 구조와 지역의 미래를 결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5.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 쟁점과 과제.” 『의정연구』 21집 2호, 5-32.
- 강휘원. 20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한국정치연구』 24집 2호, 121-149.
- 김감영. 2021. “인구대표성 강화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의 공간적 변화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10집 2호, 293-308.
- 김명진·김감영. 2013. “공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용인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8집 3호, 387-401.
- 김정도. 2015. “표의 증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측정과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9집 4호, 267-299.
- 김정도·김정일. 2018. “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증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4집 1호, 241-276.
- 김종갑. 2018.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 및 고려사항.” 『이슈와 논점』 1513집, 1-4.
- 김종갑·허석재. 2020.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700집, 1-4.
- 김지윤. 2013. “선거구 재분배와 재획정: 증가성과 정책적 함의.” 김지윤 편. 『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제언』, 115-130.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문은영. 2020. “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2집 1호, 31-59.
- 송병권. 2018.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당파적 게리맨더링 분석: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7집 4호, 43-68.
- 윤종빈. 2013. “선거구획정 제도의 쟁점 및 과제.” 김지윤 편. 『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제언』, 94-114.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_____. 2017.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대정치연구』 10집 2호, 131-156.

- 윤지성. 2017. “교차압력과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제14~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6집 3호, 5-45.
- _____. 2019. “제7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의 변화: 영호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교차압력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소 편. 『민주주의의 두 얼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유권자, 정당 그리고 사회통합』, 157-179. 서울: 푸른길.
- _____.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정연구』 26집 2호, 6-33.
- 이상학·이성규. 2016.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의정논총』 11집 1호, 69-92.
- _____. 2017.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입법과 정책』 9집 1호, 79-105.
- _____. 2020.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에 대한 측정과 평가.” 『제도과 경제』 14집 3호, 1-21.
- 이재묵. 2016.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동서연구』 28집 1호, 1-28.
- 이정섭·지상현. 2021.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5집 4호, 431-445.
- 정준표. 2010. “현행 기초의원 선거의 선거구제: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347-370.
- 지병근. 2021. “선거구 획정의 정치 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집 1호, 107-144.
- 홍재우.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과정 및 평가.” 『의정연구』 22집 1호, 6-46.
- Bullock III, Charles S. 2021. *Redistricting: The Most Political Activity in America*. 2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 Butler, David, and Bruce E. Cain. 1992.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 Grofman, Bernard, Arend Lijphart, Robert McKay, and Howard A. Scarrow. 1982.

- Representation and Redistricting Issues*. Lexington: Lexington Books.
- Ladewig, Jeffrey W., and Mathew P. Jasinski. 2008.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nd Remedies for Interstate Malapportionment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erspectives on Politics* 6(1): 89-107.
- McCubbins, Mathew D., and Thomas Schwartz. 1988. "Congress, the Courts, and Public Policy: Consequences of the One Man, One Vote Ru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388-415.
- Pildes, Richard H., and Richard G. Niemi. 1993. "Expressive Harms," Bizarre Districts," and Voting Rights: Evaluating Election-District Appearances After Shaw v. Reno." *Michigan Law Review* 92(3): 483-587.
- Polsby, Daniel D., and Robert D. Popper. 1991. "The Third Criterion: Compactness as a Procedural Safeguard against Partisan Gerrymandering." *Yale Law & Policy Review* 9(2): 301-353.
- Rallings, Colin, Michael Thrasher, Ron Johnston, and James Downe. 2004. "Redistricting Local Governments in England: Rules, Procedures, and Electoral Outcome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4(4): 470-490.

투고일: 2023.02.15.	심사일: 2023.03.21.	게재확정일: 2023.04.12.
------------------	------------------	--------------------

The Evaluation of Redistricting of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Districts: Focusing on Population Representation and Regional Representation

Yoon, Jisung | DGIST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 of the redistricting of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quas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eats was determined the same as before because of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As the number of seats in regional constituencies was also the same a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environment was created to objectively analyze the effects of redistrict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representation, the under-representation of Gyeonggi region is serious, and the Honam region is over-represented, so the adjustment of the number of constituencies by region is necessary. When divided into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contrary to the existing view, Seoul and Busan are rather over-represented, and provinces are under-represented. When comparing the area of each constituency in the redistricted areas, the standard deviation was decreased, so it can be evaluated as improved than the previous election in terms of regional representation.

Key Words | Congressional Election, Redistricting, Population Representation, Regional Representation

한국의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주요 계열 정당에 미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박지선 | 오카야마 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한국 주요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의 개방성 차이가 정당에 미친 장기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2000년대 초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 도입 이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보수당계와 민주계 정당의 프라이머리제도의 발전 및 차이, 그리고 양 계열정당의 변화 (조직 수준, 정부 내 수준, 유권자 내 수준)를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동 제도가 정당조직에 끼친 장기적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분석 결과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계는 일반유권자 참가 투표가, 보수당계는 당원투표와 함께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세 정당 수준에서 보수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반유권자에 의한 투표가 여론조사에 비하여 조직 및 유권자 내 정당에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제어 | 프라이머리, 정당모델, 조직으로서의 정당, 유권자 내 정당, 공직후보선출

1. 서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당은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익의 표출 및 집약, 사회적 갈등 조정 및 통합 등 정당의 다른 기능과는 달리 정치 엘리트 충원은 정당 고유 기능으로, 각국의 여러 정당이 어떻게 정치 엘리트 충원하는가, 즉 후보선출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프라이머리를 통한 선출 과정의 민주화, 즉 선출권자의 확대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배경에는 선진 민주국가의 정당들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던 당원 및 집단과의 연계를 잃어가면서 주목을 받게 된 ‘정당 쇠퇴론’이 있었다(Cross and Katz 2013; Mair et al. 1994). 각 정당이 기존 당원과 지지자들 뿐 아니라 일반유권자들로부터 지지 및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써 후보 선출에 있어서 당원뿐 아니라 일반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Bille 2001; Scarrow et al. 2000).

한편 한국의 경우, 2002년 주요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되면서 개방형 프라이머리가¹⁾ 시작되었다. 프라이머리란 원래 미국 선거에서 실시하는 예비선거를 가리키는 용어로, 참여 범위에 따라 개방형(Open primary), 폐쇄형(Closed)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폐쇄형은 당에 가입하거나 적어도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힐 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방형은 정당 가입이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에 있어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은 여러 서구 선진 민주국가의 정당의 경우와 같이 당원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정당 내 개혁이라는 의미가 컸다.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정당 지도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공천 과정을 개혁하는 “정당 민주화” 개혁의 일부로서 개방적 프라이머리가 도입되었던 것이

1)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실시해 온 예비선거는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에 가까운 바, 본고에서는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의 프라이머리제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2장과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다(박찬표2016).

이렇게 도입된 주요 정당의 개방적 프라이머리제도는 현재 약 20년이 지나오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채택됐으며, 이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는 크게 프라이머리 자체에 관한 연구와 프라이머리의 영향에 관한 연구, 둘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프라이머리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어떠한 경위로 특정 제도가 도입되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있다(김형준 2010; 박수형 2014; 이동윤 2008). 한편 프라이머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 및 결과(김하나·박원호 2016; 전용주 2005; 정주신 2017등),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가림·조원빈 2022; 전용주·공영철 2012), 유권자의 인식(한정훈 2017)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시도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머리제도의 발전과 이러한 제도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해 충분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기 혹은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적 영향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²⁾ 후술하는 대로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에 미치는 종합적,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2000년대 열린우리당의 개혁 이후, 공천 개혁을 둘러싼 정당모델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박찬표2012; 채진원 2015; Chung 2012), 이 역시 실증적 연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방적 프라이머리가 도입된 이후 약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당의 프라이머리제도의 발전과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정당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년간 민주 계열과 보수계열 정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실시한 프라이머리를 검토하고 동 제도가 양 계열 정당의 조직적 특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 연구에서

2) 제도의 발전에 대한 대표적 실증 연구로서는 대통령 선거 프라이머리에 대한 박찬표(2016),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 선거의 프라이머리에 관한 성치훈·진영재(2016) 등이 있다.

시계열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한국의 정당 특성상 이합집산이 많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계열 정당의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정당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의 세 가지 영역(조직, 정부 내, 유권자 내)에 있어서 변화를 알아본다.

본 논문의 목표는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주요 정당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4, 5장에서 논의하듯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정당의 변화에 관련된 변수들은 프라이머리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종합적으로 정당에 있어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끼쳤는지, 그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한정시켜, 각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의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3장의 방법론에서는 한국의 프라이머리제도의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정당의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지난 20년간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서 양 계열 정당이 어떠한 개방형 프라이머리를 실시했는가를 알아보고, 한국에 있어서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얼마나 제도화되었는가를 고찰한다. 5장에서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양 계열 정당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와 정당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연구

다양한 프라이머리제도를 전제로 비교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대표적 연구로 Hazan and Rahat (2010), Rahat and Hazan(2001)이 있다. 그들은 선출권자의 구

성에 따라 프라이머리의 포괄성(inclusiveness)과 배타성(exclusiveness)을 구분했다.³⁾ 즉, 선출권자가 일반유권자나 혹은 모든 정당원인 경우는 ‘포괄적’,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나 소수 혹은 한 명의 정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배타적’이라 구분한다. 또한 프라이머리제도의 포괄성 (혹은 배타성)이 정당 전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포괄적 프라이머리가 정당정치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다. 우선 정치 참가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 선출권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개방하면,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 후보 선출에 참여할 유인은 높아지는 한편 당의 활동가들의 참가 유인은 낮아져, 수동적이고 일시적 당원들을 양산하면서 정치 참가의 ‘양’은 늘어나지만 ‘질’은 줄어 들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표성 및 응답성, 그리고 당내 경쟁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포괄적 프라이머리로 인해 정치적으로 정당과 연결되지 않은 지지자들이 후보 선출에 관여하게 되면서, 선거는 정당이 아닌 개별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비 후보자들은 정당 지도부보다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 후보자들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일반 당원과 유권자를 대표하며 그들의 정책 선호에 응답하려 한다. 그 결과 정당 내의 통일성(unity) 및 응답성은 저하되고 당내 경쟁은 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정당 쇠퇴의 문제를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Gallagher and Marsh 1988; Pennings and Hazan 2001; Spies and Kaiser 2014).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의 도입이 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훈(2002)은 2002년 대선 관련 새천년민주당의 사례를 통해, 대선후보와 일반당원 및 유권자 간 관계는 긴밀하게 되었으나 대선후보와 정당 엘리트(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간의 관계가 느슨

3) 그들은 선출권자 외에도 피선거자(Candidacy), 분권화(Decentralization), 임명 및 투표 시스템(Appoint and Voting System) 등을 기준으로 프라이머리제도를 유형화했다.

해진 결과 정당 엘리트 간 불안정한 합종연횡이 지배하는 체제가 등장했다고 보았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다양한 개혁 안에서 국민 참여 경선제도의 도입을 분석한 박찬표(2012) 역시 열린우리당의 정당 개혁이 당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국민 참여 경선제는 유권자 내 정당 영역에 있어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의 확보’를 목표로 한 개혁으로 약 184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그 과정에서 동원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유권자 내 정당을 해체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프라이머리제도와 조직 구조(정당모델)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⁴⁾ 박경미(2008; 2012)는 후보 선출 방식이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바 조직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가장 고전적인 정당 유형인 간부정당(cadre party)은 간부 자신을 선출하고, 대중정당(mass party)은 당원을 대표하는 후보를 선출하며(박경미 2008, 45),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은 유권자여론층을 대표하는 원내당원 및 전문경력자(박경미 2012, 40)를 선출하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라이머리제도를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는 적극적 당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리더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대중정당이 아닌 선거전문가정당모델에 가까운 정당모델을 구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에서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내 정당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만들어낸다는, 즉 정당을 강화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Chung(2012)은 정당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는 다차원적 분석틀(Key 1964)을 사용하여,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의 도입이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약화할 수 있으나, 정부 내 및 유권자 내 정당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4) 프라이머리제도와 당조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머리제도가 당 조직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 조직이 프라이머리제도에 끼치는 영향 역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대 계열 정당의 16대부터 18대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비교한 박찬표(2016)는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조직의 약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경우, 정당조직의 취약성이 개방적 프라이머리제도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당의 세 영역이란 정당을 조직(*party as organization*), 정부 내(*party in government*), 유권자 내(*party in the electorate*)을 가리킨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란 당원 및 활동가 등 당 소속 행위자들로, 정부 내 정당이란 당적을 가지면서 의회 및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및 장관 등으로, 유권자 내 정당이란 당에 소속하지 않고서도 지지 및 당의 결정에 관여하는 유권자로 구성되는 개념이다.⁵⁾ 즉,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는 일반 유권자들 안에 존재하는 지지자들을 공식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권자 내 정당을 강화하고, 강화된 후보와 유권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내 정당과 긴밀히 연계된 정당모델(유권자정당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민 2011, 153). 채진원(2015) 역시 ‘당원의 역할축소’, ‘정당 정체성의 약화’, ‘진성당원제도의 약화’ 등은 대중정당모델에서 강조되는 당 조직임을 지적하고,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시민운동, 생활정치, 유권자운동 등 비관습적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당모델(원내정당모델, 유권자정당모델, 네트워크정당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개방형 프라이머리의 한 형태로서 선거인단의 개방뿐 아니라 여론조사가 정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개방형 프라이머리가 도입되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도입되어 다양한 선거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원택(2009)은 양 계열 정당이 다양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 ‘동원에 대한 의구심, 즉

5) 정당을 이러한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는 분석들은 원래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어프로치로서 Key(1964) 이후 Mair (1994), Dalton and Wattenberg (2002), Strom and Svåsand (1997) 등 정당의 변화를 다루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Chung(2012)은 이러한 기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집단의 영향력을 변수를 통해 수치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본 논문도 이러한 어프로치를 차용하여 정당의 세 영역의 강화/약화를 비교한다.

당내 선거인단 참여의 자발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당원 및 유권자에 의한 프라이머리 아래, 현역 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동원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정당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으며, 당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바 이러한 문제를 여론조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는 여론조사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와는 달리, 여론조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권 외부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되는 등 정당 정치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정당 조직적 측면에서는 “이념적, 정책적 측면에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당원이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133-134).⁶⁾ 또한 박명호(2011) 역시 여론조사가 조직으로서의 정당에 안 좋은 가능성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 내 정당의 강화 역시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선호 표현은 유권자의 선호 반영을 통한 참여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의 도입이 당 조직에 끼친 장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직, 정부 내, 유권자 내의 세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개방형 투표와 여론조사가 세 영역에 끼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방형 투표 프라이머리의 경우,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약화를, 정부 내 및 유권자 내 정당의 상대적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론조사의 경우는 조직으로서의 정당 및 유권자 내 정당을 약화시킬 것이다.

6) 윤왕희(2017, 64)는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 경선을 채택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경우 새누리당의 책임당원의 경선 참여율은 0.6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당원을 배제하는 조치였다고 분석한다.

Ⅲ. 연구방법 및 데이터: 양대 정당의 비교

본 논문은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한국 정당에 끼친 장기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프라이머리제도가 도입된 후, 양 계열 정당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제도의 발전과 조직, 정부 내, 유권자 내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연구대상으로 양 계열 정당을 선정한 이유는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한국 정당에 끼친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정당의 이합집산 및 선거 유동성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계열과 민주당계열 정당에 의한 ‘실질적 양당제’를 보여 왔다(허유정·윤광일 2021). 구체적으로 보수 계열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자료를, 민주 계열 정당으로는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본 논문은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도 도입 전후의 정당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이후 정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각 변수의 상대적 변화를 추적한다. 제4장에서 살펴보듯이 양 계열 정당의 프라이머리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진화)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0년대 초반이 민주화 이후 소수 정치가(3김)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이루었던 정당들이 처음으로 당내에서 지도자를 육성, 배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제도의 변화 및 정당의 여러 측면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이 본 논문이 제한적이거나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정당의 변화에 끼친 장기적, 거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라이머리제도가 도입된 2002년 16대 대통령 후보 선정 이후의 약 20년 동안을 분석한다.

우선 양 계열 정당의 프라이머리제도의 발전을 알아보기 위해 동 제도를 누가 공천권을 가지는가와 함께 선거인단의 규모를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투표

와 여론조사를 나눠서 유형화했다(김형준 2010; 박찬표2016 등)(표1). 즉, 투표의 경우, 당원만 참여 가능한가, 일반국민도 참여가능한가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한 다음, 이에 맞춰 선거인단 규모를 제한하는가 제한하지 않는가에 따라 부분형과 완전형으로 분류했다(표1-1). 또한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당원만일 경우에는 폐쇄형, 일반국민인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분류했다. 여론조사는 투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가 제한되는바, 추가적 제한 조치(예를 들어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가 행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부분형을 추가했다(표 1-2).

〈표 1〉 프라이머리제도의 분류

〈표1-1〉 투표 분류

	당원 참여	일반국민 참여
선거인단규모 제한	완전폐쇄형	부분개방형
선거인단규모 무제한	부분폐쇄형	완전개방형

〈표1-2〉 여론조사 분류

	당원 참여	일반국민 참여
조사대상자 구성 관련 추가조치 있음	폐쇄형	부분개방형
조사대상자 구성 관련 추가조치 없음	부분폐쇄형	개방형

한편 정당에 끼친 거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의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하(표 2)와 같다(Chung 2012).⁷⁾

7) 이러한 변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다차원적 분석틀(조직, 정부 내, 유권자 내 정당)의 방법을 가지고 선진민주국가와 후발민주국가를 분석한 Chung(2012)의 연구에서 가지고 왔다. 단, 장기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권자 내 정당과 관련 당파심(Partisanship)이나 정당에 대한 신뢰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프라이머리에 대한 참여 및 정당지지도로 대체했다.

〈표 2〉 정당의 세 영역의 변수 및 데이터 출처

	변수	출처
조직으로서의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수 대비 당원비율 · 총당원수 대비 당비납부 당원비율 · 정당수입 대비 당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개황
정부 내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총수입 대비 정부보조금 비율 · 정당 지도부 내 국회의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개황 · 지도부 선출 관련 신문 기사 및 각 정당 홈페이지 자료
유권자 내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지도 · 대통령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유권자 및 당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갤럽(https://www.gallup.co.kr/) · 대통령 예비선거 관련 신문 및 정당 자료

우선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변수로는 유권자 수 대비 당원비율, 당비납부 당원비율, 당수입에 있어서 당비 비율 등이 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확대/감소는 당원 수, 특히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의 수 및 비율이 기본이며, 그들이 납부하는 당비가 실질적으로 당 재정을 담당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정당 유급 직원수는 한국의 경우 정당법으로 규정되어온 바 분석에 넣지 않았다. 각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이하, 정당개황)에서 가져왔다. 정당개황은 정당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당원 관련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정진웅 2021), 20년 동안 양 계열 정당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 수치의 정확성보다 상대적 수치 및 변화가 중요한바 동 자료를 사용한다. 동 자료는 장기간 동안 양 계열 정당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 내 정당의 확대/감소를 알아보기 위해 정당의 총수입 대비 정부보조금 비율과 정당 지도부 내 국회의원 비율을 살펴본다. 중앙당이 재정적, 인사

적으로 얼마나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러한 변수들은 정부 내 정당의 상대적 변화를 가늠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Chung, 2012). 국고보조금의 크기 자체는 현직 의원들 수, 즉 선거의 결과에 따라 증감하나, 당 총재정에 있어서의 비율 변화도 반드시 이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없다.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수치는 선거의 결과나 제도 변화로 인해 크게 변화하지만, 당 전체 수입 역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 지도부 내 국회의원 비율도 마찬가지로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 수는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도부 내 국회의원 비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는 재정 관련은 정당개황에서, 지도부 선출 관련 자료는 신문기사 및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내 정당에 입당신청서를 작성하고 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이 얼마나 자리잡았나를 파악함으로써 정당의 제도화 정도를 살펴본다. 관련 변수로는 한국갤럽에서 수집한 4분기 정당지지도 데이터와 대통령 예비선거 관련 신문 기사 및 정당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필자가 정리한 대통령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유권자 및 당원 수를 사용한다.

IV. 양대 계열정당의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의 비교

이번 장에서는 양대 계열정당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프라이머리제도의 발전을 살펴본다. 우선, 대통령 프라이머리에 있어서 보수당의 제도 발전(표3-1)을 보면 16대 대통령선거 시 부분개방형 투표로 시작해, 17대부터 투표와 함께 개방형 여론조사(일반국민 6,000명 대상으로 한 전화)를 도입했으며, 19대부터는 부분폐쇄형 투표로 전환하여 여론조사와 함께 최근 20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선거인단의 구성은 16대 대의원(30%), 당원(20%), 일반국민(50%), 17·18대 대의원(2/8), 당원(3/8), 일반국민(3/8)을 거쳐, 19·20

한국의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주요 계열 정당에 미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예비적 고찰 131

대에는 100% 대의원 및 책임 당원이 되었으며, 여론조사 비중은 17,18대에 20%에 불과했으나 19, 20대에는 50%로 늘어났다.

〈표 3〉 대통령 프라이머리에 있어서 양당 비교

〈표 3-1〉 2002년 이후 보수계열정당의 개방형 프라이머리 발전

	한나라 (16대)	한나라 (17대)	새누리 (18대)	자유한국 (19대)	국민의힘 (20대)
특징	부분개방형 투표	부분개방형 투표+ 개방형 여론조사		부분폐쇄형 투표+개방형 여론조사	
최종경선 방식	선거인단투표	선거인단 투표(80%), 여론조사(20%)		선거인단 투표(50%), 여론조사(50%)	
선거인단 구성	대의원(30%), 당원(20%), 일반국민(50%)	대의원(2/8), 당원(3/8), 일반국민(3/8)		대의원, 책임당원	
여론조사	-	일반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표 3-2〉 2002년 이후 민주계열정당의 개방형 프라이머리 발전

	새천년 (16대)	대통합민주신 (17대)	민주통합 (18대)	더불어 (19대)	더불어 (20대)
특징	부분개방형 투표	완전개방형 투표 + 개방형여론조사	완전개방형 투표		
최종경선방 식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투표 (90%), 여론조사(10%)	선거인단 투표		
선거인단 구성	대의원(20%), 당원(30%), 일반국민(50%)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 재외국민		
여론조사	-	일반국민 5,000명 대상	-		

출처: 박찬표(2016, 68), 우은희·박지선(2022)

한편, 민주계열 정당의 경우, 보수계열과 마찬가지로 16대에 부분개방형 투표를 도입했으나, 17대부터는 완전개방형 투표로 전환하여 이것이 최근 20대까지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의 경우 17대에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18대부터는 이마저 없어서, 100% 선거인단 투표에 의한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에 있어서 양 계열 정당의 제도 운용을 살펴보자. 보수당의 경우(표 4-1), 17대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상 처음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에 제한을 둔 부분개방형 투표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18대에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19대에는 부분개방형 투표와 함께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21대에는 투표가 사라지고 여론조사만 이루어졌다. 프라이머리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17대에 약 6.6%, 18대 0%, 19대에 약 20%이다. 이후 20대가 최고인 약 56%를 기록했으나, 21대에 약 20%로 떨어졌다.

한편 민주계열 정당의 경우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부분폐쇄형 및 부분개방형 투표와 함께 부분폐쇄형 및 개방형 여론조사가 일부 도입됐다. 18대에는 보수 계열 정당과 마찬가지로 100%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졌으나 19대에는 모바일 및 현장 투표를 통한 완전개방형 투표 및 개방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대에는 개방형 여론조사만을, 21대에는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한 부분폐쇄형투표(50%)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여론조사(50%)를 같이 실시했다. 경선 실시 비율을 보면 17대가 약 33.6%, 18대 0%, 19대 약 32.1%, 20대 약 23.9%, 마지막으로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와 여론조사를 1대1로 도입한 21대가 최고 기록으로 약 43.9%를 기록했다.

〈표 4〉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에 있어서 양당비교

〈표 4-1〉 2004년 이후 보수계열정당의 개방형 프라이머리 발전

보수당계	한나라 (17대)	한나라 (18대)	새누리 (19대)	새누리 (20대)	미래통합 (21대)
특징	부분개방형 투표		부분개방형투표, 개방형여론조사	(부분) 개방형 여론조사**	개방형여론 조사
경선 방식	국민참여경 선(당원 10%, 일반 유권자 90%)	하향식	1500명 규모 선거인단(당원 20%, 일반국민 80%), 여론조사	여론조사(국 민 100%, 당원 30% 국민 70%)	일반국민여론 조사(100%)
실시 비율(%)	15 (6.58%)	-	47 (20.4%)*	140(56.4%)	83(35.32%)

〈표 4-2〉 2004년 이후 민주계열정당의 개방형 프라이머리 발전

민주당계	새천년 (17대)	통합민주 (18대)	민주통합 (19대)	더민주 (20대)	더민주 (21대)
특징	부분폐쇄/부분개 방형투표, 부분폐쇄/개방형 여론조사		완전개방형투 표+개방형여 론조사	개방형여론 조사	부분폐쇄형 투표+ 개방형여론 조사
경선 방식	당원경선, 국민참여 경선(당원 50%, 일반유권자 50%), 당원 혹은 일반유권자에 의한 여론조사	하향식	국민경선(모 바일투표+ 선거인단 현장투표+ 여론조사)	여론조사 (국민 100%)	권리당원 투표(50%), 국민여론조 사(50%)
실시비율(%)	73(33.6%)	-	79 (32.11%)	56(23.93%)	111(43.87%)

출처: 김영태(2004), 김한나·박원호(2016), 박경미(2008), 연합뉴스(2016), 윤왕희(2017), 윤종빈(2012), 이가림·조원빈(2022), 전용주·공영철(2012), 정주신(2017), 허진(2020)

* : 이중 선거인단 경선은 14,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

** : 원칙은 당원 30% 국민 70%의 여론조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이루어짐

이상 한국의 양대 계열 정당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의 제도화를 살펴본 결과, 보수계열 정당과 민주계열 정당의 차이보다 선거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프라이머리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았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경선 실시 비율 평균이 보수계가 23.48%, 민주계가 27.7%로, 양 계열 정당 모두 당원 및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의 프라이머리 제도 보다 하향식의 공천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수계열과 민주계열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 특히 2010년대 이후 민주계는 완전개방형투표를 중심으로, 보수당계열은 부분개방형/폐쇄형 투표와 개방형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여전히 하향식의 공천이 주를 이루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보수계열 정당은 여론조사를, 민주계열 정당은 상대적으로 투표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장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위의 결과를 적용하여 비교해 보면 보수계열 정당보다 민주계열의 정당이 세 가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개방형 투표를 더 운용해온 민주계열 정당의 경우 조직 수준에서는 정당의 약화가, 정부 내 및 유권자 내 수준에서는 정당의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당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를 더욱 운용해온바, 조직수준 및 유권자 내 수준에서 정당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보수계의 개방형 프라이머리 제도가 민주계의 개방형투표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제도에 비해 정당의 세 가지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양 계열 정당의 시계열 변화 비교

이번 장에서는 조직, 정부 내, 유권자 내 영역에 있어서 양계열 정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3장에서 설명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와 함께 장기적 경향을 보기 쉽도록 직선 추세선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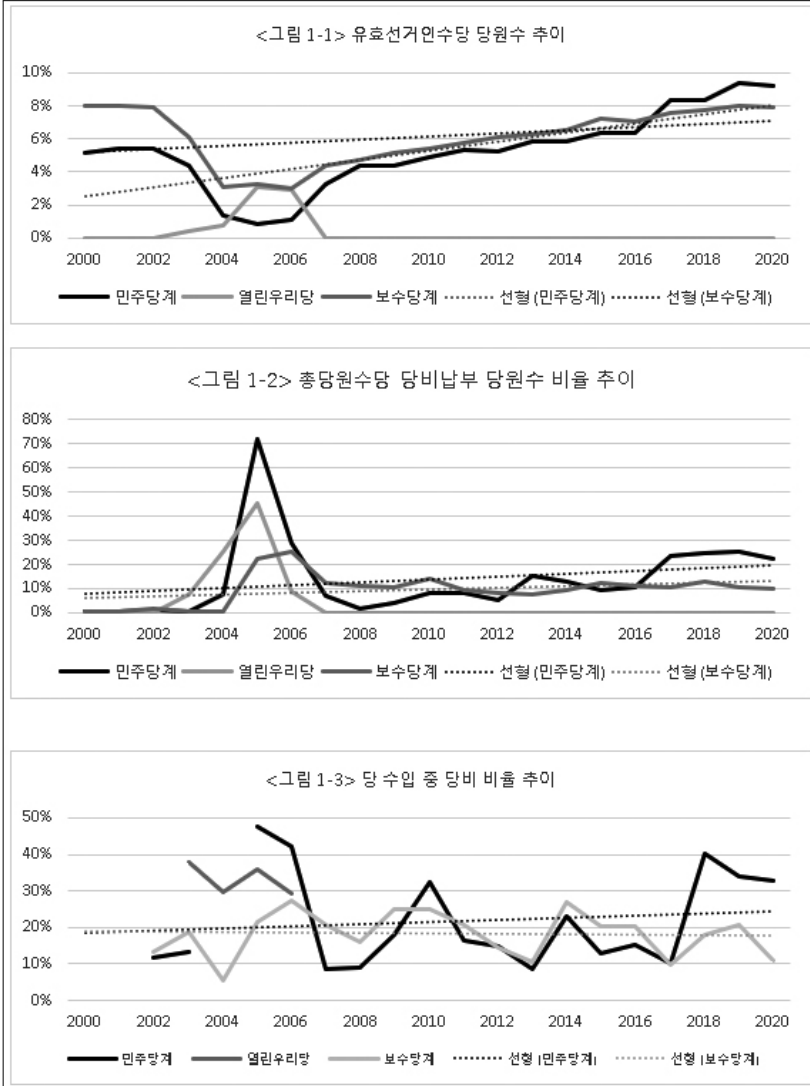
1. 조직으로서의 정당

우선 양계열 정당의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변화(그림1)를 살펴보기 위해 이하 세 개의 통계 수치의 추이를 살펴보자. 첫째, 유효선거인수당 당원수 비율(그림 1-1)의 추세를 보면 양당 모두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계가 보수계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5%대(민주계)와 8%대(보수계)를 기록하던 당원 비율은 민주당의 분열 및 탄핵,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크게 떨어졌다(민주계: 1%대, 보수계: 3%대) 2008년을 계기로 회복세에 들어가, 이후 양 계열정당 모두 완만하게 증가했다. 민주계 당원 비율은 2007년 대선 및 2016년 탄핵 이후를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민주계(8.36%)가 보수계(7.77%)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추세선 역시 민주계의 기울기가 보수계보다 아주 약간 가파른 결과가 되었다.

둘째, 총당원수당 당비납부 당원수 비율 추세(그림1-2) 역시 양당 모두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당 모두 2000년대 초반에는 1% 전후였으나 2004~2006년의 변동기를 거쳐 2007,8년 이후 부침은 있으나 증가했다. 보수계의 경우 2007년(12.16%) 이후 10% 전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민주계는 2008년 1.41%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013년, 2017년 약 두 배씩 증가하여 2020년 22.11%를 기록했다. 그 결과 선형 추세선은 민주계의 기울기가 보수계보다 약간 가파른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당 수입 중 당비 비율(그림1-3)은 민주계가 장기적으로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보수계는 아주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비율은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나, 2002,3년도에는 양당 모두 15% 전후를 기록했으며, 이후 2007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2017년까지는 비슷한 폭으로 움직여 왔다. 2017년을 기준으로 민주계 비율이 보수계에 크게 늘어나 2020년에는 민주계가 32.84%, 보수계가 11.06%를 기록했다.

〈그림 1〉 양계열 정당의 조직으로서 당의 변화 추이 비교



출처: 정당의 활동 개황 데이터로부터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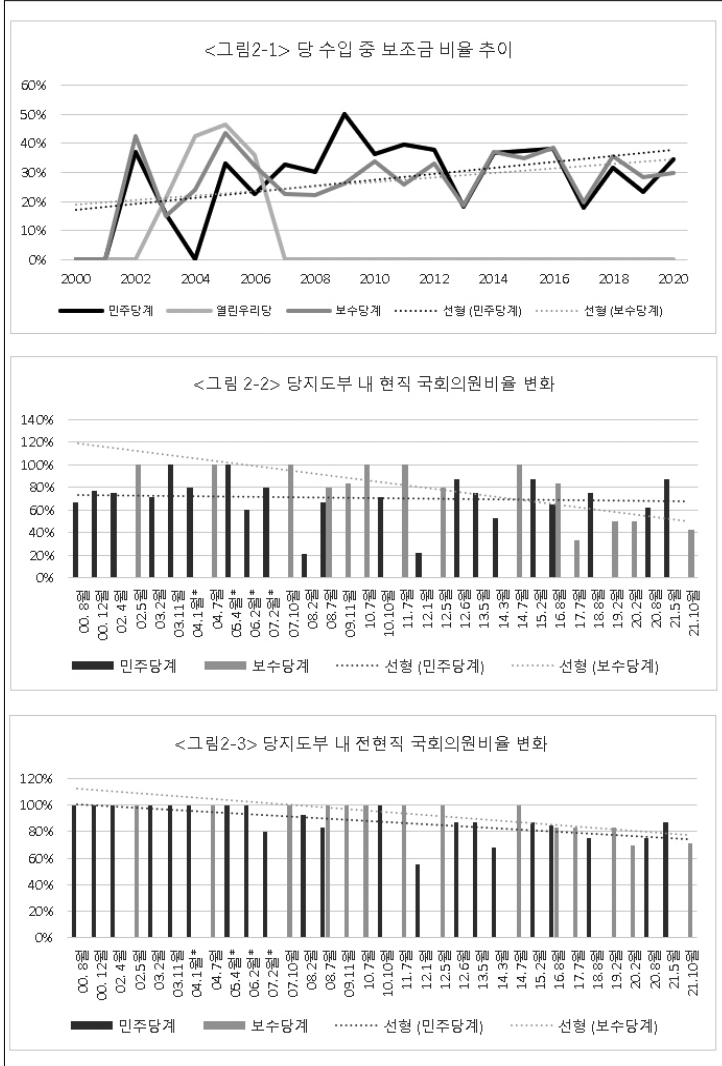
이상, 당원 비율, 당비납부 당원 비율, 당수입 중 당비 비율을 중심으로 조직으로서 양당이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민주계 정당이 보수계 정당보다 성장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의 당비납부자 비율이 대선 전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 외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사이클과 조직으로서 정당과의 연관성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2. 정부 내 정당

다음은 정부 내 정당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자(그림2). 우선 국가보조금 비율(그림2-1)은 대부분이 20%에서 40%에 위치하여,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율 역시 민주당계가 보수당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지도부 내 현직국회의원 비율(그림 2-2)은 장기적으로 민주계는 큰 변화가 없으나 보수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수계가 민주계보다 높은 시기가 많았다. 이는 2016년 이후 보수계열 정당 지도부 내 현직 국회의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탄핵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직을 포함한 비율(그림2-3)을 보면 양당 모두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100%에 가까웠던 국회의원 비율이 민주계는 2012년부터 보수당계는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직을 포함한 경우 추세선은 양당 모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감소 경향은 보수당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양계열 정당의 정부 내 정당의 변화 추이 비교



* 열린우리당 통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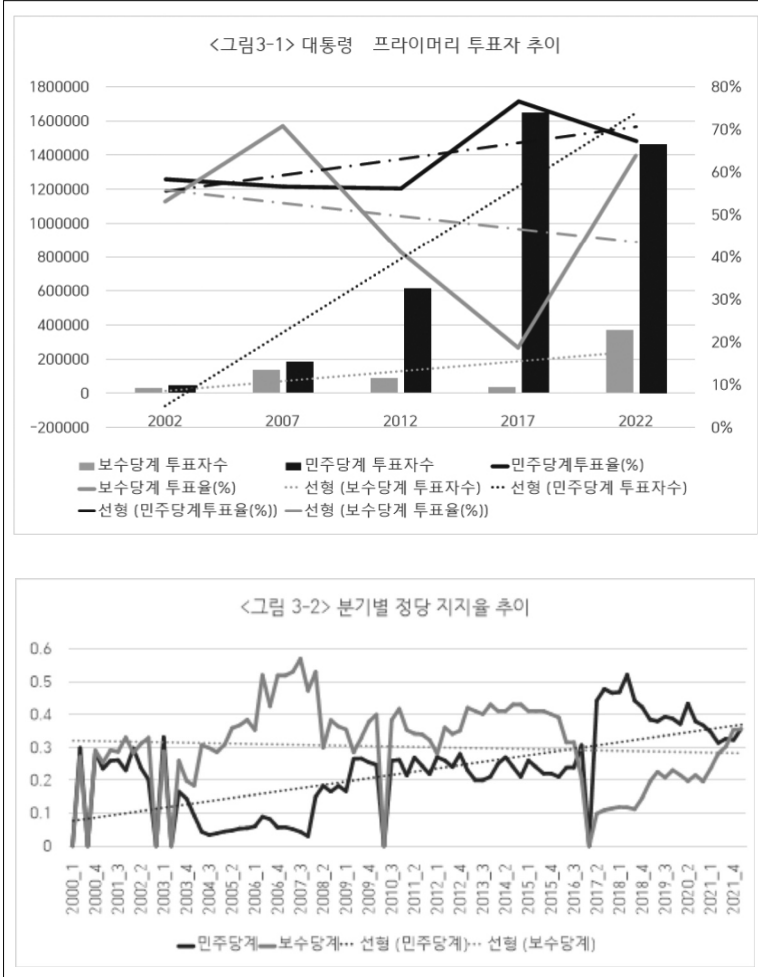
출처: 정당개황 및 신문기사, 정당자료 등으로부터 저자 작성

이상, 당수입 중 국가보조금 비율 및 당지도부 내 전현직 국회의원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중심으로 정부 내 정당 측면에서 양계열 정당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보수계가 민주계보다 약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부 내 정당에 있어서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단기적 영향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유권자 내 정당

마지막으로 유권자 내 정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3). 우선 대통령 프라이머리에 참가자수를 살펴보면 민주당계 경우 2002년(약 4만 명)부터 2017년(약 160만 명)까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났다가 2020년에는 약간 줄어들어 145만 명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0% 후반, 이후 2017년에는 약 77%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67.3%으로 약간 떨어졌다. 한편 보수계는 민주당계보다 부침이 컸다. 2002년 2만5천 명이 투표하고 2007년에는 13만 명으로 늘었으나 2012년에는 8만 명, 2017년에는 3만 명을 기록했다. 최근 2022년 선거에서는 크게 늘어 최고치로 36만 명을 기록했으나, 폐쇄형 투표제도를 선택한 만큼 민주당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숫자였다. 투표율 또한 2007년에는 70.83%로 민주당계를 뛰어넘었으나 2012년에는 약 41%, 2017년에는 약 19%를 기록했다. 최근 2022년 선거에도 63.8%로 민주당계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다. 따라서 추세선은 민주당의 경우가 투표자수 및 투표율에서 보수당계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3〉 양계열 정당의 유권자 내 정당의 변화 추이 비교



출처: 박찬표 (2016), 우은희·박지선(2022), 한국갤럽(<https://www.gallup.co.kr/>)

한편, 분기별 정당지지율(그림 3-2)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 또한 2016년 3분기부터 2018년 말까지 민주당계와 보수당계가 각각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시기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20%에서 40%사이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보수당계가 약간 감소하고 민주당계가 증가해 왔다.

이상 대통령 프라이머리 참가자 및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양계열 정당의 유권자 내 정당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민주당계가 보수당계에 비하여 크게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프라이머리 투표자 추이의 경우 투표유형(개방형 투표인가 폐쇄형 투표인가)의 차이도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단, 정당 지지율의 장기적 추세선이 민주계가 증가, 보수계가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민주당계가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고 보수당계가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시기가 2010년대 중반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VI. 논의 및 소결: 한국의 개방형 프라이머리가 주요 정당에 미친 영향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당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민주계와 보수계의 양대 계열 정당의 자료를 바탕으로 양계열정당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의 제도화와 조직, 정부 내, 유권자 내 정당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당원 부족 및 정당 민주화 등을 이유로 도입된 개방형 프라이머리 제도, 특히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투표가 도입되면, 대중 정당모델의 근간이 되는 기간 당원이나 정당 엘리트가 정당 내에서 힘을 잃어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약화될 수 있으나 유권자와 공직자 간 관계가 강화되면서 정부 내 정당 및 유권자 내 정당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또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호 표현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기 투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 조직으로서의 정당뿐 아니라 유권자 내 정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양 계열 정당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의 제도화를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 프라이머리의 제도화가 높지 않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계는 완전개방형 투표를, 보수계열은 부분개방형 혹은 부분폐쇄형 투표와 함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프라이머리를 실시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양당 비교적 측면에서 보면, 보수계의 프라이머리제도가 민주계보다 정당의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적 수치를 기반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양 계열 정당을 분석해 본 결과, 예상한 대로 보수계의 정당의 세 가지 영역의 변수들이 민주계보다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계열 정당 모두 투표와 함께 여론조사를 병행에 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세부적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 및 유권자 내 정당 수준에 있어서 양 정당은 강화되어 온 경향을 보였으며, 정부 내 정당의 경우 양당 모두 약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하와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모든 수치(당원 비율, 당비납부 당원 비율, 당수입 중 당비 비율)에 있어서 양당, 특히 민주계 정당이 강화 경향을 보인 결과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선출권을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일반유권자를 당원, 특히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당원으로 동원하려는 정당의 전략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권자 내 정당 수준에 있어서 민주계가 보수계에 비하여 크게 강화되어 왔다는 결과 역시, 일반 유권자들에게 공직선출권을 개방함으로써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권자 내 정당 수준에 있어서 보수계와 민주계의 변화 차이를 대통령선거의 프라이머리제도, 즉 폐쇄형 투표 및 여론조사와 개방형 투표의 차이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유권자에게는 번거롭더라도 진정한 선호를 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투표)이 간단하게 선호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여론조사) 보다 유권자 내에서 당원 혹은 정당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정부 내 수준에 있어서 양당 모두 약화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후발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특수성을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서구 민주주의와 같이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대중정당모델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된 이후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가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원외 정당의 약화와 함께 정부 내 정당의 강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적 인기가 높은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가(정당 엘리트)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에는 이하 두 가지 커다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양대 계열 정당의 세 가지 영역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프라이머리제도 외에 각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프라이머리제도가 양 계열정당에 미친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당비납부) 당원 비율 및 당수입 중 당비, 보조금 비중 등에 관해서는 각 당의 당원 및 당비 규정(책임/권리 당원 조건 등) 및 국고 보조금 제도,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지도부 내 국회의원 비율 등에 관해서는 당 지도부 경선 제도 등을 분석에 넣을 필요가 있다. 본고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고찰’로서 프라이머리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둘째로 본 논문은 정당 정치의 ‘양’에 대한 분석으로 ‘질’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조직으로서 정당 수준을 분석하는데 사용된 (당비납부) 당원 비율의 경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당의 ‘조직’으로서 활동하는가 여부는 논하지 않았다. 다만 데이터 자체의 여러 한계나 이들의 대부분이 특정 정치가의 지지를 중심으로 모인 소위 ‘팬덤’ 당원일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인원 및 당비 규모, 프라이머리 참가, 정당 지지도 등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는 조직 및 유권자 내 정당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정당쇠퇴론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와 당 조직의 약화를 부정하는 연구(Indriðason and Kristinsson 2015), 권리 및 의무가 가벼운 새로운 형태의 당원(멤버십)의 등장에 관한 연구(Scarrow 2015), 전통적 당 조직도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는 연구 (Allern et al. 2016; Bale et al. 2019) 등과 그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에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변화하는 정당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함께 다양한 개방형 프라이머리제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구』 14권, 35-63.
-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한국정당학회보』 3권 2호, 107-124.
- 김한나·박원호. 2016. “제 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26권 2호, 51-76.
- 김형준. 2010.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민주주의연구』 6권 2호, 35-68.
-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2호, 41-63.
- 박경미. 2012. “한국 정당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 이후 총선의 선거경쟁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권 1호, 31-57.
- 박명호. 2011.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시론.” 『미래정치연구』 1권 1호, 93-111
- 박수형. 2014. “대통령 후보선출제도 변화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8집, 197-223.
- 박찬표. 2012. “열린우리당의 정당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7호, 46-80.
- 박찬표. 2016. “국민참여경선제의 제도 차이의 발생 배경에 대한 연구.” 『미래정치연구』 6권 1호, 65-87.
- 성치훈·진영재. 2016. “한국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적실성과 보완점: ‘제도’와 ‘유권자문화’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2권 3호, 83-115.
- 우은희·박지선. 2022. “開放型の大統領候補者選定がもたらした政治的影響 —2000年代以降の韓国の主要政党の事例を中心に” 일본비교정치학회 학술 대회. 후쿠오카. 7월
- 윤왕희. 2017. “공천제도의 개방성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 20대 총선 새누리당 경선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

공 석사 논문

- 윤종빈. 2012.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한국정당학회보』 11권 2호, 5-37.
- 이가림 · 조원빈. 2022.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본선 경쟁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권 1호, 139-160.
- 이동윤. 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 of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5-38.
- 장훈. 2002.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개혁과 정당구조의 변동.” 『의정연구』 14권, 178-207.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권 2호, 217-236.
- 전용주 · 공영철. 2012.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정치정보연구』 15권 2호, 133-151.
- 정주신. 2017. “한국 정당의 공천파동에 따른 선거 결과 함의: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권 1호, 31-70.
- 정진민. 2011.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모델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7권 3호, 145-170.
- 정진웅. 2021. “한국 정당의 당원 조직과 운영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권 2호, 129-160.
- 채진원. 2015. “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여연포커스』 Vol. 2015-05.
- 허유정 · 윤광일. 2021. “한국 정당체계의 연속성: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11권 2호, 33-70.
- 한정훈. 2017. “정당의 후보 경선과 유권자 인식: 제19대 대선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3권 3호, 61-91.
- 허진. 2020.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선 결정 요인: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석사논문.
- Allem, Elin Haugsgjerd, Knut Heidar, and Rune Karlsen. 2016. *After the Mass Party* :

- Continuity and Change in Political Parties and Representation in Norway*. Lanham: Lexington Books.
- Bale, Tim, Paul Webb, and Monica Poletti. 2019. *Footsoldiers: Political party membership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Routledge.
- Bille, Lars. 2001. "Democratizing a democratic procedure: myth or reality? Candidate selection in Western European parties, 1960–1990." *Party Politics* 7(3): 363–380.
- Chung, Jin Min. 2012. "Party Transformation in Old Democracies and Party Formation in New Democracies: Party of the Electorate as an Alternative Party Model."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3): 55-77.
- Cross, William P. and Richard Katz. eds. 2013. *The Challenges of Intra-Party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and Wattenberg, Martin P. eds. 2002.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agher, Michael and Marsh, Michael. eds. 1988. *Candidate Selec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ecret Garden of Politics*. London: Sage.
- Hazan, Reuven Y., and Gideon Rahat. 2010. *Democracy withi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ndriðason, Indriði H., and Gunnar Helgi Kristinsson. 2015. "Primary consequences: The effects of candidate selection through party primaries in Iceland." *Party Politics* 21(4): 565-576.
- Key Jr, Valdimer O. 1964.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Thomas Y. Crowell.
- Mair, Peter, eds. 1994.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 Pennings, Paul, and Reuven Y. Hazan. 2001.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Party Politics 7(3): 267-75.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 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ty Politics* 7(3): 297-322.

Scarrow, Susan. 2015. *Beyond party members: Changing approaches to partisan mobi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carrow, Susan, Paul Webb, and David M. Farrell. 2000. "From social integration to electoral contestation: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political parties.", Dalton RJ and Wattenberg MP,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29-153. Tokyo: Oxford University Press.

Spies, Dennis C, and André Kaiser. 2014. "Does the Mode of Candidate Selection Affect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es?". *Party Politics* 20(4): 576-90.

Strom, Kaare and Svåsand, Lars. 1997. *Challenges to Political Parties: The Case of Norwa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연합뉴스. 2016. <표> “새누리당. 더민주 제20대 총선 공천률 비교”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1079700001>(최종 검색일: 2022년 7월 28일)

투고일: 2023.01.18. 심사일: 2023.03.16. 게재확정일: 2023.03.20.

A Preparatory Study of the Open Primaries' Long-Term Effects on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ark, Jisun | Okayama University

This preparatory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long-term effect of open primaries on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After considering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 primaries and parti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two mainstream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naged the open primaries and how they have changed in their three aspects: the party as an organization, in government, and in the electorate. This article highlights the tendency of democratic parties to focus more on open primaries with electoral votes, while conservative parties use closed primaries with opinion polls, especially during presidential elections. It was also found that, since the open primaries were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the democratic parties have comparatively strengthened all three aspects of political parties. These results imply that electoral votes rather than opinion polls may strengthen the party as an organization and the party in the electorate.

Key Words | Open Primaries, Party Models, Party as Organization, Party in the Electorate, Candidate-selection

『상서』(尙書) 속 혁명과 섭정의 정당화를 둘러싼 경합과 언어적 긴장*

윤대식 | 한국의대

| 국문요약 |

정치는 절대적인 도덕을 찾아내서 개개인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은 세계 속에 조건 지어진 존재이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 인간다운 삶의 완성을 목표로 한 행위자이다. 이 점에서 인간의 삶은 '정치적'이다. 즉 '정치적인 것'은 세계로서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의 보전을 목표로 적대 차원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경계 짓기와 이에 기초한 긴장관계 속 경합을 의미하며, '정치'란 이런 경합을 통해 공사 영역 간 선후(先後)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치 행위자들에게 도덕은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이 아니다.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의식이 고대 동아시아 역사 속 혁명에 성공한 제왕과 수성의 임무를 수행한 섭정에게도 똑같이 인식되었던 것임을 그들의 '말'을 통해 입증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명과 섭정의 통치자들과 공적 행위자들의 '말'을 담고 있는 『상서』의 계고(戒告)를 역사 기록이 아닌 정치 텍스트로 접근하려고 한다.

주제어 | 상서(尙書), 정치적인 것, 적대, 경합, 혁명, 섭정, 말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춘추시대 노(魯)나라 실력자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를 묻자,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 거느리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¹⁾라고 답한 『논어』의 구절은 잘 알려져 있다. ‘정치’(政)란 ‘바로잡음’(正)이라는 공자의 대답은 사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정명(正名)과 일관되는데,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이어 계강자가 “무도한 자를 죽여서 유도함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군주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로 바람이 불면 반드시 풀은 눕게 마련”²⁾이라고 대답하는 대목은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엮을 수도 있고 엮을 수도 있다는 것”³⁾이라는 『순자』의 경교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치적 금언이자 통치자에게 끊임없는 수신(修身)의 계훈(戒訓)이기도 하다. 문제는 고대 유가의 두 대표자가 정의한 ‘정치란 무엇인가’의 대답을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그 자체로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데 있다. 즉 공자가 말한 ‘바로잡음’을 정치행위가 올바름을 공고화하거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바꾸어 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가 항상 올바름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기존 주 왕조의 근간인 분봉제적 질서를 다국적 질서(multi-state system)로, 장원경제(莊園經濟)에서 시장경제(市場經濟)로, 가(家)에 기반한 사회로부터 대규모 사회적 이동을 가져온 전면적인 전환의 시기였다(Hsü 1999, 545).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현실인식과 위기감은 동시대 정 반대편에 있던 그리스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폴리스의 보전이라는

-
- 1) 『論語』, 「顏淵」,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 2) 『論語』, 「顏淵」,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曰 …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 3) 『荀子』, 「王制」, “傳曰,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此之謂也.”

동일한 목표에 집중하게 했고, 그것은 무너지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과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철학적 돌파의 시대였다(余英時 1982, 37-48). 이로부터 고대 유가를 비롯한 제자(諸子)는 춘추전국이라는 시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좋았던’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좋아질’ 미래를 제시하려고 했고, ‘좋았던’ 과거와 ‘나빠진’ 현재 간 대립을 극복하고 양자를 정합(整合)하여 앞으로 ‘좋아질’ 미래를 향해 경합(競合)했던 지식인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춘추전국의 역사단계와 그 안에서 제자백가의 대립은 정치적, 철학적 경합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관계의 표출이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시(是)=선(善), 비(非)=악(惡)으로 규정하여 오로지 악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면, 고대 유가적 교의 역시 도덕과 윤리의 회복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던 모색의 결과일 것이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모든 개별적 삶이 인공적 세계(world)의 경계 내에 있는 반면 세계 자체는 개별적 삶보다 오래 지속하고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전제하고, 바로 그것이 이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인간적 제약성을 의미하기에 인간은 조건 지어진 존재(conditioned being)라고 지적했다(아렌트 2005, 56-57). 즉 세계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은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자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최대한 광범위한 출현의 공간(the space of appearance)을 갖는다는 점이다(김비환 2001, 129-130). 바로 이 지점에서 출현의 공간이자 세계로서 정치공동체, 즉 폴리스가 등장하고 자연 공동체인 가정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것과 공동의 것에 대한 예리한 구분을 가져옴으로써 인위적인 정치공동체가말로 공동의 것이 말을 통해 실행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발견하는 가장 수다스러운 조직체로의 고유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아렌트 2005, 77-78). 이로부터 폴리스의 정치적 삶이란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라는 아렌트의 정언은(아렌트 2005, 56-58) 고대 동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의 제

자백이 역시 공동체 보전과 그 속에서 삶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설득하기 위해 ‘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정치적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당연히 그는 통치자이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통치자는 후계자들이 자신을 모방하고 재현해서 또다시 성공하도록 그 방법을 ‘말’과 ‘글’을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통치자의 삶, 즉 정치적 삶으로서 행위와 업적은 불멸성을 확보하여 완결된다.⁴⁾ 이렇게 ‘통치자의 말’을 ‘글’로 기록한 동아시아 최초의 작품은 『상서』(尙書)일 것이다.⁵⁾ 『상서』의 내용은 하.은.주 삼대(三代)의 정치에 관한 것으로, 각 왕조 제왕들과 공적 행위자들의 ‘말’을 통해 후대에 계고(戒告)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상서』의 훈고(訓誥)는 후대의 제왕들에게 도덕적 계율을 던져 경계로 삼아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훈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도덕적 계율이나 교훈이 아닌 실제 공동체 속 인간의 삶의 완성을 위해 통치에 참여하는 공적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정치 텍스트로의 성격을 지닌다.⁶⁾ 또한

4) 아렌트는 불멸성과 연계된 행위(실천)의 상실을 통탄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인간조건과 다시 연계시키기를 원했으며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와 행적을 증언하려는 공적이고 사색적인 책무를 전제로 하는 활동적 삶(Life of Action)을 강조했다. 이렇게 아렌트는 공공영역을 되찾고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화를 요구했다(아렌트 2022, 180-182).

5) 상주(商周)시대 사관의 임무는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군주의 정치활동 중 수반되는 문서작업을 위해 군주가 원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 다른 하나는 후대 군주를 경계하기 위해 당대 군주의 언행을 기록하는 일로서 사료와 기록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렇듯 『상서』의 문체는 역대 군주와 신하 사이의 조령(詔命)과 훈화(訓誥)로 되어 있고, 관례상 모(謨)·훈(訓)·고(誥)·서(誓)·명(命)으로 분류한다(김유미 2018, 232-233).

6) 『상서』는 중국 최초의 역사 작품으로 간주되는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문학적 사례들 일 문서들이 B.C.4세기 위조 문서들과 뒤섞여 있다. 금문상서 28편만이 진짜이지만 이조차도 서주 중기부터 전국시대 중기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 세기들에 걸친 저자들의 변화된 관심사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誥)라는 제목이 붙은 5편의 문서들이 최초의 것들이고 모두 성왕의 통치 첫 부분과 연관되어 있으며 섭정인 주공의 시대에 유력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성명서나 연설의 형식을 취하

『상서』는 한·당 시대 육경 체제, 송대 성리학의 삼경 체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유가적 정치교의의 원형적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정치에 참여한 공적 행위자들의 정치 인식을 결정했던 성립 선행조건으로의 의의를 지닌다.⁷⁾

본 연구는 『상서』의 훈고(訓誥)를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에서 ‘정치적인 것’의 인식과 실천을 혁명과 섭정이라는 특정 상황에 놓였던 통치자들과 공적 행위자들의 직접적인 ‘말’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과 ‘글’의 저변에 깔린 당대 현실 정치 지형 속 행위자들 간 경합의 관계를 언어적 긴장의 형태로 추출하여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으려는 것이다.

II. 혁명(革命) 속 제왕의 언어에 담긴 긴장과 경합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실재했던 혁명은 폭력이라는 전 정치적(pre-political) 수단으로 권력을 획득하지만 ‘말’을 통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⁸⁾ 최초 왕조로 알려진 하(夏)나라는 왕위를 세습했고 그 정당성을 혈연이지만 유덕자에서 유덕자로 계승했다는 계세(繼世)로 합리화했다.⁹⁾ 그 결과 하나라 최후의 군주인 걸왕(桀王)이 폭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것

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 작품들이 정치적 발언의 동시대적 전사물인지 아니면 주요 사건을 기념하거나 당파투쟁에 이용하기 위해 후대에 재창조된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이지만 대부분 서주 시대의 저술들이며 그 시기 정치 행위자들의 핵심적 관심사를 가리킨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루이스 2006, 213-214).

7) 사대부의 입을 통해 발화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추상화된 도덕적 명제로 해석되는 사서(四書)와 달리, 『상서』는 주요 정치주체의 언설이 화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날 것’ 그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유가 통치관의 원형과 풍부한 함의를 읽어낼 수 있는 자료이다(강경현 2022, 95).

8) ‘정치적’이라는 것이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임을 전제로 할 때, 그리스인들에게 폭력으로 사람을 강제하고 설득하기보다 명령하는 것은 전 정치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아렌트 2005, 78).

은 계세가 아니라 혁명에 의한 왕조교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은나라 시조 탕왕(湯王)은 반란과 혁명의 경계 위에서 박(亳) 땅에 모인 사방의 제후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말하고 있다. 하나라 죄가 어떤 것인가? 하나라 왕은 백성들의 힘을 다하게 하고 하나라 고을들을 해치기만 했으며 백성들은 모두 게으름 피우며 말하기를 ‘이 해가 언제 없어질까? 나와 나 모두 망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나라의 덕이 이리하니 지금 짐은 반드시 가야겠다”¹⁰⁾라고 반란의 언어를 혁명의 언어로 치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저버리지(食言) 않을 것이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자와 함께 죽일 것이고 용서하지 않겠다”¹¹⁾라는 맹서를 통해 자기의 주장, 즉 ‘말’을 합리화해버렸다. 그리고 탕왕은 반란의 부당함을 혁명의 정당함으로 합리화하면서 걸왕을 물리치고 천자로 즉위했다.

그런데 탕왕의 맹서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부덕한 걸왕 때문에 원망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혁명을 이행하는데 왜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하나라는 순임금으로부터 선양받은 우임금이라는 유덕자가 세운 나라이고 계세의 방식으로 유덕자에게 세습되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반란을 강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탕왕은 혁명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후대 맹자는 이를 “계세하여 천하를 가졌는데도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걸왕이나 주왕과 같은 폭군 경우”¹²⁾라는 해석으로 역성혁명을 정당화했지만, 실질적으로 폭군을 폭력으로 전

9) 계세의 개념 역시 맹자에게서 비롯했다. 맹자는 공자를 인용해서 “요임금과 순임금은 어진 사람에게 왕위를 선양했고 하은주 삼대는 세습을 했지만 그 뜻은 같다”(『孟子』, 「萬章上」 6, “孔子曰: 唐虞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고 단정하는데, 그것은 선양의 정당성과 계세의 정당성이 모두 천명이 부여되는 조건인 도덕적 완성자로서의 권력계승을 의미한다는 간접적인 시인이다.

10) 『尙書』, 「尙書」, <湯誓>, “今汝其曰, 夏罪其如台. 夏王率遏衆力, 率割夏邑, 有衆率忿弗協. 曰, 時日曷喪, 予及汝皆亡. 夏德若茲, 今朕必往.”

11) 『尙書』, 「尙書」, <湯誓>, “朕不食言. 爾不從誓言, 予則孥戮汝, 罔有攸赦.”

12) 『孟子』, 「萬章上」 6, “繼世以有天下, 天之所廢, 必若桀紂者也.”

복시키는 혁명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혁명은 오히려 ‘말’을 통해 설득에 성공한 것이다. 『상서』에 소개된 「탕왕이 고하는 말」(湯誥)이라는 뜻의 계고는 위고문상서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탕왕의 ‘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것’의 원형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탕왕은 “하나라 걸왕이 덕을 망치고 위압을 떨어 너희들 온 세상 백성에게 학정을 폈다. 너희들 온 세상 백성들은 그 흉악한 해침을 입어 썸바귀와 벌레의 독을 참지 못하고 다같이 죄 없음을 위아래의 신들에게 고했다. 하늘의 법도는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하나라에 재앙을 내려 그 죄를 밝힌 것”¹³⁾이라고 학정을 펼친 하나라 걸왕의 멸망이 갖는 필연성과 은나라의 혁명이 갖는 당위성을 하늘의 재앙과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등치시켰다.

탕왕에게 ‘학정’, 즉 포박한 정치는 왕 자신이 품성과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채 위세와 압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폭력을 수반하기에 당연히 ‘전 정치적’이다. ‘전 정치적인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은 논리적인 결과, 즉 응징으로 비쳤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을 통해 폭력으로 폭군을 응징한 탕왕의 정치인식 역시 자연스럽게 또 다른 혁명-폭력의 동원-을 경계하면서 “나는 위아래에 죄를 짓지 않는지 몰라 두렵고 두려워 떨기를 깊은 연못에 떨어지려는 듯이 하고 있다”라는 극도의 신중함으로 표출되었고, “무릇 우리 새로 만든 나라는 떳떳하지 않은 법을 따르지 말고 방자하고 음란하게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와 함께 “너희들 온 세상에 죄가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나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다”라는 책무의식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⁴⁾ ‘정치적인 것’을 모든 인간사회에 본래부터 있었고 존재론적 조건을 결정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할 때,¹⁵⁾ 적대

13) 『尙書』, 「尙書」, <湯誥>, “夏王滅德作威, 以敷虐于爾萬方百姓. 爾萬方百姓, 罹其凶害, 弗忍荼毒. 並告無辜于上下神祇. 天道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彰厥罪.”

14) 『尙書』, 「尙書」, <湯誥>, “茲朕未知獲戾于上下. 慄慄危懼, 若將隕于深淵. 凡我造邦, 無從匪彝, 無卽愆淫 … 其爾萬方有罪, 在予一人, 予一人有罪, 無以爾萬方.”

차원에서 발생하는 온갖 형태의 갈등과 대립은 인간 삶에서 불가피한 양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의 동원을 말의 동원으로 치환함으로써 ‘전 정치적’ 삶에서 ‘정치적’ 삶으로 환원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했음을 시사한다.

탕왕은 폭력을 사용해서 기존 왕조를 전복시켰지만, 그 정당성을 ‘말’로 설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혁명(革命)을 완수했다. 이 점에서 하나라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았던 탕왕의 ‘정치’는 성공했던 것일까? 『사기』에는 「탕고」의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 박 땅에서 탕왕이 하나라의 정령을 폐지하고 제후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지 못하거나 삼가 힘써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내가 마침내 너희들을 처벌할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¹⁶⁾라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내용이 진짜 「탕고」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정치’행위로의 실천까지 탕왕의 기획은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한 채 천명에 충실한 것이 책무임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이로부터의 일탈은 천명을 받은 왕조일지라도 멸망이라는 천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역성혁명에서 재현된다. 하나라 걸왕과 함께 은나라 주왕(紂王)이 폭군의 대명사로 지칭되듯, 탕왕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무왕(武王)의 혁명 역시 ‘말’을 통해 은나라의 폭정을 표명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패턴을 보인다. 무왕은 맹진에 모인 제후들에게 “하나라 걸왕이 하늘을 따르지 못하고 온 세상에 해를 끼치니 이에 하늘은 탕왕에게 명을 내려 그분을 도와 하나라의 명을 끊어버렸다”¹⁷⁾라고 훈시하면서 주왕이 걸왕에 버금가는 폭군임을 암시한다. 그것은 불안과 동요에 빠질 수 있는 제후들에게 역사적 선례를 상기시켜 성공신화의 모방을 독려함으로써 그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심리적 치유

15)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 필연적이며 적대 없는 세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용한다면, 이 조건에서 질서를 창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enemy)과 반대자(adversary)를 구별해야 하며, 정치공동체의 맥락에서 대립진영은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정당성을 용인해야 할 반대자로 고려하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무페 2007, 13-15).

16) 『史記』, 「殷本紀」, “告諸侯群后, 毋不有功於民, 勤力迺事. 予乃大罰殛女, 毋予怨.”

17) 『尙書』, 「周書」, <泰誓中>, “有夏桀不克若天, 流毒下國, 天乃佑命成湯, 降黜夏命.”

책이기도 했다. 이로부터 무왕은 “수(주왕)의 죄는 걸왕보다 더하다. 착하고 어진 사람을 약탈하고 망하게 하고 간언하고 돕는 자를 학대했다 ... 하늘이 볼 때는 우리 백성을 통해 보고 하늘이 들을 때는 우리 백성을 통하여 듣는다.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면 나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¹⁸⁾이라는 탕왕과 똑같은 수사(修辭)로 합리화함으로써 “상나라의 죄는 세상에 가득 차서 하늘이 명하여 그를 치게 하였으니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죄가 같아질 것”¹⁹⁾임을 강조할 수 있었다.

비록 무왕의 맹서를 담고 있는 <태서>(泰誓) 자체가 위고문에 해당할지라도, 훗날 성왕에게 소공(召公)이 제기한 “옛날 하나라 백성들과 하나라 임금들을 보면 하늘의 뜻을 따라서 자식처럼 보호하여 주었으나 뒤에 하늘의 뜻을 어기어 지금은 그 천명을 이미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나라 임금을 보더라도 하늘이 인도하고 바로잡아 보호하여 주었으나 뒤에 하늘의 뜻을 어기어 지금은 이미 그 천명을 잃어버렸습니다”²⁰⁾라는 <소고>(召誥)의 계훈으로부터 충분히 무왕의 ‘말’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후대 유가적 교의의 구성자들이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시사하는데, 주왕(紂王)이 스스로 “나는 백성을 거느리고 있고 천명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²¹⁾라는 ‘말’과 태도에 무왕이 ‘천명은 항상 그렇지 않다’(天命靡常)의 관념을 ‘천명을 잃어버렸다’(墜闕命)고 ‘말’한 데서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주왕에게 은나라는 천명이 부여되어 혁명을 통해 등장한 왕조이기에 자신의 권력기반과 권위에 대해 어떠한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탕왕과 똑같은 도전자가 등장할 경우, 그 역시 천명을 부여받아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

18) 『尙書』, 『周書』, <泰誓中>, “惟受罪浮于桀, 剝喪元良, 賊虐諫輔 ...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德, 百姓有過在予一人.”

19) 『尙書』, 『周書』, <泰誓上>, “商罪貫盈, 天命誅之, 予弗順天, 厥罪惟鈞.”

20) 『尙書』, 『周書』, <召誥>, “相古先民有夏, 天迪從子保, 面稽天若, 今時既墜厥命. 今相有殷, 天迪格保, 面稽天若, 今時既墜厥命.”

21) 『尙書』, 『周書』, <泰誓上>, “乃曰, 吾有民有命, 罔懲其侮.”

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따라서 주왕은 자신에게 천명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혁명의 가능성 간 긴장관계 위에 놓여 있는 셈이었으며,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에 천명의 항상성을 공언(公言)함으로써 탕왕의 방식처럼 ‘말’을 통해 환기하려 한 것이다. 반면 무왕은 주왕이 공언한 천명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 절박함은 최초 맹진에서 800여 제후들을 규합하여 문왕의 명을 받들어 주왕을 정벌하려는 태자 발이라는 고백과 천명을 아직 모르는 제후들을 이끌고는 은나라를 정벌할 수 없다는 판단 간 긴장관계와 다시 제후들을 규합하여 맹진을 넘어서서 천명을 둘러싸고 주왕과 경합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표출되었다.²²⁾ 즉 긴장과 경합이라는 ‘정치적인 것’의 두 측면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무왕의 혁명 성공을 맹자가 “하늘이 (천하를) 주는 것”²³⁾이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무왕의 과제 역시 당연히 새로 정복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해야 천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그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상서』의 가장 핵심으로 평가받는 <홍범>(洪範)이다. 현자 기자(箕子)를 방문하여 ‘하늘의 일정한 윤리’(彝倫攸紱)를 묻는 무왕의 궁금증은 어떻게 하면 천명을 계속 유지해서 혁명의 반복을 끊느냐의 모색이기도 했다. 기자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소개하는데, 그중 유가적 교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5번째 항목인 황극(皇極)이다. 황극은 “무릇 그 백성이 음란한 무리를 이루지 않고 관리 중 자기 무리만을 위하는 행동이 없는”²⁴⁾ 통치술이자 정치권위의 수립을 의미하는데, 기자는 이를 위해 “무릇 그 백성 중에 계책을 생각하는 이가 있고 뜻있는 일을 하는 이가 있으며 자기 행실을 잘 지키는 이가 있다면 그대는 그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법칙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면 곧 그들을 받아들여 이십시오”²⁵⁾라고 조언한다. 여기에서 황극 수립은 공자가 언급한 정명의 의미와

22) 『史記』, 「周本紀」, “武王自稱太子發, 言奉文王以伐, 不敢自專 … 諸侯不期而會盟津者八百諸侯. 諸侯皆曰, 紂可伐矣. 武王曰, 女未知天命, 未可也. 乃還師歸.”

23) 『孟子』, 「萬章上」 5, “曰, 天與之.”

24) 『尙書』, 「周書」, <洪範>, “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

도 부합한다. 따라서 명실상부하도록 ‘바로잡는 것’이 곧 황극의 수립이라는 기자의 충고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며, 또한 ‘법칙에 맞지 않더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면 받아들이라’는 충고는 정치를 도덕적 언어로만 재단하면 ‘정치적인 것’의 의미에 내포된 적대와 경합의 속성을 비도덕 또는 반도덕으로 간주할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기도 하다.

Ⅲ. 순리(順理) 속 섭정의 언어에 담긴 긴장과 경합

탕왕의 혁명 성공 이면에는 탕왕 개인의 품성과 자질뿐 아니라 왕조의 지속성을 보증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한 이윤(伊尹)이 있었다. 이윤의 원래 이름은 아형(阿衡)이고 탕왕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왕비가 되는 유신씨의 남자노예가 되어 술과 도마를 걸머지고 탕왕을 찾아가 음식의 맛을 예로 들어 ‘정치’를 얘기하고 탕왕으로 하여금 왕도(王道)를 실행하게 했다고 전해진다.²⁶⁾ 물론 이것은 와전된 소문인 듯하다. 맹자의 제자인 만장조차도 이런 역사서술을 의심해서인지 맹자에게 요리솜씨로 탕왕의 신임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있냐고 묻자, 맹자의 답변은 단호히 아니라는 것이었다. 왜 맹자는 그렇게 단언했을까? “이윤은 들판에서 밭을 갈며 요순의 도를 즐겼고 ... 의에 맞지 않고 도에 맞지 않으면 천하를 봉록으로 준다고 해도 돌아보지 않았고 말 4천 필을 선사해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⁷⁾ 맹자는 이윤이 “하늘이 이 백성을 낳아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닫게 하며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깨닫는

25) 『尙書』, 「周書」, < 洪範 >, “凡厥庶民, 有猷有爲有守, 汝則念之. 不協于極, 不罹于咎, 皇則受之.”

26) 『史記』, 「殷本紀」, “伊尹名阿衡. 阿衡欲奸湯而無由, 乃爲有莘氏媵臣, 負鼎俎, 以滋味說湯, 致于王道.”

27) 『孟子』, 「萬章上」 6, “萬章問曰, 人有言, 伊尹以割烹要湯, 有諸? 孟子曰, 否, 不然, 伊尹耕於有莘之野, 而樂堯舜之道焉. 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

사람을 깨닫게 한다”²⁸⁾라는 점에서 먼저 각성함으로써 자신의 책무가 왕조의 보전임을 알고 실천한 공적 행위자로 평가했던 것이다.

사실 왕조의 창업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수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윤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탕왕을 보조했던 창업의 공신보다 탕왕 이후 그의 정치를 계승한 후계자의 성공 여부를 뒷받침했던 섭정(攝政)으로의 역할에 달려 있다. 이 선례에 따른 모범적인 전형이 이윤의 진면모였으며, 그 실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비록 위고문에 해당하지만, 후대에 작성된 「이윤의 가르침」(伊訓)으로 알려진 이윤의 ‘말’이다. 탕왕의 유능함과 유덕함을 계승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은나라 초기 후계자들에게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우선해야 할 선택은 유덕함보다는 유능함이었을 것이다.²⁹⁾ 하지만 탕왕의 태자 태정(太丁)은 요절하고 그 동생 외병(外丙)과 중임(仲壬)이 번갈아 후계자리를 이었지만 요절한 뒤 태정의 아들 태갑(太甲)이 계승하면서 3년째 접어들어 포악해져 탕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도덕을 문란시키는 혼란이 발생했다. 우선적인 덕목인 유능함을 보여주기보다 부덕함을 먼저 드러냈다는 것은 또 다른 혁명의 빌미를 제공할 위험성이 커졌음을 의미했다. 그래서인지 이윤이 그를 동궁(桐宮)으로 내쫓고 3년간 섭정하면서 제후들의 조회를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³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계세-혁명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계승과 완전히 다른 섭정이라는 방식의 출현 때문이다. 그런데 계세의 당사자를 권력에서 축출하고 어떤 근거도 없는 보조자에 불과한 이윤

28) 『孟子』, 「萬章上」 6,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予, 天民之先覺者也.”

29) 『군주론』 <제17장. 잔인함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에 관하여>에서 마키아벨리는 체사르 보르지아를 예로 들면서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논쟁의 답변으로 자신은 군주가 둘 다 갖추어야 하며, 둘 다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을 취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단언한다(마키아벨리 2013, 144-145).

30) 『史記』, 「殷本紀」, “帝太甲既立三年, 不明, 暴虐, 不遵湯法, 亂德, 於是伊尹放之於桐宮.”

이 탕왕의 유지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권력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온전히 권력 찬탈 아닌가? 그 해답은 권력승계자가 책무에 대한 각성과 앞 그리고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정치’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으며, 그 판단의 주체가 섭정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점에서 「이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윤은 태갑에게 “우리 상나라 임금님은 성스러운 무위를 펴 밝히시고 너그러움으로 포악함을 대신 했으니 ... 지금 임금님은 그분의 덕을 계승하셨는데 모두가 처음 하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책무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선왕은 사람들의 기강을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간하는 말을 따라 어기는 일이 없었다 ...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거두는 것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했기에 온 나라를 다 스리는데 이르렀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유능함과 조력자의 충고를 통해 자신의 책무를 우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상기시킨다.³¹⁾ 그리고 선왕은 관직에 있는 자들에게 “감히 언제나 궁에서 춤추고 방에서 취해 노래하는 이가 있다면 이런 때는 무당바람이라 말하고, 감히 재물과 여색을 따르고 언제나 놀이와 사냥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런 때는 방탕바람이라 말하며, 감히 성인의 말씀을 모욕하고 충성되고 곧음을 거스르고 미련하고 유치한 사람들과 벗한다면 이런 때는 어지러운 바람이라 말할 수 있다. 벼슬하는 이들이 몸에 한 가지만 지니고 있어도 집안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나라의 임금이 이 중 한 가지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³²⁾이라고 경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윤의 경고의 ‘말’은 유능함의 선결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유덕함을 방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3가지 병폐, 즉 무당바람(巫風), 방탕바람(淫風), 어지러운 바람(亂風)으로

31) 『尙書』, 「尙書」, <伊訓>, “惟我商王, 布昭聖武, 代虐以寬 ... 今王嗣厥德, 罔不在初 ... 先王肇修人紀, 從諫弗拂 ... 與人不求備, 檢身若不及. 以至于有萬邦, 茲惟艱哉!”

32) 『尙書』, 「尙書」, <伊訓>, “曰, 敢有恒舞于宮, 酣歌于室, 時謂巫風. 敢有殉于貨色, 恒于遊畋, 時謂淫風. 敢有侮聖言, 逆忠直, 遠耆德, 比頑童, 時謂亂風. 惟茲三風十愆. 卿士有一于身, 家必喪. 邦君有一于身, 國必亡.”

정리해서 합리성-도덕성-자기절제라는 통치자의 유덕함으로 대조하는 동시에 기강을 세우고 간언을 수용하는 태도와 정반대에 놓인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결과를 예단했다. 태갑은 이를 거부하고 탕왕이 계고한 모든 법도를 다 엮어 버렸다(顛覆湯之典刑). 그것은 유능함은 고사하고 유덕함조차 구비하지 못했음을 드러냈고 당연히 그 결과는 태갑에 대한 응징이었다. 현실정치 지형에서 하늘의 처벌을 대신한 것은 바로 이윤의 섭정인 셈이다.

그런데 태갑이 이윤의 도움과 조언을 거부하고 탕왕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는데, 「태갑」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태갑」 역시 위고문이라는 점에서 현재 제기된 의문점을 당대 어느 시점에서도 똑같이 제기했을 수 있다. 즉 「이훈」이 실재했던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국왕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다. 사실 탕왕의 계고와 정치적 유산은 유덕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완비하도록 요구했지만, 태갑이 탕왕의 손자로서 선왕들에게 전승 받은 덕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에 이윤은 끊임없이 간언하는 것으로 탕왕의 정치적 유산을 승계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태갑이 이윤의 의도대로 각성도, 실천도 거부하는 데서 비롯했다. 이윤은 “이 윤은 몸소 선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나라의 바탕이 되는 유업을 크게 계승하게 된 것”³³⁾이라고 간언했지만, 그것은 이윤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역사서들은 이윤의 간언에 태갑의 반응이 없던 것을 태갑의 졸렬함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이윤의 간언에 내포된 의미, 예를 들어 “뒤를 이은 임금이 경계해서 그대가 지킬 법도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조상을 욕되게 할 것 ... 검약의 덕을 삼가서 영원한 계책을 생각하라 ... 그러면 나도 기뻐할 것이고 만세토록 기리게 될 것”³⁴⁾이라는 충고는 오히려 태

33) 『尙書』, 「尙書」, <太甲上>, “惟尹躬克左右厥辟, 宅師. 肆嗣王丕承其緒.”

34) 『尙書』, 「尙書」, <太甲上>, “嗣王戒哉, 祗爾厥辟. 辟不辟, 忝厥祖 ... 愼乃儉德, 惟懷永圖 ... 惟朕以懼, 萬世有辭.”

갑에게 혁명의 기억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 있었다. 그리고 태갑은 3년간 동궁에 유폐되고 이윤에 의해 권력이 대행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왜 이윤은 차라리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찬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방의 실력자들에게 또 다른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태갑에게 다시 3년 만에 왕위를 돌려준 것일까? 이 지점에서 이윤은 권력계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상정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맞이했던 것일 수 있다. 「이훈」의 내용이 후대 조작이고, 현실적 모티브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후 합리화를 시도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윤 자신에게 왕조의 보전과 장기지속이란 책무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맹자는 이 점을 천명(天命)으로 설명한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을 천이라 하고 이르게 하지 않아도 이르는 것이 망”³⁵⁾이라고 천명을 정의하고, 공자도 마찬가지로 이윤과 같은 인물이 왜 천하를 갖지 못했느냐는 바로 천명에 의해 정당한 권력승계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시도한다. 즉 이윤이 섭정에 그치고 다시 태갑에게 왕위를 돌려준 것은 신하의 책무이자 동시에 “태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를 원망하며 스스로 착하게 하여 동궁에서 인에 거처하고 의를 따른 지 3년에 이윤의 훈계를 받아들였기”³⁶⁾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이윤의 훈계와 태갑의 개과천선이라는 도덕적 풍경으로 양자의 갈등이 종식되는 결론을 보여주는 역사서의 전형적인 문법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정치적인 것’의 실질을 은폐하고 있다. 물론 고대 동아시아 역사서술의 원칙이 공자가 제시한 미언대의(微言大義)와 포핍(褒貶)이지만 정치영역에서 ‘전 정치적’ 요소를 ‘도덕적’ 요소로 제거하고 탈색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정치적’ 요소를 건너뛰어 ‘탈정치’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

35) 『孟子』, 「萬章上」 6, “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

36) 『孟子』, 「萬章上」 6, “太甲悔過, 自怨自艾, 於桐處仁遷義, 三年, 以聽伊尹之訓己也.”

는 긴장과 경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⁷⁾ 만약 폭력과 억압이라는 ‘전 정치적’ 요소를 정치영역에서 제거하고 말과 행위라는 ‘정치적’ 요소로 전환하지 않고 ‘도덕적’ 요소로 곧바로 건너뛴 경우 정치는 시비(是非)의 문제로 국한된다. 따라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과오를 뉘우친 제왕의 모습이 아니라 기존 정치적 유산을 둘러싸고 권력의 승계자와 유산의 보증자 간 발생한 미묘한 긴장과 경합의 양상이다. 태갑은 유능함도 유덕함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천명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우선하려고 했다면, 이윤은 왕조의 보전을 급선무로 보았을 것이다. 양자 간 어긋난 우선순위의 문제는 사적 욕망과 공적 가치의 긴장과 갈등이기도 했다. 『상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양자 간 긴장과 갈등이 외형상 ‘반도덕적 제왕’과 ‘도덕적 재상’의 대립 구도로 묘사된 것은 탕왕이 설정해 놓은 기준대로 제왕의 길을 가야 할 책무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적 욕망을 먼저 추구하려는 새로운 제왕을 ‘반정치적’인 존재로 비추고, 이를 견제하고 조언하는 재상을 ‘정치적’ 책무를 이행하는 담지자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그래서 태갑이 과오를 회개하자 이윤이 비로소 정권을 되돌려주었던 것이고, “태갑제가 덕을 수양하니 제후들이 모두 은에 복종하고 백성들도 평안해졌다”는 역사서술이 이루어진 것이다.³⁸⁾

그래서 복귀한 태갑제에게 이윤은 “백성은 임금인 아니면 서로 바로잡아 주어서 살 수 없고, 임금은 백성이 없으면 사방을 다스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경각시키고 “임금님은 자신의 덕을 닦기에 힘쓰고 그대의 조상들을 본받아 편안하고

37) 상탈 무폐는 모든 종류의 사회질서에는 ‘헤게모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질서란 우발적인 실천들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절합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어떤 질서든 항상 권력관계들의 특정한 배치의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즉 일정한 순간에 상식적으로 원래 질서로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상 누적된 헤게모니적 실천의 결과물일 뿐, 모든 질서는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헤게모니를 세우기 위해 대항 헤게모니의 도전을 받게 마련이고, ‘정치적인 것’이란 바로 이런 적대의 차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무폐 2020, 20-33).

38) 『史記』, 「殷本紀」, “帝太甲居桐宮三年, 悔過自責, 反善, 於是伊尹迺迎帝太甲而授之政. 帝太甲修德, 諸侯咸歸殷, 百姓以寧.”

게을리 지내지 않는”다면 자신 역시 왕의 아름다움을 받는 데 싫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시킨다.³⁹⁾ 태감제 역시 화답으로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절을 하면서 “저 같은 작은 사람이 덕에 밝지 못해 스스로 못한 짓을 했다. 욕망으로 법도를 어기고 방종으로 예를 어기어 이 몸이 죄에 빠지도록 했다”고 자책하고 “그전에는 스승이며 보호자의 교훈을 배신하고 그 시작을 제대로 못 했지만 바로잡고 구해주신 덕에 힘입어 끝까지 잘 다스리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한다.⁴⁰⁾ 각자 유능함과 유덕함을 우선했던 양자 간 긴장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고백하는 대목이다. 태감제가 이윤에 의해 ‘정치’의 본의인 ‘바로잡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윤도 훗날 태감제의 공적을 칭송하는 「태감제의 교훈」(太甲訓) 3편을 짓는다.⁴¹⁾ 바로 태종(太宗)으로 정치적 재탄생하는 순간이다.⁴²⁾

IV. 무일(無逸) 속 섭정의 언어에 담긴 긴장과 경합

은나라를 혁명으로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나라 초기 수성의 상황 역시 은나라

-
- 39) 『尙書』, 「尙書」, <太甲中>, “作書曰, 民非后, 罔克胥匡以生. 后非民, 罔以辟四方 … 王懋乃德, 視乃厥祖, 無時豫怠. … 朕承王之休無斃.”
- 40) 『尙書』, 「尙書」, <太甲中>, “王拜手稽首曰, 予小子不明于德, 自底不類, 欲敗度, 縱敗禮, 以速戾于厥躬 … 既往背師保之訓, 弗克于厥初, 尙賴匡救之德, 圖惟厥終.”
- 41) 『史記』, 「殷本紀」, “伊尹嘉之, 迺作太甲訓三篇, 褒帝太甲, 稱太宗.”
- 42) 태종(太宗)이라는 시호를 태조(太祖)에 버금가는 업적을 가진 군주에게 붙이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태감제의 최초 스탠스는 사적 욕망이 아니라 자기 정치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동시에 그런 자기 정치는 왕조의 초석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노선변경으로 인해 탕왕이 만들어 놓은 체제의 틀을 흔들 위험성을 내포했을 것이다. 이윤의 역할은 바로 탕왕을 추종한 자신이 그 틀을 보전해야 한다는 책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래서 위협요소인 태감을 제거하지 않고 훈육을 통해 책무를 인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태감제의 정치적 재탄생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태종이라는 시호로 명명한 것이기도 하다.

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다만 그 섭정의 주인공이 이윤과 달리 혈연에 의해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섭정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주 무왕이 왕조교체를 이룩한 3년 후 사망하자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배의 공고화는 12살 성왕(成王)에게 맡겨진다.⁴³⁾ 『사기』는 당시 상황을 성왕의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주나라가 천하를 평정한 까닭에 제후들이 배반할까 두려워서 주공(周公)이 섭정하여 국사를 주관했다고 서술했는데,⁴⁴⁾ 주공의 섭정을 둘러싸고 다른 형제들인 관숙 선.채숙 탁.곽숙 처 등 삼감(三監)과 은 유민을 이끌던 무경(武庚)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주공은 섭정하는 순간 적대의 차원에서 형성된 3개의 전선(戰線)과 맞닥뜨린 셈이었다. 하나는 조카인 성왕과 섭정과 찬탈의 경계를 둘러싸고, 다른 하나는 형제인 관숙.채숙.곽숙과 왕조의 수호와 반란의 경계를 둘러싸고, 마지막은 소공석(召公奭)과 국왕에의 간섭과 보필의 경계를 둘러싸고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과연 주공은 이 적대와 긴장을 어떻게 해소했던 것일까? 먼저 성왕과의 긴장관계는 <대고>(大誥)에서 소개하듯 주공의 의도를 성왕의 ‘말’을 통해 표명함으로써 해소된다. 반란이 발생하자 성왕은 신하들에게 “크게는 이 어린 사람이 한없이 큰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일을 계승했으나 지혜를 발휘하여 백성을 편안히 이끌지 못했다. 하물며 천명인들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자책하면서 “은나라의 조그만 왕이 감히 왕업을 크게 바로잡아 보겠다 버르고 있다.

43) 무왕이 은 왕조를 멸망시키고 주 왕조를 창건한 년도를 B.C.1046년으로 계산하기에 그의 사망년도 역시 B.C.1403년으로 알려져 있다. 니비슨은 목성(Jupiter)의 주기를 계산해서 실제 상주시대 사건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입증했는데, 그는 주공이 B.C.1044년부터 합법적으로 섭정이 되어 B.C.1036년까지 성왕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 예외적인 권력 행사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逸周書』의 기록을 들어 B.C.1045년 무왕이 원정에서 돌아와 그해 12월 호땅에서 붕어했기에 은 왕조를 정복하고 2년 동안 생존했으며 B.C.1044-1042년 2년간 무왕의 상중이었고, 탈상 뒤인 B.C.1042-1036년 총 7년을 주공이 섭정으로 있었던 것으로 계산해야 하기에, 성왕의 즉위는 실제 B.C.1044년이라고 추산했다. 따라서 낙양으로 새로운 도읍을 건설한 것은 B.C.1036년이고 이곳이 왕성(royal city)으로의 성격을 지닌 왕실 거주지였다는 것이다(Nivison 2018, 6-10).

44) 『史記』, 「周本紀」, “成王少, 周初定天下, 周公恐諸侯畔周, 公乃攝行政當國.”

하늘이 위압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잘못이 있어 백성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긴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반란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한다.⁴⁵⁾

아마도 주공에 의해 신중하게 기획된 혼시였을 테지만, 실제 의도는 다음 단계에 맞추어져 있다. 성왕은 “옳기로 말하면 그대들 제후들과 장관이나 일을 맡아 보는 여러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면서 ‘걱정마십시오. 그대 나라를 편히 하신 아버님께서 피하던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말해야만 할 것”⁴⁶⁾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성왕의 이 발언은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과 긴장을 가져와 반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주공의 기획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로부터 또 다른 전선인 형제 관속과 무경을 처단하고 채숙을 유배하고 관속을 서인으로 강등하는 조치를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⁷⁾

이를 계기로 외형상 긴장관계가 해소된 듯 보이지만, 성왕이 끝까지 주공을 신뢰했을까? 성왕에게 주공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 아닐까? 주공도 이 점을 간파한 듯하다. 반란을 진압한 뒤 동쪽의 낙(洛)에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고 성왕을 모시면서 “임금께서 하늘이 처음으로 천명을 내리고 또 그 천명을 안정시키는 일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 왕실을 보좌하며 동쪽 땅을 크게 둘러보았으니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명철한 임금을 만들기 위함”⁴⁸⁾이었다고 안심시킨다. 또한 성왕에게 “당신은 젊어 스스로 일을 분별

45) 『尙書』, 『周書』, <大誥>, “洪惟我幼冲人, 嗣無疆大歷服, 弗造哲, 迪民康. 矧曰其有能格知天命? … 殷小腆誕敢紀其敝, 天降威, 知我國有疵, 民不康.”

46) 『尙書』, 『周書』, <大誥>, “義, 爾邦君越爾多士尹氏御事綏予曰, 無愆于恤. 不可不成乃寧考圖功.”

47) 루이스는 고대 중국의 ‘글’의 권위와 기능이라는 맥락에서 주공을 접근하는데, 『상서』 속 주공의 발언들이 신하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왕도 겸손해야 하며 조언을 경청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공이 유덕한 조언자의 원형이자 가정상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글의 힘과 밀접히 결합된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의 <無逸> <立政>, 『시』의 <鷓鴣>의 저자로서 주공은 글을 통해 행동하고 통제와 증언의 양식으로 글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주공의 ‘글’은 그의 라이벌들이 퍼뜨린 ‘말’과 싸우는데 복무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고 분석한다(루이스 2006, 440-447).

해야 할 것이니 저는 일에 대하여 참견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백성들을 도와주는 법만을 가르쳐 드릴 따름”이라고 성왕이 통치의 주체가 되며 섭정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정치적 조연자에 국한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만약 힘쓰지 않으면 당신의 시대가 길지 못할 것”임을 주지시킨다.⁴⁹⁾ 그것이 이야말로 이윤과 태갑의 선례와 같이 국왕과 섭정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을 시사한다.

이제 성왕 역시 적대 차원의 긴장을 해소했다는 신호, 즉 의심하지 않고 신임한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성왕은 “(주)공의 공적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이와 같지 않음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찬사를 보내며 “(주)공이시여, 이 작은 사람은 물리가 임금자리로 되돌아가고 공에게 뒤에 머물기를 명합니다. 뒤에 남아 일을 주관하고 나의 관리들을 감독해 주십시오. 문왕과 무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백성들을 잘 보호하여 그들을 거느리고 사방을 보좌하여 나라의 울타리처럼 되어 주십시오”라고 섭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⁵⁰⁾ 이런 과정을 거치며 주공은 7년간 “겸하여 천하를 제도하고 71개의 나라를 세웠을 때 희씨 성을 가진 나라가 유독 53개 나라나 되었어도 천하에서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았다”⁵¹⁾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권위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수성의 과제를 완수한 뒤 성왕이 성년이 되자 정권을 돌려주고 복면한다.

성왕이 친정에 들어간 후 보좌하는 주공과 소공 간 관계는 적대의 차원으로 바라보기 애매모호한 긴장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앞서 성왕 및 형제들과 형성된 긴장관계와 달리 성왕에 대한 두 신하 간 태도 차이에서 비롯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주공은 복면하면서 성왕에게 하.은 왕조의 위대한 선왕들과 무능한 선왕

48) 『尙書』, 「周書」, <洛誥>, “王如弗敢及天基命定命, 予乃胤保, 大相東土, 其基作民明辟.”

49) 『尙書』, 「周書」, <洛誥>, “乃惟孺子, 頒朕不暇, 聽朕教汝于棗民彝. 汝乃是不覆, 乃時惟不永哉.”

50) 『尙書』, 「周書」, <洛誥>, “王曰, 公功棗迪篤, 罔不若時. 王曰, 公. 予小子其退卽辟于周, 命公後. 四方迪亂, 未定于宗禮, 亦未克救公功. 迪將其後, 監我士師工, 誕保文武受民, 亂爲四輔.”

51) 『荀子』, 「儒效」, “兼制天下, 立七十一國, 姬姓獨居五十三人, 而天下不稱偏焉.”

들을 비교하며 “군자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하고 “지금부터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은 지나치게 구경하고 즐기고 놀고 사냥하지 마십시오. 만백성을 다스림에 공경스러운 태도로 하십시오. 임금은 오늘 마음껏 즐기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훈계한다.⁵²⁾ 이른바 ‘무일(無逸)의 정치’이다.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자기절제라는 긴장상태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을 이룬 성왕이 왜 군이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왕을 세운 때부터 나면서 게을러졌고 나면서 게으르니 씨뿌리고 거두는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낮은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듣지도 못했으며 오직 즐거움만을 좇는데 빠져서 그 후부터는 또한 아무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⁵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왕과 같은 왕조의 창업자들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절제라는 긴장상태로부터 책무를 각성하고 알게 되어 실천한 위대한 선왕인 반면, 그 이후 세습에 의한 승계자들은 태생적 권리를 당연히 누리기 때문에 스스로 긴장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이로 인해 무능한 통치 끝에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일반화를 통해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무일을 강조한 주공의 ‘말’은 친정에 들어가는 성왕에게 충고가 아니라 간섭하려 한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 주공은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관리들도 곧 그러한 것을 본받아 선왕의 올바른 법을 바꾸고 어지럽혀 작고 큰일이 모두 그렇게 되기에 이를 것이고 백성들은 이에 그들의 마음으로 한스러워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입으로 저주하게 될 것”⁵⁴⁾이라고 강조한다. 이 대목은 마치 하나라 걸왕에 대해 ‘이 해가 언제 없어질까? 너와 나 모두 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백성의 원망과 저주로 탕왕의 역성혁명에 정당성을 제공했

52) 『尙書』, 「周書」, <無逸>, “周公曰, 嗚呼. 君子所其無逸 … 周公曰, 嗚呼. 繼自今嗣王, 則其無淫于觀于逸于遊于田, 以萬民惟正之供. 無皇曰, 今日耽樂.”

53) 『尙書』, 「周書」, <無逸>, “自時厥後立王, 生則逸. 生則逸, 不知稼穡之艱難, 不聞小人之勞, 惟耽樂之從, 自時厥後, 亦罔或克壽.”

54) 『尙書』, 「周書」, <無逸>, “此厥不聽, 人乃訓之, 乃變亂先王之正刑, 至于小大. 民否則厥心違怨, 否則厥口詛祝.”

던 일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주공이 여전히 섭정의 위상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점을 의식했는지 몰라도 주공은 은 왕조의 중종-고종-조갑제 그리고 주 왕조의 문왕 네 선왕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嗣王其監于茲)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소공(召公)은 천명을 부여받은 천자로서 성왕의 권위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주공과 대조적이다.⁵⁵⁾ 소공은 하.은의 사례를 거울삼아 왕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금님은 낮은 백성들이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함부로 했다 하여 바로 죽여 버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곧 왕업이 이루어 질 것이며, 임금자리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있으면 낮은 백성들은 곧 법을 지키게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쓰이게 되어 임금자리로 빛나게 될 것”⁵⁶⁾이라고 충고한다. 법에 따른 지배를 우선했던 주공의 의도와 군주의 자발적 책무를 우선하는 소공의 입장차는 단순히 법치와 덕치 간 통치 방법을 둘러싼 견해차라기보다 성왕의 권위에 대한 신하의 태도 문제였고, 주공의 간섭에 대한 소공의 견제를 시사한다.

그렇게 보면 주공과 소공 간 긴장관계는 성왕과 주공 간 긴장관계가 해소되었느냐 여부와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고, 성왕이 친정에 나서야 자연스럽게 해소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북면의 자리로 돌아갔어도 주공은 성왕에게 무일의 정치를 강조했다. 반면 소공의 “저는 감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할 수 없으니 삼가 폐백을 바치며 임금께 드림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명을 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바”⁵⁷⁾라는 입장 표명은 ‘무일’을

55) 쇼네시는 <召誥>와 <君奭> 두 편에서 주공 섭정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서주의 청동명문에는 주공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 반면, 태보 석에 대한 소개와 출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대조하면서 서주 시대 텍스트인 『시』, 『서』에서도 태보 석이 왕조의 건국자들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쇼네시는 <召誥>와 <君奭>에서 태보 석과 주공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해석에 실패한 결과, 서주 지배의 공고화에 태보 석의 역할이 이제까지 서주 역사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Shaughnessy 1993, 52-53).

56) 『尙書』, 「周書」, <召誥>, “其惟王, 勿以小民淫用非彝, 亦敢殄戮. 用乂民, 若有功. 其惟王位在德元, 小民乃惟刑, 用于天下, 越王顯.”

강조한 주공을 견제하면서, 주공의 ‘말’을 조롱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성왕의 친정이 이루어지면서 소공이 태보(保), 주공이 태사(師)로 좌우 재상에 임명되지만 소공은 기뻐하지 않고 늙음을 이유로 물러날 의사를 표명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공에 대한 소공의 견제와 양자 간 긴장관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주공의 변명을 볼 수 있다.⁵⁸⁾ 주공은 소공에게 자신이 섭정을 자임했던 것부터가 “석공이여, 불행히 하늘이 은나라에 큰 벌을 내려 은나라가 천명을 잃었고 우리 주나라가 그것을 물려받았오. 내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영원히 언제나 복 주심에 합치되도록 하늘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소? 내가 우리나라가 마침내 상서롭지 못한 결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하겠소?”⁵⁹⁾라고 천명미상(天命靡常)의 가변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함으로 인해 왕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변명한다. 주공은 “천명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과 하늘을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천명을 잃어 옛 분들의 공경스럽고 밝은 덕을 오래도록 계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천명미상의 근거를 들어 “하늘은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오. 나의 길은 오직 나를 편하게 한 문왕의 덕을 연장시켜 문왕이 받은 천명을 하늘이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현실의 정치영역을 장악하여 천명의 유지를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강조한다.⁶⁰⁾ 그리고 주공은 소공에게 “그대도 이런 것을 언제나 잘 생각하여 천명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57) 『尙書』, 『周書』, <召誥>, “我非敢勤, 惟恭奉弊, 用供王能祈天永命.”

58) <君奭>에서 주공의 ‘말’은 군석을 찬양하는 동시에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심지어 간청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은 <君奭>이 <召誥> <洛誥> <多士> <無逸>편 뒤에 배치되었기에 주공의 섭정 7년이 다 끝난 직후의 일로 간주하여 태보 석에게 은퇴를 만류하려는 것으로 봤지만, 태보 석은 최소한 30-40년 동안 국왕 막후에서 권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태보 석의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을 주공이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비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Shaughnessy 1993, 53-54).

59) 『尙書』, 『周書』, <君奭>, “周公若曰, 君奭. 弗吊天降喪于殷, 殷既隳厥命, 我有周既受. 我不敢知曰, 厥基永孚于休, 若天棐忱. 我亦不敢知曰, 其終出于不祥.”

60) 『尙書』, 『周書』, <君奭>, “不知天命不易, 天難諶, 乃其墜命, 弗克經歷嗣前人恭明德 … 又曰, 天不可信. 我道惟寧王德延, 天不庸釋于文王受命.”

의 새로 세운 나라를 다스리어 빛나게 해주소”⁶¹⁾라고 당부한다.⁶²⁾

상기한 주공의 ‘말’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면서 양자의 긴장관계를 공동체 보전이라는 ‘정치’의 목적을 둘러싼 경합으로 전환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주공은 소공에게 긴장해소를 위한 제안과 함께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즉 “공이여, 그대에게 나의 진심을 말하겠소. 태보 석이여, ... 내가 오직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을 빼고 그대와 뜻이 맞는 사람이 또 있느냐는 것이오. 말들 하기를 이 두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더욱 많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고 있소. 이 두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오. 그대는 행동을 공경히 하며 우리의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시대를 물려주도록 해야 할 것”⁶³⁾이라는 주공의 제안은 적대 차원에서 소공과 긴장관계로 형성된 현실정치 지형을 환기시키면서 왕조 보전이라는 공적 목표에 소공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입장표명이었다. 만약 주공이 자임했듯이 자신의 책무가 주나라 보전이라는 공적 성격을 지녔다면, 적대적인 정치지형은 공동체 분열을 가져와서 공적 영역을 무너뜨릴 위험한 동인일 수 있다. 따라서 주공에게 급선무는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시대를 물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자신의 공적 목표를 소공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⁶⁴⁾ 이를 위해 주공은 소공에게 “공은 백성들의

61) 『尙書』, 「周書」, <君奭>, “公曰, 君奭 … 今汝永念則有固命, 厥亂明我新造邦.”

62) 슈윙츠는 주 왕조 창건자들의 의도가 천명미상의 가변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분석하고 주공이 소공에게 행한 연설에서도 천명사상의 특별한 측면을 거론함으로써 향후 어느 왕조의 황제나 관료들조차 고민하게 만든 문제적인 원칙으로 남게 했다고 평가한다. 슈윙츠는 이 원칙이 갖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함의에 주목하면서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윤리적, 제의적 행위에 대한 궁극적 판단의 권위를 최고 신에게 돌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초월-하늘이란 왕조의 존속을 결정하는 최고의 도덕적 의지-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슈윙츠 1996, 83-85).

63) 『尙書』, 「周書」, <君奭>, “公曰, 君. 告汝朕允. 保奭. … 言曰, 在時二人. 天休滋至, 惟時二人弗戡, 其汝克敬德, 明我俊民, 在讓後人于丕時.”

64) 쇼네시는 <君奭>에서 주공의 ‘말’이 자신의 통치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군석에게 긴 안목(永念)으로 바라볼 것을 변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Shaughnessy 1993, 56-58).

성질을 알고 있으니 처음부터 그들을 잘 다스리면 끝까지 잘 다스려질 것이오. 오직 이같이 앞으로 공경히 잘 다스려 주시오”⁶⁵⁾라는 당부로 양자 간 견제와 의심에서 비롯한 긴장관계를 해소하려 한다. 최종적으로 성왕은 주공과 소공의 보필을 받으며 동쪽으로 회의를 정벌하고 엄나라를 멸망시키고 은의 잔여세력을 소멸시키는 등 왕조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예의와 음악이 바로잡히고 흥성해졌으며 법제도를 바르게 개혁했다고 한다.⁶⁶⁾ 그것은 ‘천명미상’이라는 무왕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계훈에 부합하는 ‘정치’인 셈이며 수미일관의 완성이기도 했다.

V. 결론

정치는 불가오류의 도덕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개개인의 시비비(是非非非)를 따지는 행위가 아니다. 만약 도덕을 정치의 필요조건으로 여기거나 일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정치행위를 판단한다면, 예를 들면 서유럽의 십자군 원정이나 종교전쟁, 한국의 당론투쟁 등에서 엿보이는 철저히 자기 신념에 매몰되었던 개인들의 맹신처럼, 역설적으로 반도덕적이거나 반인륜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곤 했다. 반면 동서양 모두 오랜 과거부터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의 원칙을 정립했고 이로부터 ‘정치적인 것’과 ‘정치’를 명확히 구별하며, 현실정치의 참여자야말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각성과 이해를 갖고 공적 영역으로 진입한 당사자들이었음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같은 지성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말’과 ‘글’로 남겨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에 대한 혐오의 태도가 만연된 실상을 들여다 보면, 어떻게 습속화된 개인적인 일상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이 정치행위를 평가할 수 있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또는 도덕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치란 가장 혐오

65) 『尙書』, 「周書」, <君奭>, “君. 惟乃知民德, 亦罔不能厥初, 惟其終. 祇若茲, 往敬用治.”

66) 『史記』, 「周本紀」, “召公爲保, 周公爲師, 東伐淮夷, 殘奄 … 興正禮樂, 度制於是改, 而民和睦, 頌聲興.”

스럽고 멀리해야 한다고 단언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고대 지식인들과 정치가 들조차 구별했던 공적 영역 vs 사적 영역, 정치적인 것 vs 전 정치적인 것, 정치 vs 일상의 구별이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더 혼란스러워진 것일까? 현재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라서 이제는 도덕적 완성을 먼저 이론 통치자의 출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현대사회의 대중 모두가 거대한 도덕 담론이나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서 선출되는 대표자 역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이 정도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가? 만에 하나 대중의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대표자가 도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 또한 형용모순에 불과할 뿐 논리로도 성립될 수 없다. 과거이건 현재이건 개인적 품성은 통치자로 선출되건 추대되건 명분으로 채택되었을 뿐 필요조건이 된 적이 없다. 도덕이 기왕이면 ‘좋은 정치’의 충분조건일 수는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도 여전히 모두가 이런 도덕률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공적 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이 지점에서 ‘정치란 바로잡음’이라고 공자가 제기한 전제를 ‘도덕이 정치’라거나 ‘정치는 도덕’이라는 명제로 등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서』를 고대 동아시아 역사 속 정치행위자들의 ‘말’을 ‘글’로 담고 있는 정치 텍스트라고 전제하고, 역사 속 혁명에 성공한 제왕과 공적 행위자로서 섭정이 더 명백하게 ‘정치적인 것’의 속성을 각성하고 ‘정치’가 ‘도덕’과 구별된 선후(先後)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競合)하는 과정임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표출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정치는 세계 속 인간다운 삶의 완성을 목표로 한 행위이며, 바로 이 점에서 공동체 보전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적대 차원의 긴장관계를 돌파함으로써 공동체 속 개인의 삶 역시 불멸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성을 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며 이를 주지해야 우리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尙書』. 『論語』. 『孟子』. 『荀子』. 『史記』.
- 김유미. 2018. “『尙書』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 『아시아연구』 21권 4호, 225-262.
- 강경현. 2022. “조선시대 경연에서 『상서』 강독의 의미.” 『퇴계학보』 151집, 91-138.
- 김비환. 2001.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파주: 한길사.
- 루이스, 마크 에드워드 저. 최정섭 역. 2006.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서울: 미토.
- 마키아벨리, 니콜로 저. 신철희 역. 2013. 『군주론』. 서울: 책마루.
- 무패, 샬탈 저. 서정연 역. 2020. 『경합들: 갈등과 적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서울: 난장.
- 슈월츠, 벤자민 저. 나성 역. 1996.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
- 아네트, 로널드 C. 저. 홍원표 역. 2022. 『어두운 시대의 한나 아렌트: 열다섯 저작 속의 소통윤리와 수사학』. 서울: 신서원.
- 아렌트, 한나 저. 이진우태정호 역. 2005. 『인간의 조건』. 파주: 한길사.
- Hsü, Cho-yun. 1999.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Loewe, Michael and Shaughnessy, Edward L.(ed.).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45-586.
- Nivison, David. 1995. “An Interpretation of the “Shao Gao”.” *Early China* 20, 177-193.
- Nivison, David. 2018. “The *He zun* Inscription and the Beginning of Zhou.” Schwartz, Adam C.(ed.). *The Nivison Annals*, Boston, De Gruyter, 1-16.
- Shaughnessy, Edward L. 1993. “The Duke of Zhou’s Retirement in the East and the Beginnings of the Ministerial-Monarch Debate in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Early China* 13, 41-72.
- 余英時. 1982. 『史學與傳統』. 臺北: 時報文化出版.

투고일: 2023.02.22. 심사일: 2023.03.22. 게재확정일: 2023.03.22.

Agonistic and Linguistic Tension over Justification of Revolution and Regency in *Shang Shu*

Youn, Dae Shik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olitics is not about implementing morality by deciding between right and wrong. Humans are conditioned beings in the world and are actors who aim to complete human life being restraint of being a member of the political commonwealth. Therefore, 'the political' refers to an agonistic based on boundary building and ten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 at the antagonistic dimension.

'Politics' is to determine the order of front and rear through agonistic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 Therefore, morality is a sufficient condition and not a necessary condition for political actors in that the real politics.

This study aims to prove through their “speech” that such a sense of problem was recognized and practiced by political actors in ancient East Asian mythology and history. Accordingly, *Shang Shu*, Book of Documents, should be approached as a political text, not a historical document.

Key Words | *Shang Shu*, Revolution, Regency, Tension, Agonistic, Linguistic Tension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홍태영 | 국방대학교

| 국문요약 |

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그려보고자 한다(IV장).

주제어 | 공화주의 모델, 민주주의, 정치신학, 연대주의, 주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0S1A3A2A01095861)이다.

I. 들어가는 말

1789년 프랑스혁명과 함께 등장한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결국은 주권자로서 인민의 출현은 근대 국민국가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 당시 그리고 19세기 동안 주권자로서 인민의 존재와 그것을 대표(representation)하는 의회 사이의 간극은 현실성의 차원에서, 즉 국민/인민 주권의 구체화에 있어서 난점을 드러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인민의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국민/인민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즐로가 말했듯이, 19세기 프랑스는 “권력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었던 인민의 한 분파가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주권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인민 주권 개념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 것이며,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는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동즐로 2005, 29). 19세기 동안 프랑스 민주주의의 중심 과제 중의 하나는 국민/인민주권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둘러싼 것이었다. 국민주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즐로가 제기했듯이, 1848년 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적인 것(le social)’의 문제는 국민주권을 둘러싼 이해의 간극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그것의 해결이야말로 1789년에 시작된 근대 국민국가의 구체적인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1789년에 시작하여 19세기 동안 프랑스 정치를 규정하였던 이성 과 수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것은 프랑스혁명과 함께 등장한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주체로 설정된 시민과 시민들의 집합체로서 국민의 위상,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확립된 국가권력의 형성과정, 즉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라는 민주주의의 구체화이든 대표를 통한 정치이든, 이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정치철학에서 전제하였던 근대적 개인들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주권의 실현 과정이었다. 19세기 말 제3

공화국은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인민주권 및 국가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였다. 공화주의적 교육을 통한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의 정립과 연대주의를 통한 공화주의적 연대의 형성 및 그에 기반한 ‘사회적인 것’의 해결은 국민-국가의 연결로서 주권 개념 및 대표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기도 하였다. 주요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면서 ‘의회주의’를 확립시켰고, 그것은 대표 개념은 물론 주권 개념의 변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즉 1789년 혁명 시기에 있었던 국민/인민주권의 분리 및 ‘국민’과 ‘공화국’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의 작동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근대정치의 여전한 아포리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근대의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탄생과 국민으로의 구성 그리고 그들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과정에서 작동하였던 대표의 과정과 주권의 실현과정은 세 개의 분리된 과정이자 동시에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맞물려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875년 성립된 프랑스 제3공화국은 19세기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냄으로써 1789년 혁명에서 등장한 프랑스 공화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공화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고, 그러한 공화국의 틀은 현재까지 프랑스 공화국의 모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제3공화국은 타협으로서 공화국으로 불린다. 한편으로 19세기를 거치면서 극단적 흐름들이 사라졌다. 즉 1871년 파리코뮌을 통해 극단적이었던 블랑키주의자들이 사라졌고, 그 이전 제2제정을 거치면서 왕당파와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정치 전면에서 후퇴하였다. 따라서 중도세력들, 중도우파의 자유주의자와 중도좌파의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타협으로서 제3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혁명 이후 대립하였던 다양한 이념과 사유들의 타협을 통한 공화국의 구성이었다. 정치세력의 측면에 타협적 공화국을 공화주의화하는 과정을 통해 공화국의 내용을 채우고자 하였고, 또한 그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자 동시에 19세기 동안에 제기된 해결의 방식들에 대한 반성적 결과이자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

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실행할 ‘이성’과 공화주의적 ‘덕성’을 갖춘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구성 – 국민주권의 실현 – 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적 국가를 통해 ‘사회적인 것’을 해결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통합을 성취해 내는 것이 프랑스 제3공화국을 통해 구성해낸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모습이다.¹⁾

국민의 구체적 구성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이라는 주권의 실현은 1789년에 시작된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의 일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개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한 이해는 1789년에 부활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1) 공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신로마공화주의, 즉 고대 로마공화국과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의 부활 속에서 법에 의한 통치, 혼합정, 비지배적 자유 등에 대한 부각과 그것의 현재성에 대한 논의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와 대비되어 프랑스 공화주의는 주권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인해 혼합정 보다는 인민주권 개념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라 덕성을 갖춘 시민에 기반한 정치참여에 대한 강조,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 등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3공화국에서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은 공화국의 내용을 채우고 프랑스 공화주의를 구성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로마적 공화주의 전통, 즉 대서양적 전통의 공화주의와 루소적 흐름의 대륙적 공화주의 차이에 대해서는 홍태영(2021) 참조.

그려보고자 한다(IV장).

II. 공화국과 시민

1. 공화주의적 개인주의

19세기를 거쳐 민주주의가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 형성과 시민교육의 문제는 정치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시민은 우선은 정념과 의지, 욕망의 주체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형제애의 주체이자 공적 덕성의 실현자라는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존재였다. 시민교육과 관련한 제3공화국의 첫 번째 법률이었던 1882년 3월 28일 법은 일종의 ‘신이 없는 학교에 관한 법’으로서 종교 및 도덕 교육을 도덕 및 공민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개념과 단절하고 시민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공민적 의무(*devoirs civiques*)’와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위생학(*l'hygiène du corps et de l'esprit*)’을 근본적인 도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Murard et Zylberman 1996). 자율적이고 책임성을 갖는 개인들이 사회라는 축조물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3공화국이 흔히들 루소와 콩도르세를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공화국 개념은 물론 그들이 상정하였던 시민의 모습, 즉 이성과 공화주의적 애국심 모두를 갖춘 시민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형제애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화해시킬 수 있는 공화주의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공화국의 시민들에게 개인의 자율성 강조하고, 더불어 도덕과 공민교육을 통해 도덕적 규율을 내면화시키고자 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기존의 종교적 색채의 도덕 개념을 거부하고, 도덕을 관찰과 추론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과학으로 만들고자 하였다(Lalouette 2002, 145). 즉 형이상학적 도덕을 거부하고 도덕을 “습속의 과학”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화주의적 도덕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은 중요한 도구로 제시되었다. 공화주의적 개인주의는 시민과 인간의 열망을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며, 개인 능력의 만개와 국민적 집단 이익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대립을 도덕교육을 통해 해소해야 하였다. 도덕 및 공민 교육은 시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규준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뒤르케임의 사회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주의는 개별인간(*la persone*)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la personne sociale*)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에 근거하는 것이다(Déloye 1994, 34). 이러한 뒤르케임의 사유체계는 뒤르케임에 영향을 미친 르누비에(*Ch. Renouvier*)나 푸이에(*A. Fouillé*)의 신칸트주의의 영향이다. 개인주의에 충실하였던 르누비에였지만, 원자론적인 개인주의에 맞서서 사회 속의 개인을 사유하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사유하고자 하였다(Blais 2007, 145-147). 푸이에 역시 개인들 사이 존재하는 개인의 의무가 사회적 연결을 위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erstein 1999, 129).

심리학 역시 공화주의 도덕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의지(*volonté*)에 대한 교육, 진정한 의지, 계몽되고 이성적이며 자유로운 의지가 바로 개인성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형이상학적 도그마와 종교에 대항하는 ‘과학’에 대한 신념, 합리적 이성 등에 대한 강조는 콩도르세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Nicolet 1982, 288-289). 개인의 해방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이성적인 시민의 상 속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우면서 법에 종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

발적인 복종이 공화주의적 도덕의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Déloye 1994, 90).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힘이었다. 복종해야 할 공화국과 공화국의 법이 결코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진보’의 과학적 법칙에도 부합하고 또한 합리적인 이성의 원칙과도 합당한 것이다. 또한 공화주의적 도덕가들은 특정한 정념, 즉 삶의 본질이자 도덕적 에너지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정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성(raison)과 의지(volonté)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념(passions)에 근거하여 행위하도록 하며,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 속에서 정념이 이끌어지도록 한다(Déloye 1994, 95). 정념들을 규율하기 위해 이성애 호소하는 것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 계몽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공화주의 도덕가들에게도 타당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었다.

공화주의적 도덕교육과 더불어 공민교육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에서 보통선거권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투표행위가 시민 형성에서 본질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며, 선거행위는 신성한 의무라고 간주되었다. 투표는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계몽적이지 동시에 이익으로부터 분리된(désintéressé) 행위”여야 했다(Déloye 1994, 124). 투표행위자의 독립이 강조되었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주권의 표현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시민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투표권자는 개인의 이익을 떠나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출해야 했기에, 사적인 행복을 일반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투표권자는 사회적 지평을 확장해야 하며, 보편적인 틀 속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공화주의 도덕가들은 개인의 이기심과 시민공동체에의 참여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진정성 있는 시민이란 누구인가? 라고 물었고, 그것은 “투표행위가 있는 날, 바로 일반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는 시민”이라고 답하였다(Déloye 1994, 125).

당시 공화주의 도덕에 대한 강조 속에서 공화주의자들이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해 상상했던 것은 ‘과거 구체제와 유사성을 갖는 공동체’와 ‘사회적 갈등이 난

무하는 현대 사회' 사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는 곧 주권자로서 등장한 국민(nation)이라는 정치적 주체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 네이션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상상이기도 하였다. 다시 묻는다면 nation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회인가?였다. 퇴니스(Tonnies 1887)가 제시한 공동체인가, 사회인가라는 개념적 대립 속에서 국민이라는 집단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퇴니스에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닌 반면에, 사회는 이익의 개인화에 근거하여 존재한다고 구별되었다. 따라서 네이션을 개인들의 이익의 단순한 총합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네이션을 '이익들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동정(sympathie)에 근거한 사회'라는 것, 개인들의 이익의 필연적 연대의 공동체로서 상상하고자 하였다. 학교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의 모습은 개인주의와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민적 의무를 실행하는 시민이었고, 이들에 의해 구성된 네이션의 모습이 그러한 이중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모델에서 학교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시민'으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시민으로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학교라고 간주되었다. 개인이라는 기초에서 출발하여 공동체라는 최종 지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 삶을 구성해내는 방식이었다.

공동체로서 네이션의 형성 과정은 19세기 말 가톨릭 공동체라는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은 물론 19세기 자본주의 발달 속에서 형성된 공리주의적 사회 개념 모두를 거부하면서, 개인주의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세속화된 정치적, 문화적 동질화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해 내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네이션이 프랑스혁명 이래 공화주의자들이 강조해 온 "위대한 국민(Grande Nation)"으로서 공화주의적 프랑스를 의미하였고, 이는 빅토르 위고가 강조하였듯이, "자유와 진보의 근원으로서 인류의 등대"라는 것이었다(Darriulat 2001, 239에서 재인용). 위대한 국민의 공화국으로서 프랑스는 또한 보편주의적 공화국(République universelle)으로서 인간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 철학과 국민

적 공간 – 애국주의적 공간으로서 – 이라는 경계의 필요성 사이에서 화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1차 대전이 종결된 후 레온 부르조아(Léon Bourgeois)가 시도한 국제연맹 – Société des nations –이었다(Berstein 1999, 132). 그것은 애국주의와 평화주의의 결합이었고, 공화국과 보편적 문명의 결합이었다.

2. 공화주의적 연대와 사회적 공화국

공화주의적 도덕을 내면화한 시민의 형성이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에게 주요한 과업이었지만, 그것의 한계는 분명하였다. 국민 및 공화국 내부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킬 장치가 필요하였다. 그 장치로서 제시된 것이 공화주의적 연대 및 연대주의였다. 공화주의적 연대 및 연대주의는 민족/국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소속감 및 사회적 유대를 실질적으로 형성 시킴으로써 국민적 동일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텍-루소법(la loi de Waldeck-Rousseau 1884)을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국가는 한걸음 물러서서 그들 사이 분쟁의 심판자 역할만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경기의 규칙을 가능한 한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발텍-루소법은 노동자의 권리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어찌 됐건 적어도 19세기 내내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연대와 연합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물론 1860년대 나폴레옹 3세에 의해 노동조합의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그것은 경제적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제 노동조합에게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것’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해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고, 공화국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찾아야 했

다. 이는 제3공화국 초기 공화주의자들이 공화국을 확립하고 공화주의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공화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러한 공화국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공화국을 구성해 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인식한 것이고, 19세기의 오랜 역사적 과정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미 토크빌이 이해한 사회(학)적 상태로서 민주주의, 즉 단지 주권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화주의적 도덕가들은 루소가 인식하였던 개인주의와 시민성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는데 성공했다고 자신하였다. 교육과 관용, 공민교육은 의지(volonté)에 대한 교육이며, 자신의 통치로서 집단적 의무이자 권리의 총체로서 인식된 공민주의의 행사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 시민권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야 했다. 공화주의적 개인주의와 세속화에 기반한 공화국의 도덕이 완성되는 것은 ‘연대(solidarité)’와 ‘연대주의(solidarisme)’를 통해서였다. 결국 뒤르케임의 사회학적 도덕을 통한 공화국의 도덕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르케임은 쥘 페리에 의해 시작된 세속화된 도덕 개념의 한계 혹은 잘못된 전제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쥘 페리의 세속화된 도덕 개념은 결국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에게 유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Durkheim 1975, 464).

사회학자로서 뒤르케임은 도덕 문제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접근방법을 비판하였으며, 결국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은 사회적이고 물리적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도덕 역시 그러한 인간들과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결국 도덕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었고, 뒤르케임은 도덕의 존재이유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목표에 봉사하는 개인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뒤르케임이 도덕의 개인주의적 토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도덕은 개인이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세속화의 도덕만으로는 충분

치 않다고 판단한 뒤르케임은 집단적 전체만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각각의 시민들에게 일반이익을 위한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뒤르케임은 “개인의 이기주의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집단의 힘일 뿐이다”라고 보았다(Durkheim 1996, 401).

미래의 시민은 ‘사회적인 것’이 추상적인 총체가 아니라 사회학이 인식하는 살아있고 복잡한 실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종류의 이념, 믿음, 감정들의 총체를 표상하며, 개인들에 의해서 구체화(실현)된다; 그리고 그 이념들의 최우선에 도덕적 이념이 존재한다.”(Durkheim 1974, 79). 바로 도덕이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시키는 권리와 의무의 체계를 지속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사회적 삶의 조건으로서 연대(solidarité)가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노동분업의 과정은 개인의 탄생과정이며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킨다. 개인은 사회적 인간성을 인식해야 하며, 그를 위해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이기주의적 충동과는 다른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덕이 필요한 것이다. 뒤르케임은 도덕의 세속화와 공민적 의무의 합리적 증명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세속화된 도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화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연대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기의 전환기에서 뒤르케임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기반하고 계몽주의 이래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주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뿌리를 둔 초기 공화주의 도덕가들의 개인주의적 행보와 사회적 인간과 그 의무 개념에 기반하여 이제 갓 탄생한 사회학의 행보가 뒤르케임의 도덕에 대한 사유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공화국은 개인의 주도권과 소유권의 보호라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그를 위한 국가의 정정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성취하여야 했다. 일반이익의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의 명분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뒤르케임의 연대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확장하여 연대주의(solidarisme)를 구성해낸 레온 부르조아(Léon

Bourgeois)는 연대주의를 통해 기독교가 정식화한 자선(charit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시에 프랑스혁명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또한 제3공화국 초기 시민 교육 교과서가 제시한 형제애의 추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레온 부르조아의 저서 『연대주의(Le Solidarisme)』(1896)에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는 ‘사회적 빛’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타자에 대해 인정해야 하는 의무는 각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모두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도덕적 의무는 이익의 대가로서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빛에 대한 인정이다. 국가는 개입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제공하고 또한 동시에 개인에게 모두의 더 좋은 삶을 위해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중적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뒤르케임의 사회학과 레온 부르조아의 흐름에 앞서 독자적으로 ‘사회경제학(l'économie sociale)’의 전통에서 연대와 연대주의를 제시했던 이는 지드(Charle Gide)이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사회경제학의 전통은 정치경제학 전통,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을 비판하면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상호부조,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결사체를 통해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Gueslin 1998). 사회경제학자들에게 ‘연대’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이익들의 연대’였고, 이를 위한 경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샤를 지드의 경우, 형제애(fraternité)는 이미 낡은 개념이며,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연대’는 결코 자족적이지 못한 개인들에게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면서 타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서로를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연결시키면서 공동 운명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Blais 2007, 199). 지드는 협동조합체제에서 연대가 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사회적 연대의 표상’으로서 국가가 의식적인 연대를 구성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학적 흐름과 사회경제학적 흐름 모두 19세기 동안에 경쟁하였던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사이에서 종합적 테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맑스주의의 계급투쟁이나 계급 개념의 거부와 자유주의의 방임주의적 국가관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었다.

제3공화국 초기의 공화주의적 개인주의를 넘어서 연대주의에 근거한 사회적 공화국의 모습은 프랑스 공화주의가 영미적 공화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치체제와 제도를 통해 구현된 형태이자 모델로서 확립되었다. 제3공화국이 만들어낸 ‘공화주의 모델’은 프랑스 공화주의의 구체성이다. 연대주의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은 1907년에 급진공화당과 급진-사회당이 공동으로 채택한 ‘낭시 프로그램 14개 조항’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어린이, 병약자,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여성과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입법을 실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시 고용주의 책임, 보험제도, 노사 분쟁 시 조정 의무 등 집단적 계약을 시각을 통한 접근 등으로 제시되었다(Berstein 1992, 194-195).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개입을 통해 소생산자 및 중산층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정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누진세의 강화를 통한 재정의 방식, 구성원들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한 사회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방식, 개인들의 소유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의 방식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해 공화주의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는 ‘중간계급’과 다양한 중간집단들로 구성된 사회, ‘중간계급의 프랑스’였다. 물론 루소가 꿈꾸었던 ‘소생산자의 사회’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곤란함에 부딪혔고, 구체적으로 20세기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연대주의에 근거한 사회정책과 프랑스 사회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III. 의회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전환

공화주의적 시민과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이에 기반한 주권의 구성의 문제가

등장한다. 결국 어떻게 인민주권을 구성할 것인가? 또한 현실적으로 등장한 원자화된 대중 사회에 어떻게 형태를 부여하고 비유기적인 군중의 명령을 어떻게 내쫓을 것인가? 이 문제가 19세기 말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 문제는 근대 정치철학적 인민과 19세기 등장한 사회학적 인민 사이의 괴리 속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또한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결합된 것이었고, 중국적으로 이어지는 주권의 구체화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와 주권(souveraineté)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었다.²⁾

1. 의회주의의 확립

1848년 혁명과 함께 선언된 남성보통선거권의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는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제2제정 기간 동안 황제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 - 이른바 신임투표(plébiscite)의 역할 - 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장치로서 투표행위가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을 만들고자 하였고, 투표행위의 실질적인 결과가 민주주의적 절차로서 자리잡도록 시도하였다. 민주주의적 절차로서 투표행위는 무엇보다도 19세기 동안 끊이지 않았고, 1871년 파리코뮌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의 일상화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시민의 투표행위는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투표를 통한 대표행위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의 관리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폭력과 소요, 즉 폭동은 이제 더 이상

2) 의회주의의 다양한 흐름과 이론적 특성을 탐구한 Ihalainen et al.(2016) 그리고 Aerts et al.(2019) 등에 따르면, 의회주의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대표, 주권의 문제와 함께 심의(deliberation), 책임(responsibility)의 문제를 제시하고 네 가지 측면에서 의회와 근대 의회주의 확립을 둘러싼 특수성들을 살피고 있다. 의미있는 접근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볼 것처럼, 프랑스 의회주의의 확립과정을 통해 본다면, 심의의 문제는 대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일정하게 결합되며, 책임의 문제는 권력분립의 문제를 통한 주권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행위의 개념 속에서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았다. 투표를 통한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 가능성이 열렸고, 또한 투표행위는 사회적 규율화의 장치로서 확정되었다. 또한 19세기 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권의 확장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물론 사회적 이익집단 및 노동운동의 조직화 그리고 정당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의회는 정치적 쟁투의 장이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정치적 의제와 사회적 요구들을 수렴할 역할을 부여받는 등 정치사회적 장의 중심에 등장하였다(Aerts et al. 2019, 10). 당시 르봉(1895)의 말처럼 의회는 “현대의 문명화된 이상”으로 표상되었다(르 봉 2005, 216).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의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극단적인 혁명을 피하기 위해 보나파르트주의자나 보수주의적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 혹은 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권력의 교체 가능성’을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이전의 ‘완고한’ 공화주의자들과는 차별화된 점으로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Grévy 1998, 52-53).

제3공화국 들어서 의회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내각의 책임성(responsibility) 개념이 도입되었다(Garrigues & Anceau 2016, 57-58).³⁾ 즉 의회의 의원은 질의하고 발의하고 결의하고 또한 내각의 구성원을 호출하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의회와 대통령의 초기의 권력균형은 맥마혼(Mac-Mahon) 대통령에 의해 의회해산권이 실행된 후 겪은 위기 이후 의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방향, 즉 일반의지의 실현체인 의회의 우위라는 프랑스혁명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투표 행위의 결과로서 성립된 의회는 이제 공화주의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주권자로서 네이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3) 프랑스의 의회주의는 일반적으로 혁명적이기보다는 덜 급진적인 시기에 영국의회의 방식대로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95년 테르미도르 이후 양원제, 1815년 이후 내각책임제나 심의(deliberation)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들이다(Ihalainen 2016, 29). 19세기 동안 공화주의 프랑스에 대립하는 자유주의 영국 모델이라는 구도가 존재하였고, 프랑스 혁명 이후 영국에 대해 우호적인 흐름들은 영국 의회주의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었다(Darriulat 2001).

확립하고자 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래 ‘인민(people)’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따라서 구체성을 띤 인민의 모습으로 개념화되었다면, 이제 ‘국민(nation)’은 응축된 신체이자 추상화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는 인민과는 거리를 두는 의회 권력이 강조되고 국민주권에 대한 강조는 동시에 의회, 즉 국민의 일반의지의 체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이것은 거리의 구체적인 인민적 권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이제 국민주권 개념은 대의제적 형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주권자로서 국민의 추상화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실질적인 주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osanvallon 2000, 233). 이는 인민적 권력의 위협성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의회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주권자라는 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시기 국민주권 개념을 헌법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카레 드 말베르그(Carré de Malberg 1922)는 1791년의 비인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된 국민주권과 1793년 시민들의 세분화되고 직접적으로 활동적인 힘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 인민주권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조직화된 유기적 집단으로서 국민과 비유기적이고 위협적인 균중으로서 인민의 구별이었으며, 대의제에 근거한 국민주권과 의회주의의 강화로 이어졌다. 국민주권은 정부의 대의제적 형태와 분리될 수 없었으며, 일반이익은 그것에 대한 해석과 조직화된 형태를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었다. 국민주권의 표현이자 그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는 더 이상 임무의 전달 – 마치 직접민주주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임명령(mandat impératif) – 이 아니라 통치엘리트의 선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일반이익을 숙고하는 현자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이해되어야 했다.⁴⁾ 결국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및 일반이익의 이해

4) 이미 버크(E. Burke)가 구분하였고,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현실적(actuel)’ 대표와 ‘가상적(virtuel)’ 대표 사이의 긴장이며, 오래된 논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Pitkin(1967); 비에리아 & 런시먼(2020) 참조.

등은 프랑스혁명 이래 강조되었던 ‘수’에 대비되는 ‘이성’에 대한 강조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미 기조(F. Guizot)에 의해 선언되었던 ‘이성의 주권’이 비민주주의적이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 즉 민주주의적 엘리트주의이며, 일종의 ‘선출된 귀족정’이라고 할 수 있다. 1880년대 수상이었던 쥘 페리는 민주주의적 엘리트에 근거한 공화주의 제도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그 목표가 “공화국을 보통선거 기반 위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수(nombre)’의 위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Rosanvallon 2000, 241).⁶⁾

이와 함께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 즉 인민/국민의 관계 역시 새롭게 설정되었다. 과거 위임명령(mandat impératif)에 대신하여 대표위임(mandat représentatif)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당시 헌법학자 에스맹(Esmein 1896)은 대표는 하나의 기능이며, 의회는 선거 지역의 축약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자율적인 권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권적 인민의 대표자들을 특징짓는 것은 그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인민은 대표자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Rosanvallon 2000, 263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대표 개념을 통해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실현한다고 간주되었고, 공화국 역시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새롭게 규정되었다. 능력있는 정부에 대한 사회학적 전망으로서 ‘절대적 공화국(République absolu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⁷⁾ 뒤르케임은 위임명령을 비판하면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

5) 로장발롱은 제3공화국은 민주주의적 공화국이지만 동시에 이성의 주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조의 계기(le moment Guizot)’였다는 주장하고 있다 (Rosanvallon 1985).

6) 의회가 광범위한 사회의 충실한 복제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우수한 부분의 집합이라는 사유는 19세기 영국에서도 역시 존재하였다(te Velde 2019, 32-33). 대표로서 의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다.

7) 강베타(Gambetta), 페리(J. Ferry) 등 3공화국 초기 20여년 동안의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을 ‘보통선거권 위(au-dessus du suffrage universel)’에 놓고자 하였다. 즉 정부의 공화주의적 형태가 ‘수’에 의해 좌우되거나 여타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시하였다. 뒤르케임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사고는 통치되는 사람들의 그것과 동일하고 융합된다”는 사유가 바로 ‘명령적 위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뒤르케임은 국가의 역할은 “인민대중의 비판성적 사고를 표현하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성적 사고에 더욱 깊이 생각된, 따라서 다르지 않을 수 없는 사고를 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국 국가는 “새롭고 독창적인 표상의 중심이고 또 중심이어야 하며, 이런 표상은 사회로 하여금 보다 큰 지성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뒤르케임 1998, 163).

대표 개념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정하게 민주주의적 변화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였다. 우선 선거 양상이 변화하였다. 선거에서 공약집이 등장하여 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했다. 결과적으로 1881년 선거는 강베타(Gambetta) 등 공화주의자들의 의회진출에서 보이듯이 과거 “명사들의 공화국(République des notables)의 패배”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이러한 과정은 “민주화”의 진행이 새로운 형태의 “과두정화”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민주주의, 즉 대중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증오와 멸시가 증가되었고, 또한 동시에 대표자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의회주의의 확립과정은 19세기 말 선거권이 확장되면서 민주주의의 확장, 즉 대중의 정치적 참여 공간의 확장이라는 사실과 맞닥뜨리면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점에서 의회의 이러한 권한 및 권력 강화에 대하여 의회의 권한 남용

점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특징을 부여하고자 하였다(Nicolet 1982, 273-277). 이러한 공화국에 대한 절대화가 이후 프랑스 정치사의 불편함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니콜레는 지적한다. 즉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신화화, 공화주의에 내재한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의 과도한 경향 등이 그것이다.

8) 사실상 19세기 내내 국회의원들의 위선과 거짓, 사악한 특성 등에 대한 경고와 풍자가 존재했지만, 이 시기 일종의 “전형적인 사회적 형태”로서 자리잡았다(Rosanvallon 2000, 280-281). 마치 당시 언론에서 ‘자본가’ 혹은 ‘유대인’이 그렇게 묘사되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나아가 의회의 전능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⁹⁾ 대표적으로 이 과정에서 당시 헌법학자들의 역할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지나친 출몰로부터 의회 및 의회주의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동시에 의회의 법률적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나아가 ‘일반의지의 주권’으로 등장하면서 입법자인 의회의 전능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dor 1995, 93-94).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기 ‘법치국가(Etat de droit)’ 개념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droit’에 묶여 있어야 한다. 여기서 droit는 이중적 의미, 즉 ‘법(law)’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권리(right)’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Etat)는 droit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치국가(Etat de droit)’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법치국가의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정치적 개념으로서 ‘국민’ 혹은 일반의지 혹은 권력의 기원의 문제 등에 매달리지 않으며, 합리성과 그 기능성에 관심을 둘 뿐이다. 모든 정치적 문제는 이제 법률적 문제로 전환되며,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는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에 의해 대체되고, 개인은 시민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Redor 1995, 96).

20세기에 들어서 프랑스 의회는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의회주의에서 규칙에 근거하고 제한된 의회주의로 공화주의 체제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08년 클레망소가 “우리는 너무나 긴 연설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Garrigues & Anceau 2016, 58 재인용)라고 불평했듯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총회에서의 토론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이제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전문화로 전환이 이루어졌다(Bouchet 2016, 165). 의회주의의 정착은 다른 한편으로 정당, 즉 제3공화국에서 서서히 체계화되고 1910년 법률을 통해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되는 ‘원

9)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의회의 전능에 대해 독일의 의회주의 비판자들은 “의회절대주의(parliamentary absolutism)” 혹은 “절대적 의회주의(absolute parliamentarism)”라는 표현을 통해 묘사하면서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켰다(Raithel 2019, 164).

내 교섭단체(*groupes parlementaires*)’의 현대적 정당으로의 체계화와 맞물린다 (Hudemann 1998, 320-329). ‘의회 내 그룹’은 서서히 조직화되고 특히 투표 규율의 확립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요한 결정, 특히 예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요한 법률의 입안과 집단적 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의회의 의제는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합리화된 의회주의(*rationalized parliamentarism*)”를 만들고자 하였다.¹⁰⁾

2. 민주주의의 다층화

급진적 혹은 사회주의적 정당에게 의회 및 의회주의는 19세기의 산물이자 통제와 지배를 위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의 도구로서 이해되었다. 나아가 엘리트주의적 의회주의로의 경향은 민주주의적 견제 및 민주주의와의 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라는 개념은 의회의 국민(*nation*)과의 결합을 의미하였다. 의회는 다양한 국민을 위한 공간이자 국민적 만남의 장소로서 간주되었다(Aerts et al. 2019, 11). 비록 프랑스혁명에서 시에이에스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서 이행을 통해 추구했던 것이 인민(*people*)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 권력(*representative power*)”을 확립시키는 것이었지만, 19세기를 걸쳐서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힘은 대표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였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의미있는 실현이라고 판단하였고, 의회라는 대표권력을 통한 대의제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19세기말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1880년대 의회주의에 대한 강조 및 과두정화되는 공화국에 대한 비판의

10) 프랑스나 영국 모두 의회주의의 발달은 일정한 행정부의 자율화를 동반하였고, 이 시기에 현대 국가의 특징이자 20세기 들어서 정치사회학자들의 관심사가 된 관료제의 등장을 볼 수 있다(Dreyfus 2000, 141).

의미로서 ‘국민투표(réferendum)’가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제2제정에서 민주주의의 희화화된 형태로서 작동하였던 신임투표(plébiscite)와 구별되어 인민에의 직접적 호소 및 직접적 입법 등의 사유와 함께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흐름이었다. 이는 ‘이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수’에 대한 소홀함이 분명해지면서 등장한 반작용이었고, 또한 의회의 전능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길거리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manif” - 시위를 의미하는 ‘manifestation’의 일종의 약어 -는 거리를 평화적이고 의례화된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점거하는 행위였다(Rosanvallon 2000, 324). 이것은 과거의 폭동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었고, 하나의 정치적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행동에 대한 원초적 형태였고 또한 대표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수’의 평화적 연출이었다. 결국 의회주의에 일정한 반발은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적 표출이라는 반작용을 가져왔다. 물론 오랫동안 19세기 프랑스를 괴롭혔던 폭동과 같은 폭력적 방식의 민주주의적 표출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다양한 표현양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르봉이 군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엘리트에게서 그 구제책을 찾으려 했다면, 타르드는 “훨씬 더 맹목적이고 훨씬 더 지속적인” 군중과 여론에 의해 “감염”되고 “지성화된 공중”을 구분하고자 하였다(르봉 2005; 타르드 2012a). 타르드의 경우 여론(l’opinion publique)은 사회적 일반성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자 동시에 일반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특히 타르드는 ‘모방’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공통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집단의 힘에 의한 ‘대중민주주의(G. Le Bon)’가 아닌 각 부분이 그 자신의 전통에 따르고 개인들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분산된 국민에 의한 공중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타르드 2012b; 모스코비치 1996, 337). 또한 타르드는 여론과 선거는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충적인 정치적 형태들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실제적으로 의회가 국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주권을 구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문의 성장때문이었다고 보았다(타르드 2012a, 90-91). 르봉이 군중

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한 지도자의 주위에 모인 대중의 민주주의를 원했다면, 타르드는 신문,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당면 문제에 따라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공중(le public)의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모스코비치 1996, 337). 타르드는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이 군중을 공중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제3공화국의 ‘인민’은 적절하게 ‘이성’에 의해 통제된 ‘수’로서 표현되었다.

의회주의의 절대화를 경계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는 가운데 등장한 또 다른 개념은 산업민주주의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통제, 노동자위원회 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의 영역에 적용된 일종의 대의제 형태였다. 즉 산업의 영역에서도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합리적 조직화와 계획화라는 오래된 생시몽주의적 전통 - “공화국을 산업화하자” - 이 부활한 것이기도 했다(Rosanvallon 2000, 350-353). 1936년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마티농협약은 단체협약제도, 노동권의 확대, 고충처리위원회제 등과 함께 모든 기업에 노동자들의 대표가 진출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민주주의를 이룰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디칼리즘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노동조합은 “파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osanvallon 2004, 289). 생디칼리즘에 대한 인정은 경제적, 사회적 조절/규제에 있어서 보다 조직화된 시대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2년 노동조건과 관련한 집단계약과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일종의 집단협약(convention collective)이 이루어졌다(Rosanvallon 2004, 295). 개인-유권자라는 원자화, 추상적인 집단적 의지의 산술적 집합에 대하여 생디칼리즘의 창시자들은 집단의 경제적 뿌리에 근거한 보다 실질적인 응축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전자는 일종의 “Démocratism”으로 지칭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생디칼리즘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선다고 제시되었다(Rosanvallon 2004, 300). 민주주의가 의견(opinion)의 지배를 추구한다면, 생디

칼리즘은 이익의 동일성/동일한 이익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담론의 체제라고 한다면, 생디칼리즘은 생산의 문제에 둘러싸고 조직된다. 민주주의가 순수하게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생디칼리즘은 구성원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조직을 “의회주의화(parlementariser)”하는 모든 것을 비난하였다. 생디칼리즘은 거의 유사-공적 제도로 확립되었고, 나아가 진정한 사회혁명의 주체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생산관계의 완벽한 재조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생디카 주권(souveraineté syndicale)”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Rosanvallon 2004, 351). 일종의 “정치적 생디칼리즘”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적 정치사회와 생디칼리스트적인 경제사회 사이의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집단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개인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부정처럼 비칠 수 있었다(Chatriot 2002, 20).

하지만 급진공화주의자 레온 블룸(L. Blum)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적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고,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듯이, 민주주의의 두 측면의 긴장과 공존은 분명하였다(Chatriot 2002, 1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의회든 혹은 다른 기구이든 대표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누가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주권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라는 국가권력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중간집단의 제거를 통해 개인/시민에 기반한 대표와 개인/시민의 집합체로서 국민에 기반한 대표 체계와 주권이 확립되면서 근대정치가 구체화되었다면, 19세기 ‘사회적인 것’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인 것’의 해결로서 ‘연대’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의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연결고리를 위한 대표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의 시도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생디칼리즘의 확산 및 다양한 민주주의적 구체화 속에서 공화국 정부는 노동위원회(Conseil du travail)를 통한 노동문제의 인식의 장치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대표 과정에 대한 의회의 독점을 막고 행정부 역시 일정한 대표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유의 전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제3공화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인식의 장치로 위원회를 행정부 내에 설치하였다. 행정부가 기존에 입법부의 법률을 실행하는 ‘집행부’라는 한정된 성격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적극적 인지와 그에 바탕을 둔 적극적 해결자로서 등장한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또한 강화되면서 1932-33년에는 강한 ‘반의회주의’의 반향 속에서 정치적 결정의 신속화, 행정의 효율성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Roussellier 1992, 322-323). 결국 1936년 인민전선정부 하에서 국가경제위원회(Conseil National Economique)가 법으로 규정되어 소비자-노동자-자본가를 세 축으로 하여 국가경제 영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손영우 2018, 194-195).¹¹⁾

노동조합 및 다양한 방식의 대표기구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이성에 대한 독점을 막고 다양한 방식의 이익 대표 체계를 구성해 냈으로써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 혹은 주권의 재구성이라는 사유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의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을 이해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표를 통한 주권의 구성을 사유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기조(F. Guizot)의 이성의 주권론의 민주주의적 방식의 전유라고나 할까? 그러한 점에서 기조의 시대에 이성의 주권론이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의 경향을 보였다면,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 시대에 이성의 주권론은 대표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주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경시했던 영국이나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적 결단을 강조하면서 결국 전체주의로 흘렀던 독일과는 다른 모습의 프랑스

11) 경제위원회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속에서 명시되었고, 1984년 사회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위원회로 개편되고, 2008년에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다시 확대변경되었다.

민주주의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국민주권의 전환과 정치신학

주권자로서 국민(nation)과 그것을 구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을 만들기 위한 공화국의 다양한 장치들, 의회주의의 확립과 이에 동반된 다양한 대표체계의 확립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 즉 대표를 통한 주권의 구성 등등 일련의 사유들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확립된 국민국가로서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프랑스 혁명 이래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세의 왕이 인간으로서 자연적 신체와 공공선을 구현하는 정치적 신체를 결합하여 체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대적 정치체의 등장은 자연적 신체로서 왕의 소멸과 비인격적 권력의 등장을 의미한다. 과거 전통적 권력이 초월적인 것, 즉 종교적인 것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영속성을 부여받았던 권력이라면, 근대적 권력은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근거와 정당성의 기원을 부여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자연권과 계약론의 전통을 통해 근대 국가권력은 개인의 권리 양도와 그들의 동의에 기반한다. 실질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적 의미는 주권이 곧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 - 국민주권 개념 역시 그로부터 유추된다 -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인민주권론은 근대 정치체의 근원이자 정당성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결국 정치신학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슈미트의 말처럼 “근대 국가이론의 중요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개념”인 것이다(슈미트 1988, 42). 우선 슈미트가 정치신학과 관련하여 주목한 것은 주권 개념이다. 슈미트는 루소의 주권개념이 신학개념의 정치화를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하나의 거대한 인격으로 신화화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근대 주권 개념의 신화화에 앞서 진행되어야 했던 것은 중세 신성주권의 세속화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 세속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주권의 세속화, 즉 신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군주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국민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물론 계몽주의 시기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의 이성에 기반한 사회에 대한 정치철학적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세속화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프랑스혁명 시기였다. 교회 재산의 국유화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형식의 세속화라는 삶의 세속화가 진행되었고,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시공간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백인호 2013).¹²⁾ 혁명은 기독교를 분명 공적 영역에서 몰아냈고, 종교는 사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신화’는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정치신학으로 등장하였다. 우선 프랑스 혁명은 주권자로서 “새로운 인민”을 창조해내고자 기획하였다(Ozouf 1989). 그것은 새로운 주권자로 등장한 ‘인민’을 구성하는 “재탄생된 인간(l’homme régénéré)” - 교회로부터 벗어나 세속화된 새로운 인간 - 이었고, 그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주권자 ‘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급속한 세속화 작업과 동시에 새로운 주권자로 등장한 인민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동반하였다. ‘최고존재의 축제’에서 보여지는 시민종교는 공화주의자 루소가 이미 분명하게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과제로서 애국심을 위한 시민적 믿음이 필요하였다. 미슐레(1846)가 “프랑스혁명은 교회자체였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 왕 혹은 교회의 신성함을 대신하는 인민의 신성함, 교회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인민의 목소리, 순교자 예수를 대신하는 혁명의 희생자들, 교회의 제단을 대신하는 죄수대, 성배주를 대신하는 눈물을 발견하였다는 의미였다(미슐레 2021).¹³⁾ 미슐레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초

12) 프랑스혁명 시기 강력한 비기독교화 정책들, 예를 들어 탈기독교화를 위한 시공간의 새로운 구성으로 종교적 상징의 파괴와 새로운 거리 및 광장의 세속적 명칭 부여, 혁명력을 통한 세속적 시간의 재구성, 교육에서 탈 기독교화 등등 작업이 진행되었다.

13) 뒤르케임 역시 종교에 대해 서술한 책에서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신성화’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조국, 자유, 이성”이 성스러운 사물로 변화되었고, 그 자

월적 존재로서 인민이 탄생했음을 보았다. 미슐레에게 인민은 새로운 종교적 교주이자 조국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정신사 속에서 인민의 새로운 우애 정신이 등극하도록 만든 계기였다. 미슐레는 군주제의 가치와 단절을 확정하면서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상을 민주주의적 인민과 정치적 자유에서 찾고자 하였다.

세속화를 통해 용어들이 전환되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보존되고 있는 표상 시스템의 전개 속에서 정치신학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본질적인 것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그것은 시에예스가 혁명시기 “국민은 우선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의 기원이다. 국민의 의지는 항상 합법적이며 법률 그 자체다”라고 확정하면서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던 사실로부터 출발한다(Sieyès 1989). 시에예스는 헌법이 근본적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일상적인 권력, 즉 구성된 권력(*pouvoir constitué*)의 작업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의 작업임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에예스는 세 종류의 권력을 구분하였다. 우선 ‘구성된 권력’은 법률의 제정 및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일상적인 입법부 및 행정부를 의미하며, 이 ‘구성된 권력’을 발생시키는 권력이 바로 ‘헌법제정권력’이다.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출현하며 한시적인 권력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권력으로 ‘임명 권력(*pouvoir commettant*)’이 있으며,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통해 실행된다. 시에예스는 “인민은 스스로 유일한 임명 권력을 행사하며, 그것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될 사람들을 선택하고 위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 권리에 의해 공적 기관을 구성하게 한다”라고 말한다(Sieyès 1789c, 36).

결국 주권자 인민과 헌법제정권력으로서 인민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다른 한편

체가 “교리, 상징, 제단, 축제일들을 가지는 형태”로 등장하였고, ‘이성과 최고존재에 대한 숭배’는 대중들의 충동적인 열망들에 일종의 공적인 만족감을 주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뒤르케임 1992, 306).

으로 신격화된 인민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동반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이다. 칼 슈미트는 시에에스를 참조하여 인민(people)의 존재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헌법 이전에,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인민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로서의 인민, 둘째는 “헌법 안에” 존재하는 인민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규범과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거나 인민발안제도를 통해 의사를 표하는 인민, 셋째는 “헌정체제와 비견되는” 혹은 “헌법 옆에 있는” 인민으로서 제도적인 틀 바깥에서 여론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비정형화된 인민을 지칭한다(Schmitt 2008, 268-271). 슈미트는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민의 지위가 “만물의 원인, 목적, 발단, 귀결점인 신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근대 국가에서의 인민을 신격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슈미트 1988, 52). 헌법 제정권력으로서 주권자 인민은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헌법 이전에 그리고 헌법 제정 이후에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다.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는 언명과 함께 그 “예외 상황이란 신학에서 기적에 비유할만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슈미트 1988, 42). 이는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비판하는 자유주의 헌법학, 즉 근대의 법치국가의 이념이 “기적을 추방”하고 예외를 거부했음을 주장한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한 나찌의 등장의 이론적 흐름을 슈미트의 사유 속에서 읽어볼 수 있다.

칼 슈미트는 초월적 존재로서 주권자를 상정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질서 전체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규범의 체계 바깥에 있지만 규범의 근거를 형성하는 주권개념을 법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슈미트 2019, 12-13).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주권자 국민의 규범적 정당성의 선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을 포함한 정치체의 기원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함이라는 전제가 신학적 영향 혹은 침투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결국 그러한 정당함을 갖추기 위한 의지적 노력이

국민의 단일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테러를 만들어내는 전체주의 사회의 구성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미 1789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기에 보여졌던 ‘대표의 절대화’, 즉 인민과 대표의 일치가 발생하였다. 인민주권을 절대화하면서 동시에 인민과 지도자 즉, 로베스피에르와의 동일시가 발생하면서 대표의 절대화가 발생한 것이다. 시에에스의 권력에 대한 구분을 통해 주권자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지만, 일상적 상황에서는 구성된 권력의 통치, 즉 주권자 인민을 대표하는 권력의 절대화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였다(Gauchet 1995). 이에 대한 반대항이 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하였던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이었다. 인민이 아니라 사회 속에 흩어져 있는 ‘이성’을 의회라는 합리적 집단에 의해 발견하고 구성해 내어 주권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혁명 이후 19세기의 경험, 즉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긴장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또한 결합시켜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속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적 시민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공화주의적 시민들의 연대를 통한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였다. 공화국은 공화주의적 교육을 통해 형성된 시민에서 출발하여 시민들의 연대에 의한 공동체의 구성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의 총합으로서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국가권력을 구성하지만 동시에 국가는 사회로부터의 표상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집합적 의식 내지는 이성을 결집하는 것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위를 결정한다. 분명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한 국민의 구성과 일반의지의 형성 그리고 그것의 국가권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특정한 영역의 절대화나 신성화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대한 천명은 분명 국민의 일반의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주권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

14)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특수성으로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간극, 특히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과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물신화의 결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살펴본 권형기(2022)의 논의는 프랑스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와 관계에 좋은 대비를 찾을 수 있다.

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일반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프랑스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난제였다. 제3공화국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통해 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을 통해 공화국에 합당한 시민을 만들어내고자 하였고, 지속적인 세속화 작업 - 1905년 라이시테 법이 그 정점이다 - 을 통해 교육과 정치 등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공화주의적 시민은 공화국의 근간이었고, 이들은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공화주의적 시민에 의한 의회의 구성과 의회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표의 과정을 통한 국민의 일반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기조(Guizot)의 ‘이성의 주권’의 민주주의적 시도였다. 의회를 통한 대표의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적 과정과 다양한 이익 대표체계의 확립을 통해 의회가 절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가 작동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대표를 통한 주권’의 확립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제3공화국이 동시에 공화국의 신성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전후에 축제의 조직화, 프랑스 혁명사의 정립과 재해석 등등의 작업을 통해 공화국 프랑스와 프랑스 혁명을 신성화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사 해석에서 혁명의 정통성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의 결과는 당통(Danton)이었다. 가장 급진적이었던 로베스피에르나 자유주의적 경향이 브리소도 아닌 부패한(?) 당통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은 그가 탈기독교화와 세속화를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세속화된 공화국에 대한 강조와 지속적인 세속화 작업을 통해 공화국은 다시 신성함을 획득하였다. 공화국의 신성화에 의한 공화국의 존재 자체의 수용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세기의 전환기에 대표적인 세 명의 프랑스 사회주의자, 게드(J. Guesde), 바이양(E. Vaillant), 조레스(J. Jaurès) 모두 공화주의자들이었고, 공화국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체제로서 남아 있었다(Sadoun 1993, 25-37). 그들에게 공화국,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였다.

인민은 주권자로서 존재한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개인, 계급, 집

단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결정된 형태를 부여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인민의 ‘단일성’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적 원칙과 실제적인 현실로서 인민의 ‘다원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대표의 원칙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그 간극을 극복 혹은 적어도 좁혀보려는 현실정치의 노력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역사일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징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사이의 간극의 존재를 강조하였던 르포르(C. Lefort)의 사유를 접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토대의 확실성, 역사법칙에 대해 열려 있으며, 권력을 체화할 수도, 전유할 수 없는 하나의 공백의 장소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르포르 2016). 전체주의 사회는 이러한 비결정성을 거부하고 권력의 장소를 특정한 계급과 집단을 표상하는 이들이 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과정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권력기구들에 의한 독점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주권자로서 인민/국민의 신성화와 공화국의 신성화가 진행되었지만, 그것을 표상하는 권력의 장치들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V. 글을 맺으며

세계사적 혁명으로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보편주의적 원칙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가 구성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민국가 틀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정치적 형태를 갖추는가와 특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였다. 프랑스 혁명 과정을 통해 마키아벨리와 대서양 전통의 공화주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공화국의 모습 그리고 주권을 둘러싼 풍부한 논의를 끌어냈던 것이 프랑스 공화주의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역사이기도 하였다. ‘사회적인 것’이 19세기 내내 프랑스 정치를 흔들었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행한 것이 제3공화국 프랑스였다.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을 통해 공동체 속의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들 간의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화주의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 제3공화국 공화주의의 목표였다. 또한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 대표로 구성된 의회와 의회주의의 다양한 원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의회주의는 이미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사회적 상태로서 민주주의 그리고 혁명 이해,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에 의해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갖고자 하는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부활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19세기를 거치면서 또한 프랑스 공화주의의 형성을 통하여 ‘근대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 특히 근대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국가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중세 교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세속화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으로서 주권자인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과 더불어 그것의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구성은 권력의 일탈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브리엘 타르드 저. 이상률 역. 2012a. 『여론과 군중』. 서울: 지도리.
- _____. 이상률 역. 2012b. 『모방의 법칙』. 서울: 문예출판사.
- 구스타브 르 봉 저. 이상돈 역. 2005. 『군중심리』. 서울: 간디서원.
- 권형기. 2022.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재고찰”.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1-57.
- 백인호. 2013. “18세기는 세속화의 결정적 시기였는가?: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김응중, 민유기 외. 『프랑스의 종교와 세속화의 역사』. 대전: 충남대출판문화원.
- 비에이라 & 런시먼 저. 노시내 역. 2020. 『대표: 역사, 논리,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손영우. 2018. 『사회적 대화』. 서울: 이매진.
- 세르쥬 모스코비치 저. 이상률 역. 1996. 『군중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 에밀 뒤르케임 저. 노치준, 민혜숙 역.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 에밀 뒤르케임 저. 권기돈 역. 1998.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서울: 새물결.
- 자크 동즐로 저. 주형일 역. 2005. 『사회보장의 발명』. 서울: 동문선.
- 쥘 미슐레 저. 조한욱 역. 2021. 『미슐레의 민중』. 서울: 교유서가.
- 칼 슈미트 저. 김효전 역. 1988. 『정치신학』. 서울: 법문사.
- 칼 슈미트 저. 김효전 역. 2019. “헌법학”. 『독일헌법학의 원천』. 서울: 산지니.
- 클로드 르포르 저. 홍태영 역. 2016.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서울: 그린비.
- 홍태영. 2021.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한국정치연구』. 30집 2호, 1-29.
- Aerts, R. & van den Berg, J. Th. J. 2019.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Introduction”. Aerts, R. ed.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Palgrave.
- Berstein, Serge. 1992. “La politique sociale des Républicains”. S. Berstein et O.

- Rudelle. dir. *Le modèle républicain*. Paris: puf.
- Berstein, Serge. 1999. “Le modèle républicain: une culture politique syncrétique”. S. Berstein. dir. *Les cultures politiques en France*. Paris: Seuil.
- Blais, Marie-Claude. 2007. *La solidarité*. Paris: Gallimard.
- Bouchet, T. 2016. “French Parliamentary Discourse, 1789-1914”, in Ihalainen, P. Ilie, C. & Palonen, K. ed. *Parliament and Parliamentarism. A comparative history of a european concept*. New York: Berghahn.
- Bourgeois, Léon. 1912. *Solidarité*. 7e éd. Paris: Armand Colin.
- Chatriot, Alain. 2002. *La démocratie sociale à la française*. Paris: La découverte.
- Darriulat, Philippe. 2001. *Les patriotes*. Paris: Seuil.
- Déloye, Y. 1994. *Ecole et citoyenneté. L'individualisme républicain de Jules Ferry à Vichy: controverses*. Paris: Presses de la FNSP.
- Dreyfus, Françoise. 2000. *L'invention de la bureaucratie*. Paris: La découverte.
- Durkheim, E. 1886. “Les études de science sociale.” in *La science sociale et l'action* (1987). Paris: PUF.
- _____. 1888. “Cours de science sociale. Leçon d'ouverture.” in *La science sociale et l'action* (1987). Paris: PUF.
- _____. 1899. “Une révision de l'idée socialiste.” *Textes*. Vol. III. présentés par V. Karady. Paris: Minuit.
- _____. 1900~1905? “L'Etat.” in *Textes*. Vol. III, présentés par V. Karady. Paris: Minuit.
- _____. 1909. “Sociologie et science sociale.” in *Textes*. Vol. III, présentés par V. Karady. Paris: Minuit.
- _____. 1996.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초판: 1893). Paris: PUF.
- Grévy, Jérôme. 1998. *La République des opportunistes. 1870-1885*. Paris: Perrin.
-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économie sociale. Idées, pratiques et imaginaires coopératifs et mutualistes dans la France du XIXe siècle*. Paris: Economica.
- Garrigues, J. & Anceau, E. 2016. “Discussing the First Age of French

- Parliamentarism(1789-1914)”. in Ihalainen, P. Ilie, C. & Palonen, K. ed. *Parliament and Parliamentarism. A comparative history of a european concept*. New York: Berghahn.
- Gauchet, Marcel. 1995. *La révolution des pouvoirs, La souveraineté, le peuple et la représentation 1789~1799*. Paris: Gallimard.
- Hudemann, Rainer. 1998. “Les Groupes parlementaires dans les stades de formation du parlementarisme français au XIXe siècle”. S. Berstein et P. Milza. dir. *Axes et méthodes de l'histoire politique*. Paris: puf. 319-333.
- Ihalainen, P. 2016. “European Parliamentary Experiences from a Conceptual Historicial Prsperspective”, in Ihalainen, P. Ilie, C. & Palonen, K. ed. 2016. *Parliament and Parliamentarism. A comparative history of a european concept*. New York: Berghahn.
- Lalouette, Jacqueline. 2002. *La république anticléricale XIXe-XXe siècles*. Paris: puf.
- Murard, L. et Zylberman, P. 1996. *L'hygiène dans la République. La santé publique en France ou l'utopie contrariée 1870~1918*. Paris: Fayard.
- Ozouf, Mona. 1989. *L'homme régénéré*. Paris: Gallimard.
- Pitkin, Hanna. 1972.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L.A.: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 Raithel, Th. 2019. “‘A Bad Parliamentarism’: Normative Expectations and Criticism of Parliamentarism in the Weimar Reichstag”, in Aerts, R. ed.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London: Palgrave.
- Redor, Marie-Joëlle. 1995. “‘C’est la faute à Rousseau...’ Les juristes contre les parlementaires sous la IIIe République”. *Politix*. Vol. 8, No. 32.
- Rosanvallon, P. 1985. *Le Moment Guizot*. Paris: Gallimard.
- _____. 1992. *Le sacre du citoyen, Histoire du suffrage universel en France*. Paris: Gallimard.
- _____. 1998. *Le peuple introuvable. Histoire de la représentation démocratique en France*. Paris: Gallimard.

- _____. 2000. *La démocratie inachevée. Histoire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en France*. Paris: Gallimard.
- _____. 2004. *Le Modèle politique français. La société civile contre le jacobinism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 Roussellier, Nicolas. 1992. “La contestation du modèle républicain dans les années 30: La réforme de l’Etat”. S. Berstein et O. Rudelle. dir. *Le modèle républicain*. Paris: puf.
- Sadoun, Marc. 1993. *De la démocratie française*. Paris: Gallimard.
- Schmitt, Carl. 2008. *Constitutional Theory*. translated et edited by J. Seitzer. Duke University Press.
- Sieyès, E. 1789a. “Vues sur les moyens d’exécution dont les représentants de la France pourront disposer en 1789.” *Oeuvres des Sieyès*. Tome I. Notes liminaires par Marcel Dorigny. Paris: EDHIS. 1989.
- _____. 1789b. “Quelques idées de Constitution applicables à la Ville de Paris. En juillet 1789.” *Oeuvres des Sieyès*. Tome II. Versaille: Baudouin.
- _____. 1789c. “Preliminaire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 Reconnaissance et exposition raisonnée de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Oeuvres des Sieyès*. Tome II. Paris: Baudouin.
- _____. 1989. *Qu’est-ce que le tiers Etat?* Paris: PUF.
- te Velde, H. 2019. “Between National Character and an International Model: Parliame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Aerts, R. ed.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London: Palgrave.

Formation of French Republican Model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Hong, Taiyou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France, which started with the 1789 French Revolution, i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ment of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In the 19th century, french democracy is formed, which is based on individuals, not the God, constitution of nation and citizen,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democracy as a core and mediating process. The history of democracy means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based national sovereignty as that of secular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a politico-theological problematic.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examining the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This article is composed of examination of the image of republican citizen and civic education(ch. II), the solidarism as solution of ‘the social’, which is the core of republic(ch. III), and lastly, politico-theological comprehension of modern nation-state to seize the character of republican community(ch. IV).

Key Words | Republican Model, Democracy, Politico-theology, Solidarism, Sovereignty

『현대정치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제 3장 현대정치연구 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s://sips.jams.or.kr/>)나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한다.
2. 현대정치연구 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현대정치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현대정치연구 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봄호-2월 15일, 여름호-6월 15일, 겨울호-10월 15일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를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 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 소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게재료 300,000원을 부담한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대정치연구는 각 권호에 수록된 최종 출판물에 대해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자 본인이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혹은 리포지터리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4. 원고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1. 현대정치연구는 년 3회 발간하며, 봄호는 4월 30일, 여름호는 8월 31,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접수는 봄호는 2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겨울호는 10월 15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후 게재	
가	가	게재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1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저자는 1 주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현대정치연구 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 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현대정치연구는 심사와 출간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18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4. 기타 사항

-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 (6) 출처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처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처 표시 요령 〉

1. 출처는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국문의 경우, 저자가 2명인 경우 “.”을, 3명 이상인 경우 “외”를 활용하고, 영문의 경우 2명은 “and”를, 3명이 이상인 경우는 “et al.”을 사용하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한배호 . 어수영 1991), (한배호 외 1995), (Almond and Verba 1963) (Verba et al. 1995) ...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하되, 한국 문헌을 외국 문헌 앞에 두고, 한국 문헌은 가나다 순서를, 외국 문헌은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예: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Lee 196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5)혹은 ...(신동아 93/5, 233).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 인터넷 자료 인용 〉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998.10.20>. (1/10 Bar).

〈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출전 인용 규칙을 따르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 허생. 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이창동. 김명희. 허윤기.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 외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호박사.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쪽.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봄), 10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 1(Winter),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
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
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르르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5.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편집위원회(705-8616, polsci@sogang.ac.kr)로 문의한다.

현대정치연구 저술 윤리강령

1. 목적

- (1) 현대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와 저자들 간 특수관계에 의한 연구논문 출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등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 (4)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4. 제재방식

-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부록1: 현대정치연구소 학술활동 (2015년 3월~2021년 7월)

1. 2015년 3월 제 3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 2015년 03월 27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

가. 발표 :

- 여지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복지균열의 부상에 관한 연구-무상급식부터 경제민주화담론까지의 시기 (2009-2012)를 중심으로
- 김태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균등이념과 제헌헌법
- 김성모(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사회적 자본이 사회신포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트워크 자본을 중심으로
- 정성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소고
- 이태규(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당- 국가 체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위상 변화
- 선민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중국식 민주에서의 사회집단의 역할 고찰’ - 위로부터의 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저항을 중심으로

나. 토론 :

-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심은정(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정결(서

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유동(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

- 전재호(서강대), 이민자(서울디지털 대학교)

2.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6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서구중심주의와 역사교육의 공과 (서강대학교 김민정)

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13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중국학술의 주체성과 유럽중심론의 비판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류칭)

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후원 “정당정치 의 변화 왜 어디로” 저자와의 대화

·일자 : 2015년 5월 28일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

가.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 대안으로서의 유권자 정당

강신구(아주대) :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중정당론의 적실성에 대하여

최준영(인하대) : 대통령제 정당체제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채진원(경희대)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 약화론’과 네트워크정당모델

서정건(경희대) : 후보 선출과 정당 조직의 연계 및 변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현우(서강대) : 미국 정당의 양극화 평가 - 약화(decline)인가 적응(adaptation)인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 정당정치의 혁신에 대한 시론 -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성호(경희대) : 정당 내 정파(faction) 문제와 정치 양극화 - 탈산업시대 정당의 위협요소와 극복 방향

나. 사회 :

김민전(경희대)

5. 현대정치연구소 · SSK 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 공동주최 세미나

·일자 : 2015년 6월 5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A호

·내용 :

가. 발표 :

- 엄한진(한림대) :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 김은실(성신여대) : “유럽중심주의와 러시아 정체성 논쟁”
- 박은홍(성공회대) : “동남아시아에서 반(反)서구중심주의 ‘아시아적 가치’의 양면성”
- 조경란(연세대) :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의 대립과 충돌-역사적 회고와 전망”
- 김광수(한국외국어대) :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역사적 맥락화”
- 김은중(서울대) :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본 권력의 식민성, 자본주의 세계경제, 유럽중심주의”
- 이지은(한국외국어대) : “서구와 탈서구, 근대와 탈근대-인도 역사학

의 여정”

- 고희탁(서강대)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근현대 일본의 동화전략과 역
전전략의 이중주”

나. 토론 : 장경섭(서울대), 김태연(서울대), 이한우(서강대), 정수복(사회학
자/작가), 임기대(한국외국어대), 박정원(경희대), 김진영(서강대), 이새
봄(연세대)

다. 전경옥(숙명여대), 장인성(서울대)

6.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정부연구단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일자 : 2015년 6월 5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

가. 발표 :

- Edgar Grande(LMU MUNICH, 뮌헨대학교) : “Glob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Conflict in Western Europe“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16시

·장소 : 다산관 603호

·내용 :

- 한국 심리학계의 탈서구중심적 연구동향: 유학심리학의 연구를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 조궁호)

- ‘우리성’과 ‘쪽’의 심리학: 한국적 세계관에 바탕한 심리학의 한 모형
(한규석) (전남대학교 한규석)

8.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 16시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발표 :

- ‘가족개인’과 한국의 계층질서: 소소유자의 존재와 의식(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 탈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사회학적 모색(이영찬) (계명대학교 이영찬)

9.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4호

·발표 : 제국의 역사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선대학교 공진성)

10.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보편주의적 한국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 속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북대학교 조영철)

11.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사회기반연구(SSK) 좋은정부 연구단 공동 주최 해외학자 초청 강연

·일자 : 2015년 10월 16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호

·내용 :

가. 발표 :

- Sverker C. Jagers(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othenburg &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 Ecological Citizens - Realism or Utopia?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values for generating green behaviour and consumption

12.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정치연구소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해외학자 초청 강연회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5시 30분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유교민주주의의 가치: 도구적 가치로부터 내재적 가치로” (홍콩시립 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김성문)

1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발표 : “패치워크문명론” (동국대학교 황태연)

1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자 : 2015년 11월 27일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 가. 발표 :
이수상(부산대) : 언어 텍스트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
 -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15.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 : 2015년 12월 4일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가. 발표 :

이남영(세종대)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는가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16.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유럽중심주의와 역사학 비판 - 국내 서양사학계의 유럽중심주의 논의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김택현)

1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발표 : 소농사회론에서 유교적 근대론으로 (성균관대학교 미야지마 히로시)

18. 2016년 2월 제 4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 2016년 2월 24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603호

·내용 :

가. 발표 :

- 추정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5.24조치의 정책적 효용

성에 대한 연구 -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역 변화를 중심으로

- 황하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 1987년 13대 대선을 중심으로

이석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전략과 정치적 정당성: 역전적 동화주의 분석 -정관응의 『성세위언』을 중심으로

양해만(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북한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경제민주화는 어떤 민주화인가?

나. 토론:

김태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유재승(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호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전재호(서강대), 한영빈(서강대)

19.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한국정치사상학회 3월 월례학술회의

·일시 : 2016년 3월 19일(토) 15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101호

·내용 : “존 롤스 정치이론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 (국민대학교 이종은)

20.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3시 00분
- 장소 :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 내용 : “What is Good Government in Asia”

2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0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 내용 : “Dynamic lobbying: Empirical evidence from foreign lobbying on free trade agreement”
- 발표 : 유혜영 교수 (Vanderbilt University)

2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17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501호
- 내용 :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deology and Taxation on Welfare Voting”(정부 이데올로기와 조세수준이 복지투표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신정섭 교수 (한양대학교)

23.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Rethinking “Capitalism” and Long-Run Paths of Development in East Asia”
- 발표 : 김원익 교수 (Louisiana State University)

24.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 발표 : 박선경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5.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선거제도,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결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양대 정당의 미래 / 미국 밖에서의 포퓰리즘.”
- 발표 : 이현우 교수 (서강대학교), 하상웅 교수 (서강대학교)

26.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확대월례 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2017 촛불집회: 누가 그리고 왜”
- 발표 : 이현우, 서복경, 이지호 교수(이상 서강대학교)
- 토론 : 장우영(대구카톨릭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하상웅(서강대학교), 김욱(배재대학교)

27.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특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
- 발표 : 김종범(대전대), 전상진(서강대), 신진욱(중앙대), 도모연(영남대), 이현출(건국대), 장우영(대구카톨릭대),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이상 서강대)

- 토론 : 전재호(서강대), 김윤철(경희대), 박명호(동국대), 강신구(아주대), 황아란(부산대), 이재묵(한국외대)

28.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월례세미나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저자와의 대화: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묻다.”
-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토론 : 전진영(입조처), 강신구(아주대), 서정건(경희대), 안병진(경희대), 임성호(경희대), 채진원(경희대), 최준영(인하대)

29.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1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3시 2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한국 정치과정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 발표 : 박선경(인천대), 강신구(아주대), 조영호(서강대), 강원택(서울대), 장훈(중앙대), 이지호(서강대), 서복경(서강대)
- 토론 : 하상응(서강대), 허석재(입조처), 임성호(경희대)
- 사회 : 이현우(서강대), 정진민(명지대)

30. 2019 현대정치연구소 콜로키움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6시 2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미디어생태계 변화와 시사평론의 세계”
- 발표 : 장희영 시사평론가

31. 한국 선거학회-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1년 여름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15시 30분
- 장소 : 온라인(Zoom)
- 내용 : 코로나 시대 정당 및 선거정치
- 발표 : 박정훈(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태심(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황인정(성균관대 SSK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
- 토론 : 신재혁(고려대학교), 장한일(국민대학교), 강우창(고려대학교)
- 사회 : 이현우(서강대학교)

32. 2021년 7월 월례발표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 장소 : 온라인(Zoom)
- 내용 : 박근혜 탄핵과 여성정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연구
- 발표 :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
- 토론 : 오세제(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사회 : 이현우(서강대학교)

33. 2023년 선거학회-현대정치연구소 공동주최 4월 월례 세미나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1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604호
- 내용 : Dynamics of Candlelight Protestors: The Effects of Voting Patterns and The Election's Temporal Proximity on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국회 내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년을 중심으로
- 발표 : 차현진(고려대학교), 정다빈(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 : 도묘연(계명대학교), 박범섭(송실대학교)
- 사회 : 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강우진(경북대)	김면희(한국외대)
박범섭(영국레딩대)	박선경(인천대)
박영득(충남대)	송병권(서강대)
우병원(한국외대)	이선우(전북대)
이현우(서강대)	조영호(서강대)
최일성(한서대)	하상응(서강대)
한경준(테네시대)	홍지연(홍콩과기대)

현대정치연구 2023년 봄호 (제16권 제1호)

인 쇄 | 2023년 04월 25일
발 행 | 2023년 04월 30일

발행인 | 이현우
편집인 | 조영호
편 집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펴낸곳 | 도서출판 (주)북크리 (bookcreer@naver.com)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Sogang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South Korea
TEL | (+82)2-705-8616 FAX | (+82)2-705-8617
E-mail | polsci@sogang.ac.kr

ISSN 1976-9466